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석사학위논문

한국 (반)지하 주거의 사회적 표상과
거주자의 정체성 연구

2013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장 진 범

한국 (반)지하 주거의 사회적 표상과 거주자의 정체성 연구

지도교수 정 근 식

이 논문을 사회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 년 10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장 진 범

장 진 범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 년 12 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국문초록

한때 전체 서울시 주택의 40% 가까이를 보유하던 무허가정착지가 재개발과 함께 대부분 해체되면서, 한국 대도시에는 이른바 ‘슬럼’으로 상징되는 대규모 ‘주거빈곤’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통계청>의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서울 일반가구 3,309,890가구의 약 11%에 달하는 355,427가구(총 845,493명)가 (반)지하에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반)지하는 1980년대까지의 무허가정착지를 대체하는 서울·수도권의 대표적인 빈민 주거지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까지 한국에서 (반)지하는 그 규모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는 (반)지하라는 주거형태 특유의 비가시성, 그리고 학문적 연구 이전에 (반)지하에 관한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최근이야 이루어진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반)지하 주거형태를 주거빈곤의 관점에서 문제화하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진행된 바 있다. 그리고 <통계청>의 『2005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반)지하에 관한 최초의 공식 통계가 집계된 이후 관련 통계도 조금씩 축적되어 가고 있다. 아울러 2012년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서울신문』의 신춘문에 당선작이 모두 (반)지하를 배경이나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반)지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반)지하 주거형태의 형성 과정 및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름대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반)지하 및 거주자에 관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반)지하 거주자들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지하는 애초에 1970년대 들어 등장한 새로운 단독주택의 ‘보일러실’ 용도로, 그리고 1968년 이후 강화된 안보적 조치의 하나로 사회적으로 강제된 ‘대피소’ 용도로 출현하였다. 이처럼 본래는 비주거용이었던 (반)지하는, 단독주택이 ‘셋집’이라는 주거형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세대’를 위한 형식의 주택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전용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 기존의 자가주택 건설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임대주택건설 촉진의 일환으로 ‘다세대 거주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제도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반)

지하는 공식적인 주거형태로 등장하였다. 그러던 와중 합동재개발 정책으로 저렴주택의 재고가 급격히 축소되고 ‘체제위기로 비화될 정도로 심각한 주택난이 벌어지자,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세대주택에 이어 ‘다가구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와 함께 (반)지하 역시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한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로 밝혀진 바, 2005년 현재 서울 총 가구의 무려 11%가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까지 서울 도시빈민의 가장 중요한 거처였던 무허가정착지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때 (반)지하는 오늘날 도시빈민들이 거주하는 가장 중요한 거처로 간주할 수 있으며, 최근 통계들에서 밝혀진 (반)지하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상태도 이런 추정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둘째, (반)지하에 관한 최초의 신문 보도가 나온 이래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문에 실린 (반)지하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반)지하에 관한 지배적 표상은 ‘열악한 주거’, ‘고립과 유폐, 절연의 공간, 그리고 ‘빈곤과 범죄가 만나는 위험한 공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인 바, 따라서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표상은 ‘낙인’의 성격을 강하게 띠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1990년을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표상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점으로 지목할 수 있는데, 이 해 (반)지하에 관한 기사가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주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표상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 10여 년간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으며, (반)지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표상이 1990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서울에서 유례없는 수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집중되었던 2001년이 되어서였다. 2001년 이후에는 (반)지하가 지속적으로 문제화되어, (반)지하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 그리고 공식적인 통계가 등장하게 된다. 아울러 이른바 ‘88만원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세대의 주된 거처로 거론되는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의 하나로 (반)지하가 언급되고, 그와 상관적으로 최근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이 공간에 대한 문화적 형상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표상은 더욱 확대·확산되었는데, 이 역시 위에서 언급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렇듯 (반)지하가 지닌 낙인적 성격은 (반)지하 거주자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여러 연구들이 밝힌 것처럼 주거 또는 단적으로 ‘집’(home)

은 거주자들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반)지하라는 주거형태에 결부된 낙인은 그곳에 사는 거주자들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지하 거주자들이 이런 낙인을 그저 수동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반)지하 거주자들은 일찍이 고프만이 분석한 것처럼 낙인 또는 ‘손상된 정체성’(spoiled identity)에 대응하고 관리하며 재해석하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자존감과 개인적 정체성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이 낙인을 자원으로 전환시키기도 한다. 심층면접을 통해 발견한 (반)지하 거주자들의 대응 전략은, ‘일시화 전략’, ‘거리두기 전략’, ‘신분위장 전략’, ‘무시 전략’, ‘노출 전략’ 등 크게 5가지 정도로 나타났다. 이런 전략의 차이는 거주자가 현재 살고 있는 (반)지하의 주거환경, 기존의 주거 경험·이력, 그리고 서사적 자원 등의 차이에 따른 것이었다.

넷째, 본 연구가 조사대상으로 삼은 (반)지하 거주자들은 흔히 표상되듯 값싼 주거지를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유랑민’으로 환원할 수 없었다. 물론 그들이 (반)지하에 살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주거비 절감이라는 것, 그리고 대개 세입자 중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이들로써 (반)지하 거주자들이 ‘비자발적 이주의 압력’에 시달리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반)지하 거주자들은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주하였고, 이는 그들이 이주와 정주의 결정에서 ‘입지’와 ‘관계망’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떤 의미에서 (반)지하 거주자들은 (반)지하 특유의 열악한 생활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지역 특유의 입지와 관계망, 곧 모종의 ‘장소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게다가 (반)지하의 주거환경은 주택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반)지하 하면 흔히 떠올리는 채광과 습기, 그리고 수해 위험은 (반)지하라는 주거형태에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반)지하 거주자들이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설사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1980년대 이후 형성된 사회적 담론 안에서 (반)지하 주거형태가 획득한 ‘오명’으로 말미암아, (반)지하라는 주거형태는 대개의 거주자들에게 부정적으로 경험되었고, 이는 그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반)지하를 최선의 경우라도 ‘임시거처’로 의미화했다.

이렇듯 (반)지하에 거주하는 것은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때 유의할 것은, (반)지하 거주 경험에 고유한 이런 모순을 지워버리고, 이들이 지닌 지역 주

민으로서의 정체성, 또는 해당 지역의 '장소성'에 대한 고려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반)지하의 문제에 접근하려면, 그 거주자들이 (반)지하라는 주거형태를 왜 '선택'했고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더 깊이 천착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주요어: (반)지하, 반지하, 지하셋방, 지하방, 지하주거, 주거빈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낙인, 정체성

학번: 2010-22982

목 차

1장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자원	4
1) 선행연구 검토	4
(1) 주거빈곤 개념의 가능조건 1	
: ‘자본주의적 공간 재편’에서 ‘주거 체제’까지	4
(2) 주거빈곤 개념의 가능조건 2	
: 신빈곤, 사회적 배제, 그리고 ‘주거를 통한 배제’	7
2) 이론적 자원	12
(1) 빈곤의 사회적 표상에 관한 연구	12
(2) 주거, 정체성, 그리고 낙인	15
3.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19
1) 연구 대상	19
2) 연구 방법	20
(1) 담론 분석	20
(2) 심층면접과 현상학적 분석방법	20
2장 (반)지하 주거형태의 형성 과정과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22
1. (반)지하 확대의 사회적.기술적.제도적 계기	22
1) (반)지하의 등장: ‘보일러실’이거나 ‘대피소’이거나	22
2) 단독주택의 ‘내부 분화’와 (반)지하의 주거 전용	24
3)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도입과 (반)지하 주거형태의 공식화	26
2. (반)지하 주거의 실태와 거주자의 특성	31
1) (반)지하의 규모와 전국적 분포	31
2) (반)지하 밀집지역의 분포와 그 형성 과정	32
3) (반)지하 거주자의 인구적 특성	34
4) (반)지하 가구의 주거실태	36

3장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표상의 형성과 변화	38
1. 주거빈곤의 사회적 표상 변화: ‘문간방’, ‘달동네’, 그리고 ‘(반)지하’ ...	38
2.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표상의 전반적 추이	42
3.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표상의 특성	45
1) (반)지하: 열악한 주거	45
(1) 수해 보도와 ‘낮은 곳’으로서의 (반)지하	45
(2)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부정적 평판과 (반)지하의 가중낙인	48
(3) ‘최저주거기준’ 개념의 등장과 (반)지하의 새로운 문제화	52
2) (반)지하: ‘고립’과 ‘유폐’, ‘절연’이라는 표상	55
3) (반)지하: 빈곤과 범죄가 만나는 위험한 공간	59
4. 소결: (반)지하와 ‘자격박탈의 빈곤’(la pauvreté disqualifiante)	64
4장 (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경험과 정체성	69
1. (반)지하라는 낙인에 대한 거주자들의 대응 전략	70
1) ‘일시화’ 전략을 통한 낙인의 회피	70
2) 거리두기(distancing) 전략을 통한 낙인의 모면	74
(1) 주거형태를 나누기	74
(2) 거주자들을 나누기	77
3) 신분위장(passing) 전략	79
4) 무시(ignoring) 전략	82
5) 노출(exposing) 전략	83
2. (반)지하 거주자와 주민 정체성	85
1) 중·장년 거주자와 주민 정체성	85
2) 청년 거주자와 주민 정체성	89
5장 결론	92
참고문헌	96
Abstract	104

표 목 차

[표 1]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21
[표 2] 2005년과 2010년 사이 (반)지하 가구의 전국적 분포 및 증감	32
[표 3] (반)지하 거주가구가 가장 많은 5개 시군구	34
[표 4] (반)지하 거주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5개 시군구	34
[표 5] 거주층별 소득 분포	35
[표 6] 거주층별 연령 분포	36
[표 7] 일반가구와 다문화가구의 거주층 비교	36

1장 서론

1. 문제제기

한때 전체 서울시 주택의 40% 가까이를 보유하던 무허가정착지가 재개발과 함께 대부분 해체되면서(Mobrand, 2008: 380),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한국 대도시에는 이른바 ‘슬럼’으로 상징되는 대규모 ‘주거빈곤’이 사라졌다고들 말했다.¹⁾ 비닐하우스촌이나 쪽방, 홈리스, 최근에는 고시원 등 새로운 형태의 주거빈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슬럼’이라는 이름에 값할 만한 대규모 주거빈곤은 사라진 것 같았다. 실제로 슬럼으로 유명한 브라질의 경우, 상파울루 주변부의 슬럼인 ‘파벨라(favela)’에 2000년 현재 상파울루 전체 주택 호(戶)수의 8.4% 정도가 분포하고 있으며, ‘코르티소(cortiço)’라 불리는 도심 빈민거주지의 추정 호수 1.4%를 합하면, 상파울루 전체 주택 호수의 9.8% 이상이 슬럼으로 분류된다(Holston, 2008: 184). 이런 사례와 비교할 때, 과연 한국에서는 이제 슬럼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그럴 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국제연합(UN)에서 작성한 도표 「도시 인구, 발전, 환경 2007」에 따르면, 2005년 현재 한국의 슬럼 거주 인구는 전체 도시 인구의 무려 37%다(UN, 2008). 무허가정착지로 대표되는 대규모 빈민거주지가 사라졌고, 쪽방이나 고시원 등 새로운 빈민거주지 역시 그리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너무 크게 느껴진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나친 주거빈곤이 있었던 것일까?

실마리는 ‘(반)지하²⁾’를 슬럼으로 셈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통계청> 실시 전

1) 주거빈곤 개념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1장 2절을 참고하라.

2)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지하주거를 가리키는 용어로 ‘(반)지하’를 사용할 것이다. 2005년의 연구는, 그동안 지하주거를 지칭하는 용어로 ‘지하셋방’과 ‘반지하’, 그리고 ‘지층’ 등이 쓰였다고 말하면서, 가장 오래된 용어인 ‘지하셋방’의 경우 자가(自家)에 해당하는 지하주거를 포괄하지 못하고, 다른 용어들도 지하주거 전체를 포괄하는 데 다소 부족함이 있으므로, ‘지하주거’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대한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 2005c).

이런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연구에서 (반)지하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급증한 지하주거에 특히 관심이 있는데, 이는 1984년 12차 개정 건축법을 통해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1989년 이후에는 ‘다가구주택’)에 한하여 지하층에 대한 규정을 완화한 데서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즉 과거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3분의 2이상’이라고 했던 규정을,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표면을 덜 파도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반지하’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이후 지하주거를 주도하게 된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2010년도 주

수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에 거주층을 묻는 항목을 추가하면서 최초로 드러난 그 규모는 기존의 추정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³⁾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서울 일반가구 3,309,890가구의 약 11%에 달하는 355,427가구(총 845,493명)가 (반)지하에 살고 있으며, 그 숫자가 다소 줄어든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따르더라도 서울 일반가구 3,504,297가구의 약 9%에 달하는 308,660가구(총 680,231명)가 (반)지하에 살고 있다(통계청, 2006; 2011).⁴⁾ 여기에 2005년 현재 서울 일반가구의 약 1%(총 34,098가구, 53,765명), 2010년 현재 서울 일반가구의 약 0.8%(총 29,141가구, 45,330명)가 사는 옥탑이나, 한 연구에서 총 실수(室數)를 165,034개로 추정한 고시원 등 새롭게 출현한 ‘준주택’ 등을 감안하면(신상영, 2010), 그 규모는 앞서 살펴본 브라질 대도시의 슬럼에 비해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반)지하를 슬럼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할까? 이는 다소 조심스럽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중 다수가 소득이 낮은 도시빈민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많은 (반)지하가 이른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런데도 (반)지하를 슬럼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슬럼이란 그곳 거주민들의 소득 수준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환원할 수 없는 모종의 공간적 특성과 뗄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대개의 슬럼은, 주거지역을 수평적으로 분할한 결과 나타나는 ‘수평적 격리’(horizontal segregation) 양상을 띤다. 이 점에서 1980년대까지의 한국 무허가정착지, 그리고 무허가정착지의 해체

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전국의 지하 거주 가구와 반지하 거주 가구는 각각 130,096가구와 508,377가구로, 약 4배 차이가 나고, 전국 지하 거주 가구의 59.6%가 밀집한 서울의 경우 각각 47,985가구와 286,405가구로, 약 6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오늘날 지하주거의 대표적 형태인 반지하를 부각시키되, 1984년 이전에 생긴 지하주거를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반)지하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은 (반)지하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반)지하 거주자들의 주거 경험인데, 이 경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반지하’다. 구글 검색에 따르면 ‘반지하’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문장이 1,470,000건, ‘지하셋방’이 들어간 문장이 31,300건, ‘지층’이 1,270,000건(여기서 대부분은 지질학 용어인 ‘지층(地層)’이다), ‘지하층’이 1,050,000건, ‘지하방’이 162,000건, 그리고 ‘지하주거’가 12,300건 등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오늘날 지하주거를 대표하는 용어가 ‘반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약간의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반)지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 1988년 한 연구에서는 서울 전체 인구의 5%, 당시 인구를 감안하면 약 50만 명이 (반)지하에 거주할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한국도시연구소>의 2003년 연구에서는 그 규모를 최소 25만 가구로 추정하였다(강희달·이경희, 1988; 홍인옥, 2002c).

4) 한편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가구의 (반)지하 거주비율은 11.3%(약 44,000가구)로, 전국 일반가구의 3%보다 4배 가까이 높다. 일반가구에는 다문화가구가 포함되지 않는데, 이들을 포함하게 되면 (반)지하 거주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를 전후하여 등장한 비닐하우스촌이나 쪽방, 고시원 등은 전형적인 슬럼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공간들과 (반)지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뭇 다르다. 무엇보다 (반)지하는 슬럼의 공간적 배치를 특징짓는 ‘수평적 격리’와 달리, 독립된 건축물을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하나의 지상과 지하로 나누는 ‘수직적 분화’(vertical differentiation)라는 특징을 지닌다(대한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 2005c). 아울러 슬럼의 경우 계급적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던 데 비해, (반)지하가 밀집한 이른바 ‘단독주택지구’ 또는 ‘저층주거지’의 경우 일종의 자생적인 ‘사회적 혼합’(social mix)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서로 다르다(홍인옥, 1997; 김태섭 외, 2011). 그렇다고 해서 (반)지하가 밀집한 지역이 통상적인 사회적 혼합 지역의 모습을 띠는 것도 아니다. 통상적인 사회적 혼합 지역의 경우 그 안에서 계급적 차이가 가급적 비가시화되도록 설계되는 데 반해, (반)지하 밀집 지역 내부에서는 계급적 차이가 공간적으로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주거환경 면에서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수평적 격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상적인 사회적 혼합과도 다른, 독특한 형태의 계급적 분화가 나타나는 장소라는 점에 (반)지하, 더 정확히 말하면 (반)지하 밀집 지역의 독특한 공간적·사회적 성격이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몇 가지 특성은, (반)지하라는 주거형태에 이론적 흥미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반)지하 연구에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나타난 대개의 주거빈곤 연구는 무허가정착지라는 주거형태를 암묵적 참조점으로 삼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지하듯 1980년대까지의 무허가정착지는 대개 도시 주변부에 밀집되어 있었고, 물리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분포했으며, 이에 따라 강한 가시성을 띠었다. 반면 (반)지하는 아파트지구를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산포되어 있고, 그다지 물리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약하다. 실제로 (반)지하가 주로 분포하는 곳은 1960년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거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된 도시 곳곳의 이른바 ‘단독주택지구’이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 그것도 무허가정착지에 익숙한 시선을 통해서만 포착 자체가 어렵다.

(반)지하라는 주거형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가 희귀한 것은 이러한 (반)지하의 속성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몇몇 선구적인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가시적인 (반)지하를 가시화하려는 시론 격의 연구나 실태 조사가 대

부분이다(홍인옥, 2002a, 2002b, 2002c, 2004; 남원석, 2002, 2006a, 2006b; 심승희, 2004; 대한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 2005c). 따라서 물리적 현실로 환원되지 않는 (반)지하의 표상적 차원이나, (반)지하 거주자들이 (반)지하라는 주거형태를 어떻게 경험하고 의미화하는지의 문제, 그리고 이 경험과 의미화가 그들의 정체성과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문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을 중심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반)지하 거주자들은 (반)지하라는 주거형태를 어떻게 경험·의미화하는가, 그리고 이는 그들의 정체성 형성과 어떤 관련을 맺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 역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지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 서울 인구의 9%를 수용할 정도의 거대한 규모로 성장했으며, 그 거주자들은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니는가? 아울러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표상은 어떻게 형성·전개되었는가?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무허가정착지 해체 이후 한국 주거빈곤의 대표적 형태가 된 (반)지하의 출현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는 작업을 조심스럽게 시작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자원

1) 선행연구 검토

(1) 주거빈곤 개념의 가능조건 1: ‘자본주의적 공간 재편’에서 ‘주거 체제’까지

(반)지하는 주거빈곤(housing poverty)의 한 형태인데, 여기서 주거빈곤이란 일차적으로 ‘빈곤의 결과와 원인으로 주거문제가 작용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남원석, 2006a: 137~138). 이때 주거빈곤의 첫 번째 차원, 쉽게 말해 ‘가난한 사람은 나쁜 집에 산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쉽게 납득이 된다(김수현·이현주·손병돈, 2009: 143). 하지만 주거문제가 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거빈곤의 두 번째 차원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주거빈곤의 두 번째 차원에 주목한 작업들이 국내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우선 주거빈곤의 첫 번째 차원을 다룬 국내의 대표적 연구로는 도시빈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무허가정착지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주로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활발히 진행되었다. 1960년부터 1980년 사이 서울의 무허가정착지 문제를 다룬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무허가정착지의 규모는 전체 서울시 주택의 37.8%(1966년), 적을 때도 15.5%(1980년)에 달할 정도였다(Mobrand, 2008: 380). 따라서 국내 주거빈곤 연구의 주 무대가 무허가정착지였던 것은 꼭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물론 엄밀히 말해 이 연구들에서 주거빈곤 자체가 초점은 아니었다. 대개의 연구들은 무허가정착지라는 공간의 역사적 형성(과 해체)에 주목하거나, 이 장소에서 살아가는 도시빈민들의 노동과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췄다(김형국, 1989; 김수현, 1996; 조은·조옥라, 1992). 그렇더라도 이 연구들에서 주거빈곤은 필수적이고 구성적인 배경이었다. 빈곤과 빈민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살아가는 주거 및 장소에 대한 연구와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연구들에서 한 가지 특징은, 이 연구들이 위에서 언급한 주거빈곤의 두 번째 차원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두 번째 차원을 명시적으로 논박했다는 점이다. 이를 상징하는 말이 바로 ‘희망의 빈곤’이다(조은·조옥라, 1992; 장세훈, 2000; 조문영, 2001; 김수현·이현주·손병돈, 2009). 이와 대척점에 있는 말은 ‘절망의 빈곤’이며, 이는 인류학자 루이스의 저 유명한 ‘빈곤문화’(culture of poverty) 개념,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최하층계급’(underclass) 개념 등과 맞닿아 있다(조은, 2012; Katz, 1993). 후자의 개념들에서 요점은, 빈곤은 무력감과 열등감, 의타심 등 반(反)사회적 특징을 지닌 ‘빈곤문화’라는 결과를 낳는데, 이 빈곤문화가 ‘슬럼’으로 대표되는 도시빈민들의 주거공간과 사회화 등을 매개로 공간적·세대적으로 재생산되면서 빈곤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것이다.⁵⁾ 한국의 연구자들은 빈곤문화라는 개념을 한국의 주거빈곤 연구에 적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면서, 무허가정착지에 살아가는 한국의 도시빈민들은 빈곤 탈피를 통한 계층상승의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고,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사회적 관계도 극히 정상적인 등 빈곤문화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무허가정착지는 이주자들이 도시 생활에 정착할 수 있게 해 주는 ‘정류장’ 역할을 하고, 빈곤에 대한 빈민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인 ‘지출극소화 생계전략’을 가능케 해 주며, 빈곤에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지적·사회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빈곤 극복에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적어도 중립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조은·조옥라, 1992: 34). 요컨대 무허가

5) 루이스의 논의를 이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하비와 리드의 연구를 보라(Harvey and Reed, 1996).

정착지로 대표되는 도시빈민들의 주거빈곤은, 빈곤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역설적으로 빈곤에 대항하거나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런 논의 틀에서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의미에서의 주거빈곤 개념은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주거빈곤이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나타나게 된 것은 1980년대 들어 본격화된 ‘합동재개발’ 정책으로 무허가정착지가 해체된 이후였다.⁶⁾ 도시의 빈민들에게 열악하지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사회적 주거’(social shelter) 역할을 했던 무허가정착지가 해체되면서 저렴한 주택의 재고가 급격히 저하했고, 이는 1980년대 후반 전·월세대란의 중요한 원인 노릇을 했다(김수현, 1996: 110). 이렇듯 주거비가 급상승함으로써, 빈민들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인 지출극소화 전략은 더 이상 작동하기가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무허가정착지의 해체는 사회관계망, 곧 그들이 처한 사회 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데 활용했던 생활양식과 자조 체계를 일시에 무너뜨렸다(조은·조옥라, 1992: 143). 무허가정착지의 해체 원인 및 결과를 분석하면서 당시의 연구들은 도시사회학 전통에서 발전되었던 ‘자본주의적 공간재편’이라는 이론을 원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거의 문제가 빈곤을 심화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하성규, 1995; 김수현·박세훈, 1996).

여기서 요점은 도시사회학 이론에 따라 무허가정착지 해체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산영역에서의 저소득과 등치되는) 빈곤으로 환원되지 않는 주거빈곤이라는 특정적 개념이 정식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소득이 없다고 해서 주택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주거의 빈곤은 주거부문 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과정 내지 구조의 결과로 초래되기 때문이다(임서환, 1995: 14). 아울러 주거빈곤의 문제는 단순히 일부 열악한 주거상태로 한정할 수 없고, 오히려 주택 소유 불평등 구조의 한 국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논점이었다.

이상의 논의는 주거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 작업들에 대한 천착으로 이어지는데, 가령 ‘주택정책전략(housing policy strategy) 개념을 중심으로 ‘주거 체제’(housing regime)를 분석한 케메니의 작업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Kemeny, 1995: 49~60; 남원석, 2006a: 162~169). 여기서 주택정책전략이란 ‘주택시장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련의 전제와 원칙의 집합’으로 정의되는데, 이것과 해당 사회

6) 합동재개발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형국(1989), 김수현(1996), 윤일성(2002) 등을 참고하라.

의 주거복지 또는 주거빈곤 수준은 각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요점은 ‘주거 체제’라는 별도의 기제를 개념화하고, 이것이 주거빈곤을 좌우하는 독립변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논증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접근이 주거빈곤을 낳는 다른 기제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주거빈곤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일차원적 설명으로 환원되지 않는 좀 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을 따름이다. 이른바 ‘신빈곤’ 논의와 주거빈곤 논의가 결합한 것은 바로 이 맥락에서였다.

(2) 주거빈곤 개념의 가능조건 2: 신빈곤, 사회적 배제, 그리고 ‘주거를 통한 배제’(exclusion through housing)

주거빈곤 개념의 또 다른 중요한 원천은 이른바 ‘신빈곤’이라는 개념이다. 이하에서는 ‘신빈곤’ 개념이 제기된 맥락과 핵심 문제의식,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토론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주거빈곤 개념과 연결되는지 살펴보겠다.

한국에서 신빈곤 개념을 체계적으로 제기한 최초의 논의는 <한국도시연구소>의 1995년 보고서 『한국사회 변화와 빈곤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의 서론에는 신빈곤 개념의 제기 맥락이 잘 드러나 있다. 고도성장으로 절대빈곤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빈곤의 문제가 ‘한 편의 영화를 본 기억’으로 취급되는 등,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줄어든 시대적 분위기에 맞서, 빈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성격과 양상을 달리하여 지속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려면 신빈곤을 낳은 90년대 이후 사회구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게 요점이었다(한국도시연구소, 1995: 12~14). 이들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에 크게 나누고, 전자에서는 첨단산업화 및 노동시장의 분단화와 맞물린 고용지위의 불안정화, 후자에서는 소비양식 고도화와 맞물린 재생산 비용의 증가 및 계층별 격차 확대를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 빈곤의 성격이 ‘희망의 빈곤’에서 ‘절망의 빈곤’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신빈곤 개념은 제기된 바로 그 시점부터 여러 비판에 직면하는데, 그 내용은 대략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신빈곤을 낳는 생산부문에서의 이중구조와 고용의 불안정성 등은 사실 별로 새로울 게 없다는 점. 둘째, 구빈곤과 신빈곤 사이의 단절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절대빈곤 문제가 부차화될 수

있거니와, 신빈곤 개념이 강조하는 소비에서의 빈곤이나 정서적 빈곤 등 빈곤의 다양한 차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의 중심은 소득 및 그와 관련된 구조에 있다는 점. 셋째, 신빈곤 개념은 과거 정책입안자들이 빈곤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들, 곧 '빈곤화될 수 있는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개념의 대상이 너무 넓어진다는 점 등이 주된 요지였다. 이는 다시 크게 나누면, '도대체 빈곤이 새로운 것이 없다는 비판, 그리고 신빈곤 개념이 지나치게 빈곤 및 빈민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한국도시연구소, 1996).

전자의 비판과 관련하여 보자면, 실제로 신빈곤의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되곤 하는 '노동빈민'(working poor)의 경우, 이미 80년대 말에 발표된 논문에서 '도시빈민문제의 핵심적 고리를 접하고 있는 집단'으로 지목된다(최원규, 1989: 2). 박경숙은 빈민들의 생애사가 '먹고 살기 위해 안 해 본 것이 없는 노동자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노동빈곤을 강조하는 신빈곤 담론이 과거에는 노동을 통한 빈곤 탈출의 기회가 높았다는 식의 그릇된 전제와 공명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박경숙 외, 2006: 11). 장세훈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표되는 노동빈민은 과거 비공식부문에 저임금 불완전고용 형태로 취업했던 주변적 노동자층이, 노동시장의 공식부문에 일시적으로 편입되었다가,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공식부문 내 2차노동시장으로 재차 추락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장세훈, 2005: 109).

하지만 이상의 비판들이 신빈곤의 문제의식, 특히 생산영역에서의 구조적 차별과 재생산영역에서의 비용 및 격차 확대 등으로 말미암아 빈곤 탈출의 전망이 한층 어려워졌다는 착상 일반을 기각하는 것은 아니다(한국도시연구소, 2006: 83). 다만 빈곤의 속성이나 형태 일반이 단번에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장이며, 빈민 내부에 기존의 빈민과는 성격과 형태가 다른 빈곤층이 서서히 형성되면서, 빈민의 내부구성이 더 복잡하고 이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식으로 단서를 달아 이해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장세훈, 2005; 2006). 이 새로운 빈민의 형성과 관련하여, 여성고용 특유의 관행이 고용 일반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노동의 여성화'와 비슷한 의미에서, '노동의 빈민화'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Gutiérrez Rodríguez, 2010). 즉 기존에는 이른바 '비공식부문'에 국한되었던 저임금·불안정노동이 '공식부문'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빈민으로 환원되지 않는 노동자 전반이 빈곤화 위험에 노출되고, 이들 중 일부가 빈민으로 '추락'하면서 빈곤의 내부구성이 한층 이질

화되는 것이 신빈곤 현상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요점은 신빈곤이란 구빈곤과 완전히 별개의 현상이라기보다는, 빈곤 자체가 한층 복잡하고 이질적이 되어가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빈곤의 표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후자의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비판이 제기되는데, 기존의 빈곤 연구가 물질적 자원 주로 소득의 부족으로 빈곤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연구 대상과 목적을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얻지 못한 최하위 계층’ 곧 절대빈곤층의 실태와 규모 파악으로 국한시켰던 데 반해, 신빈곤 연구는 소득으로 환원되지 않는 빈곤의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원인 및 이들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빈곤화’(pauperization)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는 누락되었지만 빈곤이 형성·재생산되는 동태적이고 역사적인 과정을 파악하는 데 큰 시사점을 주는 빈민들, 가령 빈곤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늘 추락의 위협에 시달리는 ‘노동빈민’ 등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반비판의 요점이었다. 다만 노동빈민이 최근 들어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비판은 수용하면서, 신빈곤 연구의 핵심적 문제의식은 신빈곤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연구(Study on New Poverty)라기보다, 빈곤에 대한 ‘새로운 연구’(New Study on Poverty) 쪽에 있다고 정정한다(신명호 외, 2004: 13~15).

이러한 의미의 신빈곤 연구, 곧 빈곤에 대한 ‘새로운 연구’ 기획에 잘 부합하는 개념으로 주목받은 것이 바로 ‘사회적 배제’ 개념이다. 사회적 배제 개념 역시 단일한 차원의 결핍보다 다양한 차원의 박탈을 중시하고, 빈곤층의 규모와 실태 등 정태적 ‘상태’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이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적 배제 개념 및 그와 결부된 함의—배제는 배제하는 자(또는 구조)와 배제되는 자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고, 배제의 책임은 전자에게 있다—는 가령 ‘최하층계급’(underclass) 개념 및 그와 결부된 함의—빈민들의 비참한 조건은 빈민들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에 비해 지적·정치적으로 더 타당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신명호 외, 2004: 18~22; Byrne, 1999: 1~12; Pierson, 2010: 4~24).

이상에서 살펴본 신빈곤 이론이나 사회적 배제 이론에서 주거빈곤은, 다차원적 결핍의 중요한 차원 중 하나로 제시된다. 특히 주거와 사회적 배제를 명시적으로 연결시키는 소머빌은 ‘주거를 통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through housing)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배제는 주거로 말미암아 특정 사회 집단들의 일상생활 통제권

이 부인되거나, 더 넓은 시민적 권리들의 향유가 손상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Somerville, 1998: 772). 이 정의를 따르자면 주거빈곤이란 단순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상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의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의 주거', '주거로부터의(from housing) 사회적 배제', '주거에 의한(by housing) 사회적 배제'로 나눌 수 있다(Arthurson and Jacobs, 2003).

첫 번째는 주거 이외의 영역, 가령 고용이나 교육, 건강 등 여러 영역에서 벌어진 사회적 배제로 인해, 가령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거 체제' 고유의 논리에 따라 저렴하고 적합한 주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거 자체가 사회적 배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로, 이것이 본연의 의미에서 주거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앞의 둘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거나, 이미 논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세 번째 차원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거에 의한 사회적 배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배제 개념의 발원지인 유럽의 학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간적 격리'(spatial segregation)로 인한 사회적 배제를 주로 다루었다. 한국에서도 영구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그런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서종균, 1997). 하지만 이런 기존 논의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을 공간적으로 격리된 공간으로 바라보는 접근 자체가 자칫 이 공간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강화하는 '낙인'(stigma)으로 작용할 수 있다(신명호 외, 2004: 51). 둘째, 한국처럼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적고 그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공공임대부분의 '잔여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반)지하를 비롯한 민간임대부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가 상대화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전자에서 주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 곧 '격리'와 구별되는 후자의 사회적 배제 곧 '은폐' 및 '비가시화' 문제를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 등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공공임대부분보다 민간임대부분에서 더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사회적 배제 과정이 일어난다는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Hulse and Burke, 2000). 이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곧 '시장 자유주의' 이념을 채택하고 있고 민간임대부분이 압도적인 세 나라는, 이런저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면에서 사회적 배제가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과 재정적 불안정성의 강화. 둘째, 비자발적 이주를 비롯한 주거 불안정성. 셋째, 시설이 부실한 지역 중심의 입지적 제한. 넷째, 지지대 노릇을 하는 서비스와의 연결 부진. 다섯째, 실효적인 세입자 관리 및 세력화 역량의 축소. 여섯째, 정치적 주변화. 일곱째, 차별 등이 그것이다. 이 나라들에서는 사회주택의 공급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주거 관련 공적 지원은 주로 주거급여 방식에 국한된다. 그러나 주거급여는 극히 소득이 낮은 가구에 제한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주거급여 중심의 정책들이, 주택 공급 측면에는 문제가 없고 수요 측면에 문제가 있을 따름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즉 주택 공급 면에서 저렴하고 적합한 주택 재고가 충분히 존재하는데, 다만 수요 측이 이를 감당할 소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주된 문제라고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980년대 서울의 도심재개발에서 잘 나타났듯이, 중산층 이상을 위한 도시공간 재편으로 말미암아, 전체 주택 공급 중에서 저렴한 주택 재고만 편향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설사 비용과 시설 면에서 양호한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편의시설을 갖춘 입지나 주거에 대한 통제 등과 관련한 사회적 배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그런 한에서 이로 인한 주거빈곤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세입자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 중 하나인 노동이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일자리로 재편되는 한편, 적절한 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말미암아 주거비가 상승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심지어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이 같은 주거빈곤 상황에서 탈출하기란 극히 어렵다. 요컨대 주택임대부문, 특히 민간임대부문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주거빈곤을 낳는 원인의 하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임대부문은 공공임대부문에 비해 사회적으로 훨씬 더 비가시적이고, 공적인 책임성을 묻는 데도 불리하다. 게다가 민간임대부문 자체는 단일한 시장이 아니고 저소득 중심의 하위시장과 중산층 이상을 주된 수요층으로 하는 하위시장 등 최소한 두 개 이상의 하위시장으로 나뉘는데, 만일 중산층 이상 가구의 주거소요(housing needs)를 만족시키는 데 민간임대부문이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둘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는 더욱 비가시화될 수 있다. 민간임대부문의 주거빈민은 이중적인 주변화·비가시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배제를 강화할 수 있다.

요컨대 유럽 중심의 사회적 배제 논의가 ‘주거에 의한 사회적 배제’와 관련하여 주로 초점을 맞추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간적 격리’ 문제는, 한국의 주거빈곤 문제 곧 민

간임대부문에서 주로 나타나는 (반)지하 등과 관련된 주거빈곤 문제를 다루는 데 별로 적합하지 않다. 물론 공공임대부문보다 민간임대부문이, 나아가 자가라는 주택점유 형태(tenure)보다 임대라는 점유형태가 반드시 더 사회적 배제에 취약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어떤 부문이건, 어떤 점유형태이건 간에 그 주거가 '주거권'이나 '배제의 배제'(exclusion of exclusion) 등의 규범에 따라 사회적으로 통제받느냐 여부에 있다. 다만 그런 사회적 통제와 관련하여 통상 임대주택, 그리고 민간임대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은 한국의 주거빈곤, 또는 '주거에 의한 사회적 배제'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

2) 이론적 자원

(1) 빈곤의 사회적 표상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주거빈곤, 특히 주거빈곤의 한 형태로서 (반)지하를 다룬다. 그런데 여기서 즉각 제기될 수 있는 의문 중 하나는 과연 (반)지하를 주거빈곤이라는 범주로 묶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주거빈곤'이라는 개념이 제기된 바로 그 시점부터 무엇을 주거빈곤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통상적으로는 지난 2003년 법제화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리고 소득대비 주거비부담수준(RIR: Rent to Income Ratio)이 월소득의 30%를 초과할 경우 주거빈곤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선 최저주거기준 자체가 쟁점이다. 최저주거기준은 면적, 시설, 구조·성능·환경이라는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면적과 시설 기준도 논란이 많거니와, 구조·성능·환경 기준의 경우 분명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의해서는 (반)지하는 주거빈곤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는데, (반)지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면적이나 시설 기준보다는 채광이나 습기 등 구조·성능·환경 기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이 밝히고 있듯 구조·성능·환경 기준의 미달이 건강이나 자존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지하를 주거빈곤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김민희, 2009; 김윤승, 2012).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은 (반)지하라고 해서 꼭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는 것이다. (반)지하를 다룬 실태조사나 연구들에서, (반)지하의 주거 환경 현황 파악을 최우선 과

제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에 따라 차별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같은 내부적 이질성 때문이다(대한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 2005c). 이러한 애매성은 RIR 역시 마찬가지인데, 왜 그 기준이 30%여야 하는지, 그 기준의 근거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이렇듯 비교적 측정이 쉬운 기준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분분한 상황인데, 하물며 ‘거주의 불안정성—생활의 거점으로서 사회 관계를 구축해가는 안정적인 장이 부재한 것—처럼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주거빈곤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차원이 들어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신명호 외, 2004: 50).

그런데 이런 기준의 애매성은 사실 주거빈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위 범주인 빈곤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고전적인 문제다. 가령 빈곤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흔히 제시되는 것만도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정책적 빈곤 세 가지이며, 최근에는 주관적 빈곤이라는 기준이 추가되는 추세인데, 이 중 어느 것을 중시할지 자체가 논쟁의 대상인 것이다(박신영, 2011: 197~206). 아울러 특정 기준을 택했다 하더라도 그 기준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이 기준에 관한 논의는 단순한 탁상공론이 아니라 엄청난 정치적·정책적 효과로 이어진다. 가령 중위소득(소비단위) 50%를 빈곤선으로 삼을 경우 2001년 현재 프랑스의 빈곤 인구는 전체 인구의 6%인데, 이를 60%로 변경할 경우 2배 이상이 증가한 12.4%가 된다(Paugam, 2005: 67). 한국의 경우도 최저생계비가 복지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임금의 기준선 노릇을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의 결정을 둘러싸고 매년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이 빚어진다(최예륜, 2008).

사회학 전통에서 빈곤과 관련된 이런 애매성과 가장 명료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결한 최초의 인물은 1907년의 짐멜이다(Simmel, 1965). 짐멜은 빈곤에 대한 실체적이고 양적인 정의를 비판하고, 빈곤을 특정한 사회적 관계의 하나로 볼 것을 주장했다. 짐멜에 따르면 사회학적 범주로서 빈민이란, 특정한 결핍과 박탈에 시달리는 이들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 따라 부조(assistance)를 받거나 마땅히 받아야 하는 이들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빈곤이라는 상태가 선행하고 이를 부조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가 특정한 상황에 처한 이에게 부조를 제공하거나, 또는 부조의 대상이 될 적격성을 공적으로 인정할 때, 그 상황이 빈곤으로, 그리고 그 상황에 처한 이들이 빈민으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다. 즉 이제 초점은 빈곤이라는 ‘대상’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태를 빈곤으로 표상하는 ‘사회적 규범’ 쪽에 있다. 같은 맥락에서 빈곤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할 때 그 본령은, 빈곤에 대한 기술적이고 양적인 접근이라기보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특정한 상태를 빈곤으로, 즉 부조를 요청하는 상태로 체험하게 만드는 사회적 표상 및 정당화 과정(과 이를 관통하는 갈등), 그리고 이것과 빈민들의 상호작용에 있다.

포강은 이런 짐멜의 노선을 빈곤에 대한 실체주의적 문제설정과 단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로부터 크게 세 가지 이론적 함의를 끌어낸다(Paugam, 2001: 78) 첫째, 사회학적으로 적절한 것은 빈곤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 사회의 특정 시점에서 빈곤이 취하는 제도적인 사회 형태들이다. 둘째, 빈곤이 취하는 형태들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다. 셋째, 빈민의 지위는 한편으로 해당 사회에서 생활수준이나 경제·사회활동참여 정도 따위 기준이 지니는 의미, 다른 한편으로 ‘빈민’으로 지명되는 주민들과 그들을 그렇게 지명한 주민들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다. 요컨대 사회학적 빈곤 연구의 목표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빈민’으로 지명된 주민들과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의존 관계의 서로 다른 유형들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상호의존 관계를 정의할 때 거시사회학적 질서와 미시사회학적 질서라는 두 차원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전자는 빈곤이라는 현상에 관한 집합적이고 사회적인 표상, 그리고 ‘빈민’으로 간주되는 범주들의 사회적 정교화로 귀착되며, 후자는 빈민으로 규정된 주민들이 자신들의 체험에 부여하는 의미, 자신들을 그렇게 지명하는 이들에 대해 그들이 취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이 직면하는 서로 다른 상황들에 대한 적응양식 등과 관련된다.

여기서 요점은 빈곤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단순히 그 사회의 빈곤 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에서 빈곤의 표상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런 변화와 결부된 사회적 조건은 어떤 것인지, 빈곤의 표상 변화가 빈민에 대한 대중적 태도 및 빈민 자신의 정체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빈민이자 주거빈민의 가장 극단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노숙인을 연구하면서, 노숙인이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 노숙인을 구성하는 담론과 정책에는 크게 ‘부랑인 모델’과 ‘노숙인 모델’, ‘홈리스 모델’이라는 세 가지 모델이 있

다는 점, 이런 모델의 차이는 특정한 역사적·사회적 조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노숙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각기 다른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밝혀낸 최근의 연구는 앞서 언급한 사회학적 빈곤 연구의 한 예가 될 수 있다(정근식, 2012).

빈곤을 ‘빈민’과 ‘빈민이 아닌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로 정의하는 짐멜의 관점을 계승하면서 정교화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회학자 중 한 명이 바우만이다. 바우만에 따르면 각 사회는 나름의 질서와 규범에 근거하여 해당 사회의 고유한 빈민 심상을 구성하고, 이런 빈민이 존재하는 이유에 관해 서로 다른 설명을 제시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빈민을 활용하고, 빈곤 문제를 다루는 서로 다른 전략을 전개한다(Bauman, 2005: 109). 요컨대 빈곤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빈민들 자신이라기보다, 빈민과 ‘함께’ 있는 ‘우리’의 성격이다. 왜냐하면 빈민의 심상에 투여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숨겨진 공포와 불안, 그리고 이런 정서를 낳는 사회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따라, 특히 1990년대 이후 주거빈곤의 대표적 형태가 된 (반)지하 주거형태의 표상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러한 표상이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와 결부되었는지, 또 빈민에 대한 대중적 태도 및 빈민 자신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주거, 정체성, 그리고 낙인

주거 또는 ‘집(home)’이 ‘정체성의 외피(identity shell)’라는 말은 주거와 정체성의 관계를 명쾌하게 집약한다(Dittmar, 1992: 113). 외피라는 은유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듯, 집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안전한 내부 공간을 확보하여, 정체성의 본질적 차원의 하나인 인격적 온전성(personal integrity)이 유지·재생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⁷⁾ 동시에 외피로서의 집은 사회적 지위

7) 정체성(identity, 동일성)은 정의하기 매우 힘든 개념이다. 이 논문에서는 호네프의 인정 이론을 정체성 이론으로 발전시킨 르노를 따라, ‘개인이 자신 특유의 개성과 고유한 가치에 관해 형성하는 표상(la représentation par l'individu de ses caractéristiques spécifiques et de sa propre valeur)’으로 정체성을 정의할 것이다(Renault, 2004: 265). 이런 의미에서의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심상’이며, ‘자기와의 긍정적 관계’(호네프에 따르면 여기에는 자신감, 자존감, 자긍심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를 상징하는데, 이는 타인들에 의한 ‘상호주관적인 인정’이 없다면 성립할 수 없다. 여기서 요점은 정체성이란 개인을 진정한 의미의 개인으로 만드는 것이지만(정체성 없는 개인이란 온전성(integrity) 없는 존엄한 존재처럼, 형용모순에 가깝다), 정체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들과의 관계가 필수적 전제로 요청된다는 점이다. 발리바르가 주장하듯, 정체성이란 각자가 자기 자신과 관계를

의 상징으로서, 외부 세계에 드러나는 거주자의 인상—곧 정체성의 또 다른 본질적 차원—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수단 노릇을 한다. 즉 집이 지닌 ‘가림과 보임’이라는 이중적 역할 모두 정체성의 필수적 지지대 노릇을 하는 것이다.

영에 따르면 집이란 정체성의 물질화로서, 과거와 현재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물리적 사물에 정체성을 정착시킨다(Young, 2000: 63). 그리고 아놀드는 집이라는 이 정착점을 근거로 삼아 각 개인이 일정한 시공간 반경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지지해 줄 수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일상적·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해 나간다는 점에 주목한다(Arnold, 2004: 60). 집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기록되고 보관된 ‘기억’, 그리고 집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지지적인 상호작용이 없다면, 정체성은 늘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렇듯 주거가 한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주거와 관련된 부정적 경험, 가령 ‘집 같지 않은 집’에 사는 일이랄지, ‘강제퇴거’를 비롯한 비자발적 이주(forced mobility)가 이를 겪은 개인, 특히 그 개인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주거빈곤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홈리스의 경험을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시켜 분석한 아놀드의 작업에서 시작해 보자(Arnold, 2004). 거리노숙을 하는 홈리스들은 대개 공원이나 역 등 공적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와 재산이 훼손되고, 인격이 무시당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겪게 된다. 쉼터에서 지내는 홈리스도 사정이 썩 좋지는 않다. 대개의 쉼터는 퇴소시간과 입소시간을 엄격히 규제하는데, 설사 날씨가 춥고 비가 내리는 경우라도 퇴소시간에는 밖으로 나가야 하고, 입소시간 전에는 밖에서 떨면서 기다려야 한다. 즉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신체와 공간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인데, 호네트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체 및 주관적 세계의 불가침성을 침해·무시당하는 ‘학대’의 경험은 개인의 자신감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호네트, 1996: 222~233). 또 모든 거리와 대개의 쉼터는 개인의 소지품을 보관할 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홈리스들은 소중한 기억이 담긴 물건들 — 편지, 종교적 성물(聖

맺는 방식 중 하나이지만, 고립된 개인에게는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체성이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타인의 시선을 매개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발리바르, 2011: 148~149).

物), 사진, 그리고 (사람들, 관계들, 경험 등을 상기시켜 주는) 기념품 등 — 따라서 개인적 정체성의 물리적 지지대들을 상실할 위험에 늘 처하게 된다. 이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 보관 장소를 임대할 수 없는 홈리스들은, 자신의 물건 및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 꾸러미의 가방이나 쇼핑 카트에 물건을 가득 싣고 다니곤 하는데, 이런 외양은 홈리스라는 자신의 처지를 여과 없이 드러냄으로써, 구직을 비롯한 사회활동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이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적인 시선 역시 이들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Arnold, 2004: 51~85).

폭스는 주택담보대출로 구입한 주택을 압류당해 강제퇴거된 자가소유자들의 사례를 다루면서, 이들이 이 과정을 사회적 지위 및 정체성의 강등으로 체험했다고 말한다. 일부 거주자들은 압류 이후 친구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는 것에 당혹감을 느꼈으며, 아예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었다. 대다수의 거주자들은 자신감과 자긍심을 잃었다고 고백했으며,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증언했다(Fox, 2007: 167~173). 홈리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택 압류 및 강제퇴거라는 부정적 경험은, 집이 거주자의 정체성과 맺는 긴밀한 관계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즉 집은 사회적 지위 및 정체성의 상징이며, 이웃이나 동료들과의 지지적 상호작용 및 이를 통한 정체성의 상호주관적 인정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지인 것이다.

집이 없거나 집을 상실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특히 사회적 낙인이 찍힌 주거에 사는 것 역시 거주자들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와강은 미국의 흑인 계도와 프랑스의 도시 주변부, 이른바 ‘방리유’에 사는 도시빈민들의 삶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주거지역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가 사회적 ‘해체’로 이어진다고 결론짓는다(Wacquant, 1993: 372~375). 강력한 사회적 낙인에 노출된 거주자들은 자신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내부적인 사회적 차별화와 거리두기를 실행에 옮기는데, 이 과정에서 대인간 신뢰가 감소되고 지역의 사회적 연대가 침식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가령 이 지역 거주자들은 개인이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한편, 사회 부조를 부당하게 수취하는 ‘가짜 빈민’들을 비난하는 공식적 담론을 실천하곤 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구별 및 ‘탈퇴’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내부를 끊임없이 분할한다. 여기서 작동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인데, 왜냐하면 특정 주거 및 지역에 대한 낙인찍기가 이를 개별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거주자들

의 행위를 초래하고, 이로써 그 지역에 있다고 부당전제된 부정적 특성—사회적 파편화, 공동체 ‘해체’, 문화적 아노미 등—이 결국 실제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미국 주거빈곤의 한 형태인 ‘트레일러 주택’에 사는 거주자들을 연구한 쿠젠바흐 역시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Kusenbach, 2009). 쿠젠바흐는 고프만의 낙인 이론을 원용하여, 트레일러 주거를 ‘성격적 결함에 의한 낙인’과 ‘종족 낙인’으로 규정하면서, 이 같은 낙인 또는 ‘손상된 정체성’(spoiled identity)을 관리하고 자긍심과 도덕적 번듯함(decency)을 유지하기 위해 대개의 거주자들이 주변 거주자들과의 거리두기(distancing) 전략을 구사한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낙인을 개별적으로 모면하려는 이런 식의 전략은, 외강이 분석한 사례에서 그랬듯, 이 낙인을 재생산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는다.

물론 낙인찍힌 이들 모두가 이상에서 분석한 것처럼 낙인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결국 그 낙인을 초래한 기존 사회의 ‘정상성’(normality)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낙인의 문제점을 논박하고 대항이데올로기를 채택함으로써 ‘탈낙인화’(de-stigmatize)로 향하는 길도 있다(Gussow and Tracy, 1968: 317).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집단적으로 구성하여 낙인과 결부된 ‘수치심’(shame)의 감정을 ‘불의’(injustice)에 대한 분노의 감정으로, 따라서 기존의 규범적 틀과의 ‘상징적 투쟁’을 뒷받침하는 정서적 동력으로 탈바꿈시킬 수도 있다(Renault, 2012: 109~112). 실제로 남반구 여러 지역의 도시빈민들, 특히 브라질의 도시빈민들은 낙인찍힌 자신들의 거주지역을 ‘새로운 공적 공간’으로 구성하고,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 등의 새로운 담론을 채택하여, 기존의 차별적 시민권 체제를 변혁하는 ‘봉기적 도시 시민권’(insurgent urban citizenship) 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켰으며, 그 결과 헌법과 연방법에 도시권을 명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Holston, 2008; 2009; 2011; Avritzer, 2010).

요컨대 낙인, 특히 주거빈곤과 관련된 낙인에 노출된 거주자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가, 이것이 거주자의 정체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가령 그 낙인 및 낙인을 초래하는 사회적 정상성의 강도, 그리고 이 낙인을 해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가용할 수 있는 상징적·물리적 자원의 정도 등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에서는 한편으로 (반)지하 주거의 사회적 표상, 다른 한편으로 그에 대한 거주자들의 해석 및 대응을 그들의 정체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3.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반)지하라는 주거형태를 어떻게 경험·의미화하고,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때 전체가 되는 것은 (반)지하 거주자들의 주거 경험을 매개하는 사회적 표상에 관한 이해다.

전자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반)지하 밀집지역인 관악구 일대에 사는 (반)지하 거주자들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관악구의 (반)지하 거주 가구 비중은 약 14%, 총 가구 수는 29,210가구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대적 비중 면에서는 5위, 절대적 규모 면에서는 1위인데, 그 중에서도 신림1동(현 신원동), 신림4동(현 신사동), 신림3동·13동(현 난곡동)은 2010년 현재 전체 가구 중 22%에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어, 상대적 비중이나 절대적 규모 면에서 단연 압도적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반)지하에 관한 신문 기사에 초점을 맞췄다.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KINDS(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KINDS의 경우 1990년 1월 1일 이후 10개 전국종합일간신문(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아시아투데이)에 실린 기사를 검색할 수 있으며,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1920년~1999년 사이 4개 전국종합일간신문(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을 검색할 수 있다.

두 검색엔진을 이용, 지하주거에 관한 최초의 기사가 보도된 1975년 4월 1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 신문 기사 중 지하셋방, 반지하, 지하방 등이 제목과 본문에 들어간 기사를 검색하면 총 2500건에 가까운 기사가 수집되는데, 이 중에서 (반)지하 주거형태와 무관한 기사—가령 서울시가 마로니에 공원에 ‘반지하 야외 공연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기사나 네팔 정부가 한 고찰의 ‘지하방’을 석가모니의 정확한 탄생장소로 선포했다는 기사 따위—를 제외하고, 실제 (반)지하 주거형태와 관련된 신문 기사 약 2100여 건을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1) 담론 분석

본 논문의 주된 연구방법 중 하나는 담론 분석이다. 여기서 말하는 담론이란 푸코적인 의미의 담론인데, 푸코에 따르면 담론이란 사회적 맥락을 가능조건으로 삼는 동시에 사회적 맥락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발화와 문장, 언표들의 집합체를 말한다(밀즈, 2001: 25). 여기서 요점은 언표와 권력, 제도 등의 복합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언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중요한 참조점이 되는 학자는 페어클럽인데, 그는 한편으로 언어학적 서사분석이 사회적 함의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 푸코에서 연원한 사회학적 담론분석들이 기호가 함축하는 바를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페어클럽, 2011).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담론에 관한 좀 더 정밀한 분석을 전개하면서도, 그것을 규정하는 사회적 조건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다.

(2) 심층면접과 현상학적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은 (반)지하 거주자들의 주거 경험과 정체성이기 때문에, 적합한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이다. 이를 위해 (반)지하에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최근 까지 거주했던 (반)지하 거주자들과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표집방식은 눈덩이표집방식을 사용하였다.

면접은 2012년 8월과 9월 사이에 진행하였으며, 거주자들의 생애사를 전반적으로 청취하는 가운데, 특히 주거 및 정체성과 관련된 언급이 나왔을 때 캐묻기(prob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밴 메년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상학은 체험의 본질을 포착하여 텍스트로 표현하는 것이며(매년, 1994), “해석하는 것은 ‘텍스트의 앞에(in front of the text)’ 전개되는 세계 내의 존재 유형을 해명하는 것(Ricoeur, 1981; 이희영, 2001 재인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반)지하의 확대리는 사회역사적 상황

속에서 (반)지하에 거주한 개인의 체험을 담은 텍스트를 통해 그들을 둘러싼 세계를 읽어내며 분석하려고 노력했다.

심층면접 응답자들의 특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이름	연령대	직업	(반)지하 거주 기간	관악구 거주 기간	주거비	월소득
사례 A	70대 초	무직 (폐지 수집)	8년	약 40년	전세 4천 5백만원	약 30만원
사례 B	60대 후	무직 (폐지 수집)	10년	약 40년	무상 거주	약 30만원
사례 C	70대 초	무직 (폐지 수집)	12년	40년 이상	월세 25만원	약 30만원
사례 D	60대 초	요양보호사	4년	40년 이상	1000-25	약 80만원
사례 E	50대 후	요양보호사	1년	약 30년	전세 5000	약 80만원
사례 F	40대 후	장애인 활동보조	4년	약 5년 (동작구에서 20년 이상 거주)	2000-10	약 80만원
사례 G	20대 중	회사원	1년 미만	1년	300-37	약 150만원
사례 H	20대 초	학생	1년 미만	2년	300-37	약 120만원
사례 I	20대 초	학생	1년 미만	2년	200-41	약 150만원
사례 J	20대 초	댄서	1년 미만	1년 미만	월세 40	약 40만원
사례 K	50대 후	가옥주	×	토박이	×	
사례 L	50대 중	가옥주	×	약 20년	×	
사례 M	70대 초	부동산	×	약 50년	×	
사례 N	50대 후	부동산	×	약 20년	×	

2장 (반)지하 주거형태의 형성 과정과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1. (반)지하 주거형태 확대의 사회적·기술적·제도적 계기

1) (반)지하의 등장: '보일러실'이거나 '대피소'이거나

(반)지하는 그 성격상 지상주거와 별개의 주거형태가 아니라 지상주거에 부속된 주거형태다. 단적으로 주된 용도가 주거인 건물에 지하층만 있고 지상층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찾기로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반)지하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별도의 부엌과 화장실을 갖춘 독립된 주거형태로 공인된 것은 1984년이 되어서였다. 그 전까지 (반)지하의 주거 용도는 '거실'로 제한되었고, 그나마도 1975년 5차 개정 이전의 건축법은 "주택의 거실은 지층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명기함으로써 (반)지하의 주거 시설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즉 1975년까지만 해도 (반)지하는 독립된 주거형태이기커녕 공식적으로는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듯 (반)지하가 애초에 주거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반)지하는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것일까?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주거용으로 전용된 것일까? 첫 번째 질문에서 시작하자면, 우선 (반)지하는 '불란서주택' 등 1970년대 들어 등장한 새로운 주택의 보일러실 용도로 만들어졌다(임창복, 2011: 427~442). 임창복에 따르면 1972년까지 서울 주택의 90% 이상은 재래식 난방을 이용했는데, 77년이 되면 재래식 난방의 비율은 10% 이하로 떨어지고 대신 보일러식 난방이 9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급격한 전환을 주도한 것이 불란서주택이었으니, 불란서주택에는 보일러실이 필수였고, 이 용도로 마련된 공간이 (반)지하였던 것이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1960년대까지는 주택에 (반)지하 공간을 확보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욱이 1966년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 전체 주택의 37.8%가 무허가정착지에 자리잡고 있었던 바(Mobrand, 2008: 380), 양철이나 베니어판, 함석, 아스팔트 루핑 등의 열악한 자재로 비를 피할 수 있는 단층집을 올리는 게 급선무였던 당시

상황에서, 굳이 땅을 깊이 파는 수고를 들여 별다른 필요도 없는 지하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요컨대 (반)지하는 197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현대적 주택의 비주거용 공간으로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반)지하의 또 다른 중요한 용도는 ‘대피소’였다(대한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 2005c). 1968년 1월 21일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안보적 조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같은 해 5월 28일 당시 서울시장 김현옥은 1971년까지 서울시민 400만 명 중 350만 명을 전시에 대피시킬 수 있는 방공호 용도의 지하건설을 하겠다고 선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하여, 건축허가 시 2층 이상은 지하에 창고, 3층 이상은 건물수용인원의 70%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창고시설을 갖추도록 강제규정을 두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동아일보』 1968. 5. 28).⁸⁾ 같은 해 6월 27일 당시 무임소장관 김윤기 역시 중요산업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도 대피시설 설치를 권장하겠다고 밝히고,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각 시설에 방공호 설치를 규정하는 입법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다(『경향신문』 1968. 6. 27).

1970년 건축법 3차 개정 당시 제22조의3항으로 ‘지하층의 설치’에 관한 의무조항을 신설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안보적 고려에 따른 것이었다.⁹⁾ 이에 따라 서울시는 1970년 초부터 50평(약 165㎡) 이상 건물의 경우 지하시설을 갖출 때에만 건축허가를 내

8) 김현옥은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임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1971년 민방공사령관을 겸하는 내무부장관 자리에 복귀한다. 이때에도 그는 3층 이상의 건물과 일정 평수 이상의 신축건물에 지하실 등 대피시설을 의무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다(『동아일보』 1971. 12. 10; 『동아일보』 1972. 4. 17).

9) 1970년 1월 1일에 신설된 제22조3(지하층의 설치)은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지하층의 규모·구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3월 26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는 제106조(지하층설치기준)가 신설되었는데, 그 핵심은 “①인구 20만이상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도시의 행정구역내에서 지상층의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이에 더해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상층의 연면적이 6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에도 지하층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아울러 지하층의 규모·구조·설비의 경우, 1972년 건축법 4차 개정 당시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지하층이라 함은 바닥이 지표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까지의 높이가 그 층의 천정의 높이의 3분의 2이상인 것을 말한다.”는 문장이 삽입되면서, 해당층 높이의 2/3가 지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명시된다.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 해당층 높이의 1/3 이상이면 지하층(당시에는 ‘지층’)으로 정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층의 요건을 훨씬 강화한 셈인데, 이 역시 안보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고, 나아가 20평(약 66㎡) 미만의 일반주택에도 지하층 의무설치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경향신문』 1971. 12. 8). 이와 함께 60년대만 하더라도 50.0㎡ 전후였던 단독주택의 연면적은 7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70년대 후반이 되면 165㎡를 넘어서게 된다(임창복, 1988: 68). 요컨대 한편으로는 지하층 의무조항을 소규모 단독주택으로 확장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독주택의 규모 자체가 지하층 의무조항의 적용을 받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하여 1965년에는 전체 주택의 90% 가까이가 ‘지하층이 없는 1층 홑집’ 형태였는데 반해, 1978년 무렵이 되면 ‘지하층이 있는 2층 겹집’ 형태가 가장 전형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게 된다(임창복, 1989: 35~36).¹⁰⁾

요컨대 1970년대 들어 신축된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보일러실이나 대피소, 또는 창고 등의 용도로 (반)지하를 보유하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어떤 과정을 거쳐 (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전용된 것인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2) 단독주택의 ‘내부 분화’와 (반)지하의 주거 전용

(반)지하의 주거용 전용은, 단독주택이 ‘셋집’이라는 주거형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세대’를 위한 형식의 주택’으로 탈바꿈해 나간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전남일 외, 2008: 262). 이런 주거형태의 출현은 일찍이 1930년대 경성을 중심으로 등장한 ‘도시형 한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전남일, 2010: 81~98; 임창복, 2011: 241~268). 당시 경성은 급격한 이농에 따른 인구 증가와 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렸다. 이렇듯 주거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의 한옥을 임대용도에 적합한 형태로 개조한 것이 바로 도시형 한옥이다. 도시형 한옥에서 특징적인 공간은 임대 용도로 마련된 ‘문간채’ 또는 ‘행랑채’인데, 1930년대 경성의 일부 주택도면을 보면 가옥주가 마당에서 행랑으로 직접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등, 세입자와 가옥주의 생활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요점은 셋집을 수용하면서 기존의 단독주택이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에 좀 더 적합한 형태로 ‘내부적으로 분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국전쟁 이후, 그리고 특히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산업화와 맞물려, 이농 인구가 또 다시 늘어나고 주택 공급이 더욱 부족해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단독주택 내

10) 주거형태에 관한 더 상세한 논의는 임창복(2011)을 참고하라.

부의 분화 및 변모 경향 역시 강해졌다. 당시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세를 놓았으며, 이를 위해 단독주택을 개조했다(전남일 외, 2009: 174). 이 시기의 분화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내부의 ‘수평 분화’로 규정할 수 있는데, 당시 세입자들의 대표적 표상이 ‘결방살이’ 또는 ‘문간방 신세’였던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 앞서 언급한 ‘불란서주택’이 생겨나면서, 이제 단독주택 내부의 ‘수평 분화’뿐만 아니라 ‘수직 분화’가 나타났는데, 그 시작이 바로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전용한 것이었다(전남일, 2010: 126).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70년대 들어 대부분의 신축 단독주택에 보일러실이나 대피소 용도로 (반)지하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가옥주들이 보기에 이 공간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가옥주와 세입자의 생활 영역 분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임대용으로 안성맞춤이었다. 가옥주들은 ‘놀리느니 다만 얼마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공간을 졸속으로 개조해 임대하기 시작했다(전남일 외, 2009: 173~175).

당시 (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전용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된다. 우선 당시의 주택 도면들을 살펴보면 (반)지하로 통하는 별도의 계단이 발견된다(임창복, 1989: 61~63). 또 1975년 이후 『매일경제』의 주택매물정보에 ‘지하방—지하살이’ 아닌—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매일경제』 1975. 4. 11). 아울러 1977년 『동아일보』에는 이른바 ‘미니2층 지하방에 세들어 사는 형제가 세든 지 하루 만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졌다’는 기사가 실린다(『동아일보』 1977. 3. 9).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지하방은 1976년 10월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한 지 하루 만에 세입자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데서 당시 지하방의 주거 환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1975년 건축법 5차 개정은 그 이전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반)지하 주거를 공식적으로 승인한다.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 제19조의 명칭은 ‘주택의 거실설치의 금지’였는데, 1975년 5차 개정에서 ‘주택의 거실설치’로 바뀐다. 아울러 규정의 내용 역시 “주택의 거실은 지층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데서 “주택의 거실을 지표면이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물론 당시까지의 법령은 ‘셋집’이라는 주거형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반)

지하 ‘임대’를 공인하는 조치는 아니었고, 그 용도도 ‘거실’로 제한된 것이긴 했지만,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전용하는 것 자체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한 셈이었다.

3)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도입과 (반)지하 주거형태의 공식화

70년대 들어 (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전용되고, 단독주택이 이른바 ‘다세대 거주 단독주택’¹¹⁾으로 탈바꿈한 것은 결국 심각한 주택난 때문이었다. 하지만 80년대가 되어서도 주택난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악화되었다. 80년대 초 건설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 보급률은 70년 78.2%에서 75년 74.4%, 80년 71.2%, 그리고 84년에는 66.6%를 기록해 완연한 하락 양상을 띠었을 뿐더러, 도시의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54.3%로 사뭇 심각한 상태였다(임창복, 2011: 476).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다세대 거주 단독주택을 양성화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1984년 ‘다세대주택’, 그리고 1990년 ‘다가구주택’의 도입이 그것이다. 이는 (반)지하 주거형태와 관련해서 중대한 전기가 된다.

1980년대 들어 정부는 기존의 자가주택 건설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새로운 정책 노선을 도입한다(손세관, 2001: 291). 이에 따라 1982년 임대주택육성방안을 마련하고, 1984년에는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을 제정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성과는 미약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택한 방도가 ‘다세대 거주 단독주택’의 양성화 및 건설촉진이었다. 정부 입장에서 이는 여러 모로 매력적이었다. 우선 기존 단독주택지구에 주로 분포한 주택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별도의 대규모 택

11) ‘다세대 거주 단독주택’이라는 개념 자체는 1981년에 발표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다세대 거주 단독주택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보고서는 1984년 정부가 ‘다세대주택’을 제도화할 때 논리적 근거 노릇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김광중 외, 1994: 11~12).

이 연구는 셋집이 다수 분포하던 서울의 6개 지역(행당동, 구의동, 천호동, 신림동, 번동, 망원동)에서 진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의 단독주택이 통상적인 단독주택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독특한 주거형태로 탈바꿈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이 연구에 참여한 임창복은 이 주거형태의 세 가지 특징으로, 용도 전환에 의한 주거공간 확보, 출입구의 분리, 서비스공간의 부가를 든다(임창복, 2011: 478~483). 이러한 특징은 앞서 언급한 단독주택의 내부 분화의 결과이고, 이 내부 분화는 애초 1가구용으로 설계된 단독주택에서 가옥주와 세입자 등 여러 가구가 거주하면서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되는 마찰과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다. 요컨대 다세대 거주 단독주택의 본질은, 한 주택에 거주하는 다수의 가구가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는 독특한 공간 배치의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을 표준으로 삼는 당시의 건축규제 하에서 이런 공간 배치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주택 다가구’의 전기요금 누진적용을 둘러싼 논란이었다(『경향신문』 1979. 7. 31).

지를 조성하거나 기반 시설을 확보해야 할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되었다. 게다가 정부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별도 재정을 부담할 필요도 없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히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었다.

이렇게 해서 1984년 건설부는 새로운 건축법을 마련하여 ‘다세대주택’이라는 주거 형태를 도입한다. 당시 다세대주택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로서 2세대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의되었고, 1985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규모는 330㎡ 이하에 3층 이하, 세대수는 2~9세대로 규정되었다. 이후 집단민원을 우려한 건축기준 강화 조치가 잠시 검토·시달되기도 하지만, 1990년 4월 ‘다가구주택’이 도입되는 것과 맞물려 건축기준이 재차 완화되고, 이후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김광중 외, 1994: 12).

1984년 이후 다세대주택 관련 규정의 요점은 한편으로 ‘다세대 거주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처럼 사후적·편법적으로 단독주택을 개조하는 대신 설계와 건축 단계에서부터 가구별 독립생활을 반영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공동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적용받게 될 건축기준을 다세대주택에 한해서는 면제·완화하여 단독주택의 건축기준 수준으로 유지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일조권 규정, 옥외계단, 주거전용지역내 건축가능 여부 등 전반적인 건축기준 면에서 기존의 공동주택에 비해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하려는 부분은 바로 지하층 규정이다(김광중 외, 1994: 12~13).

앞서 살펴보았듯 1972년 건축법 4차 개정을 통해 그 이전까지 지하층 높이의 1/3만 지하에 있어도 되던 것이, 지하층 높이의 2/3가 지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규정이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1984년 건축법 12차 개정에서는 기존의 지하층 규정을 유지하되,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층 높이의 1/2만 지하에 있어도 지하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완화한다.¹²⁾ 말 그대로 ‘반지하’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셈이다. 이런 조치는 당시 보편화된 (반)지하의 주거용 전용을 현실로 수용하는

12) 당시 신문에서는 이 조치로 서울에서만 37만 3천동의 단독주택이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했는데, 1985년 현재 서울의 단독주택이 약 68만9천동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단독주택 두 집 가운데 한 집에는 지하실이 있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경향신문』 1984. 9. 26).

대신, 채광과 통풍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었다. 한편 이보다 조금 앞선 1984년 5월 7일에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에는 제47조(지하층의 설치)에 수도권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모두 지하층을 두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나, 사실상 수도권에 건설되는 모든 건물이 (반)지하를 갖추어야 했다. 아울러 일찍이 1973년 건축법시행령 개정 당시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지하층을 용적률에서 제외한 바 있었다. 이로써 (반)지하 확대에 유리한 제반 제도적 조건이 완비된 셈이었다.

하지만 (반)지하가 확대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1990년에 ‘다가구주택’이 도입된 것이다. 다세대주택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주택난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그러기는커녕 이른바 ‘전·월세대란’이 몰려왔다. 1990년에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86년 말에서 1990년 2월 말까지 전국 도시지역의 주택 매매가는 평균 47.3%, 전셋값은 무려 82.2%가 올랐다(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294). 1990년 한 해 무려 17명의 세입자가 자살하면서 전·월세 대란은 가히 ‘체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폭발적 쟁점으로 떠오른다.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심각한 주택난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사실, 곧 1983년부터 시행된 합동재개발로 당시까지 서울 전체 가구의 8% 가까이가 거주하던 무허가정착지가 해체되면서, 저렴주택 재고가 급격하게 사라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수현, 1996: 123~127).¹³⁾ 특히 서울 곳곳의 무허가정착지가 짧은 시간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해체되면서, 이곳에서 쫓겨난 주민들이 과거 임대료 수준과 비슷하거나 이를 크게 넘지 않는 주택으로 일시에 대거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주택 중에서도 저렴주택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저렴주택의 임대료가 더 높게 올라가는

13) 당시 무허가정착지 세입자들 및 인근 지역의 세입자들이 재개발사업 때문에 입은 피해에 관해서는 별다른 실증 자료가 없으나, 1990년대 초에 시행된 사례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1989년 10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1991년 3월에 재개발 사업 시행에 들어간 상도5구역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세로 환산하면 임대료가 일시에 평균 45.5%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대료 추가부담비율은 종전 임대료와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전에 임대료를 적게 지불하고 있던 가구일수록 더 큰 피해를 보는 사회계층적 역진성이 나타났다(김수현·박세훈, 1996: 20~23; 김수현, 1996: 123~127).

이런 현상은 서울에 남아 있던 저렴주택이 다시 한 번 대량으로 파괴된 최근의 뉴타운 사업 과정에서 비슷하게 관찰된다. 가령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세입자 158가구의 주거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 평균 주거비가 6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2009. 9. 30).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자살한 17명의 세입자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반) 지하 거주자였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점은 당시 정부관계자도 인정하는 바였다. 1989년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건설부 정책국장은 “재개발 사업이 해당지역 영세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주거사정을 더욱 악화시킨 요인이 되었으며, 특히 세입자들의 임대료 상승은 심한 주거불안을 초래”했다고 고백한다. 아울러 이대로 주택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주거의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국가안보와 자유경제체제에 도전하는 세력들의 온상을 제공할 가능성이 보이므로 획기적인 저소득층 주거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김수현, 1996: 103).¹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 중 하나가 해방 이후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인 ‘영구임대주택’이었다(김수현, 1996).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시의 저렴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고, 더욱이 입주 자격을 이른바 ‘영세민’으로 제한함으로써 대다수의 세입자가 배제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주택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렴주택’ 수를 늘려 이른바 ‘무주택 서민’과 ‘영세민’들에게 돌아갈 집을 공급하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했다. 다가구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반)지하는 정확히 이 맥락에서 등장했다.¹⁵⁾

다가구주택은 1990년 2월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도입되었고, 연면적 660㎡ 이하, 3층 이하(지하층 제외) 19세대 이하로 규정되었다.¹⁶⁾ 그리고 같은

14) 이는 특정인의 기우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동성 전 건설부 주택정책과장이 말하는 다음과 같은 일화는 당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말해준다.

당시 민심이 극도로 흥흥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당시 성남에는 강남 부유층 아파트로 파출부 나가는 아줌마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이 바뀌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몇 호는 파출부 누구 몫이다’는 식의 괴담이 돌았고, 이런 소문이 정보라인을 통해 청와대까지 보고됐다. 당시 문희갑 경제수석은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난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131~133).

영구임대주택의 정책결정과정을 연구한 논문(이영환, 1995: 90~91) 역시 비슷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15) 1990년 당시 건설부가 다가구주택 표준설계도로 예시한 것을 보면, 집주인 포함 5가구가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지하에 한 가구당 방 2개, 주방 및 거실 2개(화장실은 지상에 별도설치)를 갖추는 것으로 하여 2가구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듯 (반)지하는 정부가 ‘표준’으로 제시한 다가구주택의 구성적 일부였던 것이다(『서울신문』 1990. 2. 28)

16) 그 이전까지 세를 두던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200㎡ 내외였음을 감안한다면, 과거보다 3배 이상 큰 주택이 단독주택지구에 합법적으로 들어서게 된 셈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1985년 건축법 시행령에서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2~9세대로 규정한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었는데,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다가구주택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이다. 이 같은 다소 어이없는 현상은 당시의 주택난을 시야에서 놓친다면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해 4월 발표된 이른바 「4·13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서는 다가구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 지원책을 쏟아낸다(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295). 이렇게 해서 1990년대 이후 다가구주택은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다세대주택이 도입된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서울의 다세대주택의 건설 실적은 61,332호인데, 다가구주택은 처음 도입된 1990년 한 해에만 48,537호가 건설되고, 이듬해인 1991년에는 96,332호가 건설되어, 단 두 해만에 80년대 내내 다세대주택이 공급한 호수의 2배 이상을 달성한다(김광중 외, 1994: 109). 다가구주택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아파트보다 더 많이 지어진 주택이었고, 91년부터 93년까지는 전체 주택건설 실적의 절반을 상회했다(국토해양부, 2011b: 464). 1990년부터 1996년까지 한 해를 제외하고는 늘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건설된 주택이었던 다가구주택은, 1997년에 21%로 건설실적이 급감하더니, IMF 직후인 1998년에는 3000호 미만으로 떨어진다. 어쨌든 IMF 이전까지 서울시 주택건설 실적 중 다가구주택이 차지한 비중은 44%,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실적을 합하면 57%로, 서울시 주택건설 실적의 절반을 넘는 엄청난 비율이었다. 한편 IMF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주택공급량이 줄어들자,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라 2001년과 2002년 사이에는 다세대주택이 전체 건설되는 주택의 절반을 상회하면서 주택 건설을 주도하다가, 곧 아파트에 자리를 양보하게 된다.¹⁷⁾

이 다세대·다가구주택에는 거의 예외 없이 (반)지하가 딸려 있었다. 1994년의 연구에 따르면, 다세대주택 거주가구의 약 20%, 그리고 다가구주택 거주가구의 약 30%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중 외, 1994: 110~113). 이에 따라 2000년 초까지 늘어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반)지하 가구수를 추산하면 약 20만 가구에 이르고, 91년까지 늘어난 가구 수만도 5만6천 가구에 육박한다. 그런데 1983년 합동재개발사업이 시행될 당시 재개발구역에 거주한 가구수가 서울시 전체 가구의 8%에

한편 1990년에 다가구주택을 도입하면서 다세대주택에 대한 기준 역시 완화되어, 66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두 주거형태는 규모와 세대 수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단지 분양가능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따름이었다.

17) 2010년 현재 서울시의 다가구주택은 총 1,114,843호로 전체 주택의 33%를 차지하며, 다세대주택은 총 463,417호로 14%다. 둘을 합치면 총 1,578,260호로, 47%다.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1,485,869호로 44%인데,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에 사는 가구수가 더 많은 셈이다. 단독주택을 포함한 이른바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더 많은 것이다(서울특별시, 2012: 303).

달하는 18만6천 가구로 추산되고, 특히 1983년~88년 사이에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출된 가구가 4만6천 가구로 추산되는 바(김수현, 1996: 123), 즉 단순계산으로도 (반)지하는 91년 말까지 무허가정착지에서 이출된 가구를 모두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2000년 초까지 과거 무허가정착지에 거주한 모든 가구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성장한다. 실제로도 1980년대 후반 사당동 무허가정착지가 재개발되면서 사유지의 정상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의 17.3%가 (반)지하로 흘러들어갔거나, 2000년대 초 이른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난곡이 재개발된 후 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의 47.4%가 (반)지하로 향했다는 것 등이 조사된 바, (반)지하가 무허가정착지의 가장 유력한 대체재 노릇을 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은·조옥라, 1992; 신림종합사회복지관, 2002).

요컨대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반)지하를 통해, 무허가정착지 해체로 사라진 저렴주택의 재고가 신속하게 복구되지 않았다면, 당시 ‘체제 위기로까지 발전할 기미를 보이던 주택난의 불길’이 이렇게 빨리 잡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주택난, 그 중에서도 저렴주택 재고의 급락을 다세대·다가구주택이라는 민간임대부문 내 (반)지하 주거형태의 팽창을 통해 대처한 셈이다.

아울러 이는 도시빈민들의 주거가 ‘비공식 주택시장’에서 ‘공식 주택시장’으로 포섭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지하 주거형태는 공식 주택시장 안에서는 최하층을 점하고 있지만, 어쨌든 공식 부문인 한에서 주택시장 전반의 움직임에 전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빈민들의 주거비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 (반)지하 주거의 실태와 거주자의 특성

1) (반)지하의 규모와 전국적 분포

(반)지하의 규모에 관한 가장 신뢰할 만한 공식 통계는 2005년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다. 이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전국 (반)지하 가구는 총 586,649가구, 1,419,784명이고, 2010년 현재는 각각 총 517,689가구, 1,157,550명이다. 전국 (반)지하 가구 중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반)지하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과

2010년 모두 95%로, (반)지하 가구의 절대 다수는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005년에 비해 2010년에 일반가구 대비 (반)지하 가구 비중은 전국적으로 4%에서 3%, 서울의 경우 11%에서 9%로 감소하였다. 아울러 2005년 대비 2010년 (반)지하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12%, 서울의 경우 13% 감소하였다. 서울의 경우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반)지하 가구가 4만6천 여 가구나 줄어든 셈인데, 이는 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2003년 도입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 뉴타운 사업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박신영, 2011: 214).¹⁸⁾

<표> 2005년과 2010년 사이 (반)지하 가구의 전국적 분포 및 증감

(단위: 가구, %)

구 분	일반가구		(반)지하 가구		일반가구 대비 (반)지하 가구 비중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전국	15,887,128	17,339,422	586,649	517,689	3.7	3.0
서울	3,309,890	3,504,297	355,427	308,660	10.7	8.8
경기	3,329,177	3,831,134	159,281	142,556	4.8	3.7
인천	823,023	911,850	44,707	41,187	5.4	4.5

출처: 통계청 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반)지하 밀집지역의 분포와 그 형성 과정

2010년 현재 (반)지하 거주가구가 가장 많은 5개 시군구는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관악구, 중랑구, 광진구, 은평구다. 아울러 (반)지하 거주가구 비율이 높은 5개 시군구는 서울 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은평구, 관악구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현재 (반)지하 거주가구가 높은 지역들은 과거 이른바 ‘단독주택지구’로 불리던 곳이라는 점이다(홍인옥, 1997: 44~60). 단독주택지구는 1960년대 이후 서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

18)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5년 사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택과 (반)지하 거주가구가 크게 줄어드는 등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1980년대 합동재개발에 의한 무허가정착지 해체도 양적인 면에서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이면은 저렴주택의 급격한 축소와 유례없는 주택난, 세입자의 연쇄 자살과 주거비의 급격한 상승이었음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

응하여 주로 1960년대~70년대 사이에 조성된 신흥주택단지, 단독주택 중심으로 비교적 저밀도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해 도로 및 가로망이 정비되고, 제반 시설이 함께 확충되어 생활환경이 양호한 편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도시 인구의 증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도시 주변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무허가정착지가 확대되어 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특히 강남개발로 상징되는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되어 아파트지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요컨대 1980년대 초 무허가정착지 해체가 본격화되기 전 서울에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세 부류의 주거 지역이 있었던 셈이다. 그러다가 한편으로 강남 재개발에 이어 각종 신도시 개발로 대규모 택지가 고갈되고, 다른 한편으로 무허가정착지 해체로 저렴주택의 재고가 크게 감소하면서, 비교적 저밀도 상태였던 기존 주거지역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명분으로 단독주택지구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다. 오늘날 (반)지하가 과거 단독주택지구였던 곳에 밀집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¹⁹⁾

19) 실제로 관악구 안에서도 2010년 현재 전체 가구의 22%가 (반)지하에 사는 등 (반)지하 가구가 주로 밀집해 있는 신림1동(현 신원동), 신림3·13동(현 난곡동), 신림4동(현 신사동)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형성된 ‘신시가지로, 과거 무허가정착지가 밀집했던 봉천동 일대나 (흔히 ‘난곡’으로 불린) 신림7동과는 주거환경이 사뭇 달랐다. 심층면접의 두 응답자는 이 차이에 관해 생생히 증언했다.

공게 이 동네[신림동 일대]가 30만 단지였어, 옛날에. 30만 단지. 이 동네가 발전이 될 때, 전부 다 허허벌판이었거든. 허허벌판이었는데, 인자 요 순환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순환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이게 30만 단지라고 생겼어요. 시에서 30만 단지로 해 가지고 발전이 돼서 집을 지었는데, 요 집을 지으니까 자꾸만 지하에다 올라간단 말이요 그 때부터. 그 전에야 무슨 지하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지. 여기가 좀 새로 70년대 새로 지은 집들이요. 부촌이었지. 아이 봉천동하고 신림동하고는 번지가 틀려졌어요. 아 옛날부터 시내 나가서도 신림동 산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냐 그러지, 봉천동 질이 나쁘게 생각을 했지요. 서울대학교, 길이 생기고, 봉천동도 많은 저기가 됐지, 솔직한 얘기로 그 전에는 신림동하고 봉천동하고는. 그리고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봉천동 사람들이. 술처먹고 지랄하는 놈들도 봉천동이고. 신림동에서는 운순했지. 그때만 해도 참 좌우지간 경찰서를 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봉천동 사람들이 10명이면은, 신림동 사람들은 3명 4명 그랬지. (사례 A)

저 산동네[신림7동]에서 우리 살 때도 여기[신림 3동·13동]는 새 집이었어요. 다 되어 있는 곳이며 여기가. 내가 88 올림픽 때도 여기 왔을 때 다 이대로 있었어요. 나 사당동 살았었는데, 사당동 살다가 아는 사람 통해서 여기[신림7동] 올 때 이 집이 다 그대로 있었어.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 동네가 괜찮다고 했죠. 저 꼭대기에 아파트 짓기 전에는 이 동네가 괜찮다고 한 동네였었는데, 꼭대기가 아파트를 짓고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낙오되는 동네가 됐어요. 그래갖고 시내에서 없는 사람들은 다 들어와, 지금 여기가. 혼자 사는 노인네들도 다 들어오고. 이 동네가 완전히 진짜 빈민촌이 돼버린 거야. (사례 N)

<표3> (반)지하 거주가구가 가장 많은 5개 시군구

(단위: 가구, %)

		전체가구		(반)지하 가구		전체가구 대비 (반)지하 가구 비중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1	경기도 성남시	335,614	922,530	33,915	73,559	10.1
2	서울시 관악구	217,359	502,311	25,096	51,343	11.5
3	서울시 중랑구	144,951	393,867	22,881	48,624	15.8
4	서울시 광진구	133,468	348,090	20,067	42,228	15.0
5	서울시 은평구	154,923	439,103	19,712	46,523	12.7

출처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표4> (반)지하 거주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5개 시군구

(단위: 가구, %)

		전체가구		(반)지하 가구		전체가구 대비 (반)지하 가구 비중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1	서울시 중랑구	144,951	393,867	22,881	48,624	15.8
2	서울시 광진구	133,468	348,090	20,067	42,228	15.0
3	서울시 강북구	117,072	318,151	15,572	35,007	13.3
4	서울시 은평구	154,923	439,103	19,712	46,523	12.7
5	서울시 관악구	217,359	502,311	25,096	51,343	11.5

출처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3) (반)지하 거주자의 인구적 특성

한편 지난 2010년 실시된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반)지하에 는 월 평균소득이 199만 이하인 저소득층이 많이 산다. (반)지하 거주자의 57%가 저 소득층이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은 4.5%에 그쳤다. 반면 지

상 거주자의 경우 월 평균소득 199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35.5%, 400만원 초과 고소득층은 18.9%로, (반)지하 거주자보다 각각 21.5% 적고, 14.4% 많았다. (반)지하 거주자의 소득 분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8%가 모여 있는 4분위(101~199만원)였는데, 이는 소위 '노동빈민'(working poor)에 해당하는 이들이 (반)지하에 다수 거주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5> 거주층별 소득 분포

(단위: 가구, %)

소득	일반가구		지상		(반)지하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69만원 이하	1,633,019	9.4	1,555,064	9.3	75,648	11.8
69~101만원	1,832,668	10.6	1,716,830	10.3	109,919	17.2
101~199만원	2,839,581	16.4	2,650,639	15.9	178,917	28.0
199~298만원	3,734,504	21.5	3,575,913	21.5	150,948	23.6
298~400만원	4,118,283	23.8	4,007,806	24.1	94,323	14.8
400만원 초과	3,181,503	18.3	3,147,125	18.9	28,718	4.5

출처 : 국토해양부 2010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나 지상가구와 비교할 때, (반)지하 가구는 연령 분포 면에서도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29세 이하 가구주 비중이 전체 (반)지하 가구 중 12.9%로, 지상가구에 비해 5.2%나 높았다. 이런 사실은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이 주로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에 산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거주자 중 노인 비율이 낮다는 것, 그리고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연령대가 40대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반)지하에 사는 다문화가구의 비율이 11.3%로, 일반가구보다 무려 3.8배 가량 높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상의 통계는 빈민, 청년, 이주자 등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 집단이 (반)지하에 많이 살 것이라는 추정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표6> 거주층별 연령 분포

(단위: 천 가구, %)

가구주 연령	일반가구		지상		(반)지하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29세 이하	1,370	7.9	1,294	7.7	67	12.9
30~39	3,368	19.4	3,260	19.4	97	18.7
40~49	4,432	25.6	4,279	25.5	141	27.2
50~59	3,773	21.8	3,652	21.8	112	21.6
60~69	2,364	13.6	2,304	13.7	55	10.6
70세 이상	2,033	11.7	1,984	11.8	45	8.7

출처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표7> 일반가구와 다문화가구의 거주층 비교

(단위: 천 가구, %)

가구구성	가구	지상		(반)지하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일반가구	17,339	16,773	96.7	518	3.0
다문화가구	387	338	87.3	44	11.3

출처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4) (반)지하 가구의 주거실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실태 역시, 저소득층이 (반)지하에 다수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박은철·이주현, 2009: 29~45). 조사대상은 월임대료 보조를 비롯한 서울시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수혜가구 282가구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가구가 아닌 기타 저소득 임차가구 215가구였는데,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34.4%인 171명(옥탑 거주를 합하면 43.5%인 216명)이 (반)지하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관에서 2011년 9월 기준으로 서울형 주택마우치를 수급하고

있는 3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구가 전체의 68.6%였다(박은철, 2011: 31~38). 이는 2010년 11월부터 기존의 월임대료 보조 정책이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전환되고, 특정바우처 제도가 신설되면서 그 대상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인 가구이면서) '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전체 조사대상의 70%에 가까운 가구가 (반)지하에 사는 셈이므로, 이들의 실태를 통해 빈민이면서 (반)지하에 사는 주거빈민이기도 한 사람들의 생활 실태를 대략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45.7세이며, 이혼/사별한 경우가 57.1%였다. 가구주의 직업은 단순노무직(48.6%)와 판매·서비스직(14.3%) 등으로 나타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균 가구원수는 3.5명이었고, 평균 가구소득은 111만원이었다. 평균 가구재산은 1796만원인 데 반해, 가구부채는 평균 2644만원으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빈곤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인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의 경우 (임대차시장의 전환이율보다 낮은 국고채 수익률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평균 38.2%이었고, RIR이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62.9%에 달했다. 즉 소득이 낮고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의 70% 가까이 (반)지하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환경은 열악한 셈이다. 실제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많은 가구가 심각한 누수 및 곰팡이 문제를 호소했으며, 인근에 저렴한 주택을 구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옥주에게 개·보수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를 지불하면서도 주거환경은 열악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빈곤한 (반)지하 거주자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3장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표상의 형성과 변화

앞 장에서 우리는 (반)지하 주거형태의 도입 및 확산을 규정한 사회적 조건, 그리고 (반)지하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의 분석을 전제한 채,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표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였는지를 주로 살펴볼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지하가 급속도로 팽창하기 전 도시빈민들의 지배적인 주거형태였던 ‘문간방’(또는 ‘결방’) 및 ‘판자촌’(또는 ‘달동네’)에 관한 사회적 표상을 간략히 살펴볼 것인데, 이는 (반)지하 주거형태가 애초에 가졌던 표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주거빈곤의 사회적 표상 변화: ‘문간방’, ‘달동네’, 그리고 ‘(반)지하’

‘문간방’이라는 말은 일찍이 1921년, ‘결방’은 1930년부터 신문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1959년 신문보도에서는 ‘집이 없는 시민’을 “대부분은 남의 집에서 결방살이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동아일보』 1959. 5. 3). 당시 빈곤, 특히 주거빈곤의 대표적 표상 중 하나가 ‘결방살아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결방살이를 하는 빈민들의 정체성이나 상태 곧 ‘결방살이 신세’는 대개 모종의 ‘설움과 자연스레 연결되곤 한다. 1973년 한 연재소설에는 “세상엔 서러운 일도 많지만요, 결방살이 하는 처지처럼 서글픈 일도 없는 거예요.”라는 문장이 등장한다(『경향신문』 1973. 1. 17). 이 설움이 어디서 연원하는지는 아래 기사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남의 집 문간방에서 집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우는 아기의 입을 틀어막아야 하는 어미의 눈에는 한 맺힌 이슬이 핀다. 예나 지금이나 도시서민의 첫째 소원은 제 땅에 제 집 짓고 사는 것이다. (『조선일보』 1977. 10. 30)

즉 ‘문간방 신세’ 또는 ‘결방살이 신세’로 표상되는 당시 주거빈곤이란, 집주인이 주는 눈치와 괘시로 인한 설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당시의 주거빈곤에서 가장 문

제화됐던 것은 독립적인 생활공간의 부재였으며, 따라서 주거빈곤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보다 독립적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표상되었다.

‘문간방과 함께 도시빈민의 대표적 주거형태였던 ‘판자촌’은 1956년(‘판자집’은 1929년)부터 신문에서 발견되는데, 1979년에 방영된 TBC 드라마 『달동네』를 계기로 ‘달동네’라는 별칭을 얻게 된다. 당시 이 드라마는 대단한 인기를 얻었고, 이 이름을 딴 음식점과 대폿집이 강남 등지의 아파트촌에 생겨났다고 보도되는데, 그 이유는 이 작품에 “서민의 애환이 사실적으로 그려진” 탓으로 풀이되었다(『동아일보』 1981. 1. 8). 아울러 1989년에는 서울시의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가난 속 자족(自足), 달동네는 건강하다」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다(『경향신문』 1989. 7. 8). 이 기사에서는 달동네주민 대부분이 현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의사가 없고, 63.5%가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며, 90.7%가 문제자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말 그대로 ‘건강’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도한다. 여기서 보듯 달동네는 이른바 ‘희망의 빈곤’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표상된다.²⁰⁾ 이와 정반대로, ‘해방 이후 최초의 대규모 도시빈민투쟁’으로 기록된 1971년 광주대단지사건의 충격이 아직 남아 있는 1975년, 성남시의 주부 50여명이 “밥 지을 물을 달라”며 물통을 들고 시청에 몰려와 항의한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서는, 도시 주변부의 판자촌을 ‘국가안보와 국민총화에 대한 위협’으로 표상한다(『동아일보』 1975. 6. 18). ‘달동네 인삼’과 사뭇 다른 표상이지만, 둘 모두에 공통점이 있다면 판자촌, 그리고 그곳에 사는 도시빈민들에게 모종의 집단성이 있다고 표상한다는 점이다.

이상의 두 가지 주거형태 및 그와 결부된 표상과 비교할 때, (반)지하 주거형태는, 그것이 집주인에 대한 것이든,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것이든, 모종의 ‘자기완결성’과 ‘독립성’을 갖는 것으로 표상된다.

예전에는 내 집 없는 결방살이의 설움을 ‘내호살이’ 니 ‘협호신세’ 라는 푸념으

20) 흔히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난곡의 ‘달동네 인삼’을 묘사하는 다음 기사 역시 궤를 같이 한다(조문영, 2001: 89).

이곳에선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밤 9시가 되도록 골목에서 어린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옆집에서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도 아는 곳. 누구네 할머니가 아프지, 누구네가 무슨 일 때문에 싸웠는지, 누구네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슬픈지...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 (『국민일보』 1998. 6. 10)

로 대신했다. 결방살이라 하지만 대체로 행랑채나 대문 옆에 붙은 문간방에 온 가족이 바글바글 섞여 살아야 하니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나위도 없었다. 행여 주인의 비웃장을 건드릴까봐 오금을 못 펴고, 들며 나는 객손님에게 누추한 살림살이를 그대로 내보여야 하는 서글픔이 뒤따랐다. (...) 주택의 구조나 주거양식이 달라진 오늘날에 와서는 과거처럼 ‘협호살이’의 결방신세가 아니라, 대부분 지하실을 개조한 비좁은 단칸방에서 살아야만 한다. 비록 햇빛이 안 들고 습기가 몸에 배는 우중충한 환경 속에서 살 망정 일 년 내내 주인 얼굴을 한 번도 안 보고 살 수는 있다. ‘협호살이’처럼 성가시게 들락날락하는 주인집 식구나 손님의 문시중을 듣지 않아도 되고 웅색한 살림살이를 결눈질할 사람은 없다. 단 한 가지 질색은 요즈음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 오르는 사글세 전세값에 천하장사가 없다는 점이다. (『세계일보』 1990. 4. 12)

이른바 ‘전·월세대란’으로 2월부터 세입자의 자살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4명이 동반자살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실린 이 사설에서는, 오늘날 (반)지하하면 주로 문제로 제기되는 ‘햇빛이 안 들고 습기가 몸에 배는 우중충한 환경’이 별로 문제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반)지하 생활은 ‘결방신세’에 비해서는 더 나아진 것으로 평가되는데,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되는 것은 세입자 가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폭등하는 주거비만 아니라면 (반)지하는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주거형태로 볼 수 있다는 가치평가가 여기에서 작동하고 있다.

(반)지하 주거형태의 ‘독립성’을 들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른 기사에서도 발견된다.

직장생활 6년째인 잡지사 기자 신모양(30)은 최근 부모 허락아래 회사부근에 집을 얻어 독립했다. 전세금 3천5백만원을 주고 18평 반지하 연립주택을 구한 신씨는 “의정부 집에서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회사까지 출퇴근 시간만 3시간이상 걸려 부모님께 따로 나가살겠다고 졸랐다”며 “처음에는 결혼도 안한 아이가 웬말이라고 펄쩍 뛰셨지만 결국 시간을 아껴 취미활동과 어학공부를 하겠다는 끈질긴 설득 끝에 허락받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5. 5. 18)

서울대 4학년 김모군(25)은 3년간의 하숙생활을 청산하고 봄 원룸을 장만했다. 8

평 남짓한 방에는 화장실이 딸려있고 에어컨과 싱크대, 가스레인지가 설치돼 있다. 비용은 전세 3천만원. 반지하 방이라 규모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 원룸형 자취방이 학생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사생활이 완벽하게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 서대문구 금화터널 근처 원룸형 빌라에서 생활하는 한 대학원생은 “여자 친구가 자주 놀러오는데 하숙집은 너무 불편했다” 며 “원룸은 주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좋다” 고 전했다. 또 같은 건물에 사는 서강대 2학년 박모군은 “원룸은 이웃 학생들과 억지로 어울리지 않아도 돼 마음이 편하다” 고 밝혔다. (『경향신문』 1997. 5 .24)

각 기사에서 (반)지하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표상되는 것은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부모의 집’, 그리고 ‘주인 눈치를 보아야 하거나 이웃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는 하숙집’이며, 그에 비해 (반)지하가 표상하는 것은 ‘도시로의 진입’과 ‘독립’, ‘사생활’ 등의 가치다. (반)지하는 청년 또는 더 넓게 말해 사회의 ‘신입자(newcomer)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로 이 같은 가치가 구현되는 삶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수단 노릇을 한다는 점에서, 역시 나름대로 긍정적인 주거형태로 표상된다.

여기서 요점은 오늘날 ‘(반)지하 신세’라는 말이 표상하는 것처럼, (반)지하라는 주거형태가 애초부터 ‘절망의 빈곤’이라는 심상과 결부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기존의 주거형태에 비해 ‘독립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주거형태로 표상되기도 했으며, ‘도시’와 ‘독립’, 그리고 ‘사생활’ 등 이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여기는 가치들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징검다리’나 ‘교두보’로 표상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때 긍정적인 것으로 표상되었던 (반)지하 주거형태는 어떻게 해서 오늘날과 같은 부정적 표상을 갖게 된 것일까?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애초 (반)지하 주거형태가 도입될 당시 예상치 못했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또는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했던 단점이 전면적으로 문제화되는 경우. 둘째, (반)지하 주거형태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측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심지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화되는 경우. 셋째, (반)지하를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주거형태로 표상할 수 있게 해 준 기준점이 바뀌게 되는 경우. 넷째, (반)지하라는 ‘징검다리’ 또는 ‘교두보’를 통해서 도달하려 했던 더 나은 주거형태와 삶에 이

르는 것이 끊임없이 ‘유예’되면서, (반)지하가 임시적이고 과도적인 거처에서, 훨씬 더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거처로, 극단적으로는 일종의 ‘연옥’처럼 벗어날 기약이 없는 ‘유폐’의 장소가 되는 경우. 다섯째, (반)지하가 한 개인의 주거사에서 ‘초기’뿐만 아니라 ‘중기’나 심지어 ‘후기’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지난 20여 년은 이런 가능성들이 실제로 현실화되면서 (반)지하에 관한 애초의 가치평가가 전도되고 악화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변화를 겪은 것은 (반)지하라는 주거형태의 표상만이 아니라, (반)지하에 사는 (주거)빈민들 및 그들이 처한 빈곤의 표상이었다. 다시 말해 (반)지하에 관한 표상에 점점 더 절망적인 의미가 들러붙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 및 그들이 겪는 빈곤이 점점 더 절망적인 것으로 표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마지막 절에서 간략히 논할 것이다.

2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표상의 전반적 추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1975년부터 1989년까지 (반)지하 관련 단어가 제목과 본문에 들어간 기사를 검색하면 40여 건 정도가 수집되는데, 특히 1984년 이전까지 9년간의 기사는 총 10건에 불과하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기사는 1975년부터 『매일경제』 부동산 매물정보에 실린 (지하실이 아닌) 지하방에 관한 언급, 그리고 1977년 3월 9일자 『동아일보』에 (1976년에 지은) ‘미니2층집’ 지하방에 세들어 살던 형제 2명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숨졌다는 기사 정도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반)지하 주거형태의 등장 및 그에 관한 의미 부여를 담은 최초의 보도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84년이다(『매일경제』 1984. 9. 26, 『동아일보』 1984. 9. 26, 『경향신문』 1984. 9. 26). 당시 기사에서 주로 부각시킨 것은 주거환경의 개선이다. 단독주택 지하실의 상당수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지상노출부분이 작아 채광·통풍 등에 문제가 많으므로, 지상노출부분을 늘려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반)지하를 포함한 셋방에 화장실과 부엌, 외부계단 등 별도의 생활편의시설을 둘 수 있게 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 환경과 독립성을 증진시키겠다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었다. 앞서 지적하였듯, (반)지하라는 주거형태가 그 이전까지 셋방의 지배적 형태였던 이른바 ‘문간방’에 비해 진

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 등장한 것은 이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84년 이후 관련 보도 역시 30여 건에 그치는 등 아직 커다란 변화 조짐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반)지하 관련 보도가 결정적인 전기를 맞게 되는 것은 1990년이다. 이 한 해에만 총 130여 건(KINDS 기준)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1990년 이전의 모든 기사의 숫자를 3배 이상으로 뛰어넘는 것일뿐더러, 그 후 (반)지하 관련 보도가 다시 100건을 넘어선 것은 2001년(130여 건)에 이르러서였다.

이 해 (반)지하에 관한 보도를 주도한 범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1990년 벽두부터 시작된 이른바 ‘전·월세대란’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비관자살 보도다. 2월 13일 경기도 성남시 (반)지하 거주자의 자살을 필두로 이 한 해에만 무려 17명의 세입자가 목숨을 끊었는데, 그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반)지하 거주자였다. 전세대란으로 세입자들이 “2층서 지하로, 서울서 교외로”(『경향신문』 1990. 2. 23) ‘하향·외곽이동’을 하는 가운데, (반)지하는 끊임없이 내쫓긴 세입자가 도시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대는 보루로 표상되었다. 특히 (반)지하 거주자들의 연쇄 자살은 ‘더 추락할 곳도, 더 떠밀릴 곳도 없는’ 도시빈민의 마지노선으로서 (반)지하라는 표상을 생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둘째, 부모가 일 나가며 잠가 놓은 (반)지하 방에서 화재로 질식사한 두 아이의 죽음에 관한 보도다. 이 사건을 다룬 기사가 3월 한 달에만 13건 가량 쏟아져 나왔는데, 과거 (반)지하 관련 사건 보도가 단순 사실 보도에 그쳤다면, 이 기사를 계기로 (반)지하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이고 생애사적인 보도가 등장한다. 아울러 이 사건 보도에서 (반)지하라는 주거형태와 ‘고립’을 연결시키는 표상이 등장한다. 이 사건을 다룬 한 기사는 “이들이 사는 주택에는 모두 6개의 지하방이 있으며 각각 독립구조로 돼 있다.”는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한겨레』 1990. 3. 10). 여기서 암시되는 것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 6가구나 되는데도, 가령 농촌 마을이나, ‘도시 속의 농촌’이라고 불렸던 무허가정착지와 달리, 서로 교류가 없는 공간, 결국 이웃의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방치하는 고립되고 단절된 공간이 바로 (반)지하라는 표상이다.

셋째, 1990년 9월 들어 수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반)지하에 집중되면서, (반)지하가 다시 한 번 여론에 가시화된다. 실제로 1990년 이래 (반)지하에 관한 전국종합

일간지의 기사 중 280여 건을 차지하는 것이 수해 관련 기사로, (반)지하 관련 기사 중 가장 많은 축에 속하는데, 그 시발점이 1990년이였다. 1990년 이래 수해는 무허가 정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떨어지는 (반)지하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반)지하에 관한 논의와 입장을 강제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 노릇을 하게 된다.

이렇듯 1990년은 보도 건수나 내용, 접근 방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표상 형성의 결정적 계기였다. 1990년 이후 2000년까지 (반)지하 관련 보도는 평균 40건 이하에 머물며, 그 내용이나 접근 방식 면에서도 1990년에 형성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지하 관련 보도가 1990년 수준으로 다시 증가한 것은 130여 건을 기록한 2001년에 이르러서인데, 이는 1990년에 그랬듯 이 해에 큰 수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01년 당시 서울 등 수도권 주택 9만2천여 가구가 침수되었는데, 피해 가구 중 80%에 육박하는 7만 가구 이상이 (반)지하에 사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1990년 이후 10년 이상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반)지하라는 주거형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한다. 2001년 이후 2012년까지 (반)지하 관련 기사가 평균 약 130여 건 정도인 데서 알 수 있듯, 10년 전과 달리 (반)지하는 꾸준히 문제화된다. 2001년 처음으로 (반)지하 주거형태를 (점진적으로나마) 없애겠다는 정책 당국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2002년에는 <한국도시연구소>를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형태 및 거주자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2004년에는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좀 더 큰 규모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다음 해인 200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항목에 ‘거주층’을 묻는 항목이 포함됨으로써 2006년 사상 처음으로 (반)지하에 관한 공식 통계가 확보된다. 이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5년 현재 (반)지하 거주자가 58만 6천여 가구(142만여 명)에 달하며, 서울 340만 가구 중 무려 10.7%(35만5천 가구)가 (반)지하에 산다는, 과거 실태조사의 추정치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가 보도되면서, (반)지하는 이제 과거 무허가정착지를 대체하는 도시빈민의 가장 중요한 주거형태라는 표상을 얻게 된다. 게다가 2001년 이후 거의 연례행사처럼 수해가 벌어지고, 이 피해가 (반)지하에 집중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반)지하에 관한 보도는 더욱 증가한다. 일례로 2010년 관련 보도는 260건 가까이, 2011년에는 220건 가까이 올라간다. 이 과정에서 마침내 2010년 (반)지하 거주자는,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라는 자격으로 서울시의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

함됨으로써, 공적 부조의 대상으로 공인되기에 이른다.

2001년 이후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반)지하를 소재로 한 예술적 형상화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2001년 이후 (반)지하를 소재나 주제로 다룬 문학 작품이 최소 30편 이상 출판됐으며, 2012년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서울신문』의 신춘문에 당선작이 모두 (반)지하를 배경이나 소재로 삼는다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88만원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 세대의 주요 거처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표상되면서, (반)지하를 비롯한 주거형태를 통해 청년 세대의 처지와 정체성을 읽으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반)지하의 사회적 표상이 어떤 계기 및 내용과 연결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이 보도에 (반)지하의 사회적 표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이것이 오늘날 빈곤의 표상과 관련하여 갖는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3.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표상의 특성

1) (반)지하: 열악한 주거

(1) 수해 보도와 ‘낮은 곳’으로서의 (반)지하

(반)지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해다. 실제로 지난 1990년 이래 (반)지하에 관한 전국종합일간지의 기사 2100여 건 중 280여 건을 차지하는 것이 수해 관련 기사다. 앞서 지적했듯 수해 관련 기사는, 과거 무허가정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떨어지는 (반)지하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반)지하에 관한 논의와 입장을 강제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로 작동했다. 실제로 (반)지하에서 벌어진 사건이나 정부 정책 발표를 단순 보도하는 데 그치지 일췌였던 언론들이, 초보적으로나마 (반)지하 주거형태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를 문제화하려고 시도한 것은 1990년 수해 이후부터였다. 가령 다음 기사는 이런 접근을 잘 보여준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극심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연립주택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양

성화, 앞으로 이들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지하셋방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들 지하셋방이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아일보』 1990. 9. 10)

최근 서울지역에서는 극심한 주택난과 함께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셋방에 거주하는 가구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이들 지하셋방은 상당수가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가건물로 배수 환기시설이 제대로 안 되는 등 거주환경이 열악해 홍수피해와 연탄가스중독 등 사고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올 여름 장마기간 동안 서울시내 노원 성북 동작 중랑 도봉구 일대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지하셋방이 대부분 침수돼 주민들이 큰 피해와 불편을 겪기도 했다. (『동아일보』 1990. 9. 10)

이 기사들에서는,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는 것, (반)지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극심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등 당국이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양성화했기 때문’이라는 것, (반)지하가 주로 분포된 지역은 어디어디이고 그 주거 환경은 어떻다는 것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종합적’인 접근은 수해 기사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다.

1990년 이후에도 수해는 (반)지하에 관한 표상 및 문제화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다. 1990년 이후 (반)지하 관련 보도를 보면, 수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반)지하에 관한 보도 및 관련 대책에 대한 토론도 줄어들다가, 수해가 벌어지면 다시 보도와 대책 관련 논의가 늘어나는 규칙성이 관찰된다. 가령 서울의 4만여 세대가 침수되고, 그 중 70~80%가 (반)지하가구인 것으로 조사된 1998년,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 주택 9만2천여 가구가 침수되고, 그 중 7만 가구 이상이 (반)지하에 사는 것으로 조사된 2001년에 각각 60여 건과 130여 건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반)지하에 관한 다소 심층적인 보도도 늘어났다.

이는 보도 빈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나타난 (반)지하에 관한 최초의 정책은 수해 대책이었다. 아울러 (반)지하 자체에 초점을 맞춘 사실상 최초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 역시 대수해를 겪은 2001년 다음 해인 2002년이였다. 2000년대 이후 (반)지하에 관한 기사가 그 전 10년에 비해 훨씬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2002년, 2003년, 2006년, 2010년, 2011년 등 가히 연례행사처럼 수해가 반복된 사정

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듯 수해의 발생과 (반)지하의 가시화는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따라서 (반)지하에 관한 표상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역시 수해였다.

수해가 낳은 (반)지하의 표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한 신문이 제목으로 삼은 「'낮은 곳' 할킨 수마 ... 반지하 주민 시름」이라는 문구다(『내일신문』 2006. 7. 18). 여기서 (반)지하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 '낮은 곳'에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물이 결국 흘러들어가 피해가 집중되는 곳이라는 의미, 그리고 경제적·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가 그것이다. 즉 (반)지하란 '낮은 사람들이 사는 '낮은 곳'으로 표상된다.²¹⁾

수해는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안전한 내부 공간을 확보하여 거주자의 신체적·정신적 온전성(integrity)이 유지·재생될 수 있게 한다는 집의 본질적 차원을 파괴하는 재난이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계급과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불평등과 빈곤을 체험하고 상기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평소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통을 겪던 계층이 이번 물난리 때에도 역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모습” 앞에서 어떤 이는 ‘죄없는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우리들 삶의 참혹한 부조리’를 느끼고(『동아일보』 1990. 9. 16), 어떤 이는 “이런 일이 터지면 늘 우리처럼 없이 사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다”(『한국일보』 2006. 7. 18)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이런 부조리와 불평등이 가장 극단적으로 상연되는 것은, 심지어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지하 거주자들만 수해를 입을 때다. 지난 2011년 강남의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벌어진 수해가 대표적 예다.

남태령 전원마을은 기업체 소유자나 전문직 종사자 등 비교적 부유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곳을 덮친 우면산의 거대한 흩더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생채기를 냈다. 전원마을에는 2층짜리 단독주택 197동에 650가구 1605명이 살고 있는데, 단독주택 반지하에는 대부분 2가구 정도가 세들어 살고 있다. 지난 27일 우면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이들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반지하에 집중적으로 쓸려 들어왔고, 이 때문에 세입자의 90% 정도가 집이 토사와 물에

21) 2010년에 출간된 한 소설이 활용하는 것도 바로 '낮은 곳'의 이런 중의적 의미다. “집은 구조가 여느 주택과 다를 바 없었다. 지하층, 1층, 2층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이었는데 2층은 주인집이 쓰고 1층은 하숙집으로 쓰였다. 영대가 보려는 방은 지하층에 있었다. 층이 낮아질수록 해당 층 입주자의 경제적 층 또한 낮아지는 셈이었다.”(강조는 인용자, 김미월(2010: 9))

잠기는 큰 피해를 입었다. 산사태로 숨진 18개월 난 아기도 반지하방에서 잠을 자다 참변을 당했다. (『한겨레』 2011. 7. 30)

수해와 (반)지하가 밀접하게 결부되면 될수록 (반)지하에 관한 부정적 표상과 낙인은 강화된다. (반)지하가 ‘사람 살 곳’이 아닌, ‘없어져야 할 주거형태’(『한겨레』 2011. 8. 5)로 표상될 때, (반)지하의 거주자들이 “가난해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한국일보』 2011. 8. 16) 사람들로 표상될 때, 그리고 (반)지하에 관해 거주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지하셋방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물난리까지 당해야 합니까”(『국민일보』 1990. 9. 14)라는 서러움, 또는 “내가 가난해 물 드는 지하방에 어머니를 살게 했다”(『한국일보』 2011. 8. 16)는 죄책감으로 표상될 때, 거기에는 늘 수해에 관한 언급이 있다.

(2)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부정적 평판과 (반)지하의 기증낙인

(반)지하는 그 성격상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부속된 주거형태다. 따라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부정적으로 표상된다면, (반)지하 역시 부정적으로 표상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 ‘전·월세대란’에 대한 정부의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팽창한 다세대·다가구주택에는 태생적으로 ‘부실·줄속공사’라는 인상이 따라다닌다.

“이런 식으로 지어진 서민용 공동주택이 온전하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건축사 김모씨(서초구 방배동)는 우려했다. “건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룰마저도 깨졌다”고 김씨는 개탄한다. 공사원칙을 무시한 편법공사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법률로 정해진 최소한의 감독장치인 감리가 겉치레로 이뤄져 공사부실이 방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2백만가구 건설을 독려하면서 신도시 등 대형아파트에만 안전도 등을 신경 쓸 뿐 이중 85%에 이르는 일반주택의 부실시공 감시가 전혀 없어 정책부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동아일보』 1991. 6. 29)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분양받은 상당수 주민들은 영세 건설업체들의 부실공사로 인해 집안 곳곳에 물이 새고 단열이 되지 않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부실공사는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붐이 일어

나면서 영세 건축업자들이 앓다튀 건물 외양만 그럴 듯하게 갖춘 주택들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 소보원 관계자는 “이들 주택에 부실공사가 많은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 건설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하자보수 이행금(총 공사비의 3%) 예치를 의무화한데 따른 것” 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2002. 8. 14)

아울러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로 지목되는 과밀화는 (반)지하의 주거환경을 한층 악화시킨다. 과밀화는 일조권 침해라는 문제를 낳는데, 가뜩이나 채광이 문제인 (반)지하는 과밀화로 인해 가중피해를 겪게 된다. 아울러 과밀화와 맞물려 흔히 나타나는 주차난과 쓰레기 문제 역시 (반)지하의 주거환경에 더 심대한 타격으로 다가온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8일 매연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집 앞에 대놓은 차 15대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윤아무개(4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반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평소에도 집안으로 들어오는 차량 매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이날 열대야를 견디기 위해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다 심한 매연이 또다시 들어오자 헛김에 둔기를 들고 나가 집앞에 주차된 김아무개(45)씨 소유의 승용차 앞유리를 부수는 등 차 15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 2004. 7. 29)

회사 업무 때문에 한동안 직장 근처에 원룸을 얻어 생활했었다. 원룸 주변에는 음식점뿐 아니라 기타 배달이 많아서 그런지 생활쓰레기도 많았다. 거처하던 원룸이 반지하라 밖에서는 사람 허리 높이에서 방안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창문 옆 전봇대에 쓰레기 모아두는 곳이 있는데 가끔 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가 넘쳐났다. 각종 술병뿐 아니라 젖은 음식 쓰레기까지 다양하다. 이렇다 보니 여름철에 역한 냄새가 진동하고 날파리떼는 집안에까지 냄새를 맡고 날아오니 창문도 열지 못하고 지냈다. (『문화일보』 2009. 9. 8)

뿐만 아니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거주자 일반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낙인도 문제다.

원룸전쟁은 지난달 11일 이곳 주민인 남모(55)씨가 2층짜리 집(29-7번지)을 지상 4층, 19가구 규모의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하는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고급 주택가에 다세대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다세대주택이 들어오면 주민수가 늘어 주차난이 생기고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네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주민들은 “원룸엔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입주하기 때문에 동네가 망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세대주택이 ‘기피시설’로 전략한 것이다.

주민 20명 명의로 구청에 제출된 ‘건축허가 관련 진정서’에 따르면 “원룸형 건물의 입주자들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통제 불가능한 엄청난 사람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앙일보』 2011. 11. 25)²²⁾

여기서 보듯 다세대·다가구주택 거주자 일반은 ‘통제 불가능한 엄청난 사람들’, ‘막살이 하는 애들로 표상되고, 지역을 ‘달동네’로 만드는 주범으로 표상된다. 하물며 다세대·다가구주택 거주자 중 가장 ‘낮은 층에 있는 (반)지하 거주자가 어떻게 표상될지는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국정브리핑에서도 ((반)지하를 품고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도시 슬럼화’의 주범으로 호명된다(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295). 그리고 이 호명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언제나 ‘재개발로 자동귀결된다.

수해(水害)지역에서 ‘수혜(水惠)뉴타운’으로’ . ‘상습침수지역’으로 악명 높았던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가 ‘물의 혜택’을 누리는 안전한 뉴타운으로 탈바

22) 이 논문의 조사 과정에서 만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도 이른바 ‘원룸’에 대한 부정적 평판을 들려 주었다.

이 동네[신림 4동]는 원룸 많이 지어가지고 동네가 버렸다. (...) 다 싫어하지. 거기는 불법건축물이다가, 젊은 솔집 강아지들이나, 젊은 애들, 불량아이들이 여기 와서 사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 들어와. 지금 원룸 다시 지은 것이 월세가 내려가고 있어, 덜 나가. 원채 많이 지었거든. 관악구가 제일 많이. 관악구가 아주 그냥 달동네가 되는 거야. 원룸, 또 지적인 사람도 살지만, 대략 정말 아주 오갈 데 없고, 그냥 그 막살이 하는 애들이 그냥 임시로 오고, 또 업소나가는 아가씨들이 그냥 그 업소 주인이 그냥 얻어서 거기서. 막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뭐 여기 신혼부부가 들어와 살 수가 있어, 뭐. 그게 방이냐고. 여기서 요만한 방이여. 어려운 애들, 한 3개월 살다가 또 가고. 이사도 찾고 그렇죠. (사례 M)

꿈한다. 서울시는 15일 8번째 뉴타운으로 중랑구 중화동·목동 일대 15만4,431평에 대한 ‘중화뉴타운 개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일대는 하수관 수위보다 낮은 반지하 주택 등이 많아 2001년 3,900가구가 침수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근 중랑천이 범람할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됐던 곳이다. 이에 따라 중화뉴타운 기본계획은 침수문제를 해결하고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뒀다.

(...) 중화동 일대는 80년대 이후 다세대·다가구가 난립하면서 고밀화돼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 그러나 뉴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중랑천과 봉화산의 바람길과 경관을 살려배치된 아파트 단지에 저층 가로형, 중층, 고층 타워형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1만 가구가 공급된다. (『한국일보』 2004. 9. 16)

서울 시민의 15%이 영향권 아래 놓이고, 애초 계획에 따르면 4년간 13만6346호의 주택이 멸실되며, 전세 4000만원 미만의 저렴한주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던 이 회대의 재개발 계획은(김수현·이현주·손병돈, 2009, 150~151), 그러나 스스로 해결 하겠다고 자부한 ‘슬럼화’를 한층 악화시킬 따름이었다.

은지(가명·9·여)는 2005년 4월 서울 장위동에 왔다. (...) 은지네 동네는 2005년 12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다.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사람들이 조합 설립 동의를 받으러 다녔다. “인근에 지하철역 2개, 경전철 건설 예정, 허가만 나면 재산가치 최고!” 부동산업자들 말에 강남 사람들도 집을 사들였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원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다. 새로 들어설 아파트 입주를 위한 분담금은 그들에게 ‘부담금’ 일 뿐이다. 동의율은 70%를 넘지 못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세월만 흘렀다.

(...) 재개발이 더더지면서 동네는 점점 낙후돼갔다. 주민들은 곧 부술 집을 고치지 않았다. 세가 나가지 않아 집을 비워둔 채 이사 가는 사람도 많아졌다. 음침했던 동네가 더 스산해졌다.

(...) 좁도둑이 늘었다. 은지네 집에도 도둑이 들었다. 은지의 저금통까지 싹 쓸어 갔다. 은지네 집 앞에선 심심치 않게 “소매치기야” 라는 소리가 들렸다. 은지 엄마는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50·여)씨는 “낮에도 오가는 사람이 없다. 밤 되면 더

무섭다. 안쪽 골목엔 가로등도 없어 더 스산하다. 저녁 8시 이후엔 나도 돌아다니지 않는다” 고 했다. (『국민일보』 2010. 3 19)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달동네의 주거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1983년부터 시행되었다가 결국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강탈’과 ‘추방’을 낳은 합동재개발 사업의 기시현상이다.

(3) ‘최저주거기준’ 개념의 등장과 (반)지하의 새로운 문제화

2000년대 이전까지 (반)지하의 주거환경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수해나 부실 시공 및 그로 인한 사고였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채광이나 습기 등이 새롭게 문제로 등장한다. 이렇듯 (반)지하의 주거환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 노릇을 한 것이 ‘최저주거기준’ 개념의 도입이다(대한주택공사, 2000; 남원석, 2003).

최저주거기준은 1979년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을 지난 2003년 「주택법」으로 전면개편하면서, 제5조 2항에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 정의되어 법제화됐다.²³⁾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를 전후하여 주거빈곤, 특히 (반)지하에 관한 본격적인 문제화가 시작되었는데, 가령 <대한주택공사>의 발주로 이루어진 주거빈곤가구에 관한 실태 조사, 2002년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진행

23)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논의는 일찍이 1980년대부터 있었지만, 특히 1996년을 계기로 본격화된다. 결정적인 계기는 1996년 제2차 유엔세계주거회의로, 이 회의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 중심으로 주거권 이념과 강제철거 금지, 임차인 보호, 최저주거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제적 규범을 근거로 삼은 시민사회운동의 움직임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인 <건설교통부>도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주거권 관련 내용 중 최저주거기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척시킨다. 당시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명분은, 주택보급률이 10년 내로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량공급 확대 위주의 기존 주택정책을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겨레』 1996. 10. 14).

본래 1998년에 설정될 예정이었던 최저주거기준은, 그러나 IMF 이후 경제위기 상황에서 건설경기 부양 및 재정지출 삭감을 이유로 유보된다. 2000년 이후 관련 논의가 재추진되고, ‘잔여적 복지’ 또는 ‘부조’의 관점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최대한 낮게 잡아 정책의 대상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는 가장 약한 제도가 되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는 근거로 최저주거기준을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거권 운동 진영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대한주택공사, 2000: 165~187), 결국 전자의 관점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이 발의된다. 하지만 이런 축소된 안조차 기획예산처 등의 반발로 법안에서 삭제되었다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결국 2003년 6월에 가까스로 법제화되기에 이른다.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상세한 경과 및 그 과정에서 제기된 논점에 관해서는 남원석(2003)을 참고하라.

한 (반)지하에 대한 사실상 최초의 실태조사, 그리고 이를 한층 확대시킨 2005년 <대 한주택공사> 발주 (반)지하 실태조사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2005년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에 거주층을 묻는 질문이 들어가면서 2006년 최초로 (반)지하에 관한 공식 통계가 집계되었으며, 『주택법』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이 2006년 이후 2년 단위로 『주거실태조사』를 하면서, 관련 통계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개념은 ‘면적기준과 ‘시설기준, 그리고 ‘구조·성능·환경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반)지하의 문제화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특히 세 번째 기준이다. 이 기준은 주로 의학적 담론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2003년 최저주거기준 의제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반)지하 관련 보도에는 그 이전까지의 보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반)지하에 관한 획기적인 시선이 등장하는데, 이는 이후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표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J연립 지하층에 사는 임모(85) 씨와 이모(72) 씨 부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이 칼칼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린다. 임 씨의 단칸방에는 검푸른 곰팡이가 피어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햇볕이 오후에만 잠깐 들어올 뿐 방안이 하루 종일 어둡고 습기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부엌 겸 거실 구석에는 하수구 구멍이 뚫려 있어 장마철만 되면 역류한 하수가 안방까지 흘러들어 매년 물난리를 겪는다. 부엌 한쪽에는 갈라진 벽에서 물까지 새어나와 하루 한 번씩 바가지로 물을 퍼낸다. 이 씨는 “마당에 이슬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방안이 하루 종일 눅눅하다”며 “장마 때 하수구가 넘쳐 방안에 물이 흘러들 때는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다. 임 씨는 7년여 동안 지하방에 살면서 폐렴증세가 악화됐고 이 씨도 류머티스 관절염이 생겼다.

지하방을 비롯, 비닐하우스,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못미치는 주거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밀폐된 공간과 일조시간의 제약, 실내공기 오염 등으로 각종 정신적, 육체적 질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 (...) 인도주의 실천의사회는 지하셋방 거주자가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지하방 100여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진(問診) 조사를 실시, 결과를 분석중이다. 조사에 참가한 한림대 성심병원 주영수 교수는 “조사결과 상당수의 주민이 이웃사람들과 만나기를 꺼리는 등 대인관계 불안증, 무기력증세 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2003. 5.

최저주거기준 논의에서 특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햇별’이다. 수해와 결부된 (반)지하가 ‘낮은 곳’으로 표상된다면, 햇별과 결부된 (반)지하는 ‘한줌 햇별마저 빼앗긴 사람들’(『경향신문』 2004. 6. 5), 또는 아예 ‘반지하방인생’(『서울신문』 2008. 8. 2)으로 표상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저주거기준 개념, 그 중에서도 ‘구조·성능·환경기준’이 도입되면서 이 장 서두에서 언급한 (반)지하 주거형태에 대한 1990년대 초반의 긍정적 가치평가와 180도 다른 평가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필자가 어릴 적, 셋방이란 대개 도시형 한옥의 문간방을 세놓는 방식이었다. 독립성이 없으니 주인집 눈치보기를 비롯해서 셋방살이의 설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본래 하나인 주택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집주인과 세 사는 집이 적어도 같은 햇별과 같은 바람을 공유했다.

(…) 트위터에 ‘지하방살이의 설움’을 물어보자 수많은 분들이 지하방에 살면서 겪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대개 일치했다.

“물난리가 아니라도 너무 습하다, 곰팡이가 피고 빨래도 마르지 않는다, 냄새가 난다, 너무 어둡다, 밤낮의 구분이 약해져서 생활리듬이 깨진다, 각종 벌레가 서식하고 쥐가 넘보기도 한다, 자동차 매연이나 먼지가 많이 들어온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 발자국 소리나 소음이 심하다, 하수가 역류하기도 한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방법상의 취약점이 있다, 이는 종종 절도나 강도와 같은 범죄, 여성의 경우에는 엿보기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알레르기·면역약화·피부병·호흡기질환·우울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 (『한겨레』 2011. 8. 5)

1990년 초의 기사에서, (반)지하는 ‘햇빛이 안 들고 습기가 몸에 배는 우중충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방살이의 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주거형태로 표상됐었다. 그러나 20여 년 후 이제 정반대로 문간방이, ‘셋방살이의 설움’에도 불구하고, ‘집주인과 세 사는 집이 같은 햇별과 같은 바람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차라리 나왔다는 표상, ‘습기’와 ‘어둠’으로 상징되는 (반)지하의 주거환경을 전면적으로 문제화하는 표상이 등장한다. 여기서 요점은 ‘문간방’과 ‘(반)지하’ 중 어느 쪽의 주거환경이 더 나은가를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새로운

문제화를 사회적으로 가능케 하고 가시화하는 담론이 등장하면서, 동일한 현상에 관한 가치평가가 완전히 전도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가치평가의 전도에는, 이제 문간방이라는 주거형태가 대부분 없어졌고, 따라서 (반)지하 주거형태의 ‘상대적 진보성’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현실적 준거점이 사라졌다는 현실적 조건이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반)지하 주거형태가 출현할 때부터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주변화·상대화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념의 도입에는 분명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개념에는 의도치 않게 (반)지하라는 주거형태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킬 위험이 따라붙는다. 앞서 지적했듯 “어느 모로 보나 지하방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못” 되는 곳이며, 따라서 (반)지하 거주자들은 “가난해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이들이라는 극단적 표상을 낳는 데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 2011. 8. 16). 이는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개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개념이 강제철거금지와 세입자 보호, 적정주거비 등 ‘주거권’의 다른 차원들과 분리된 채, ‘진짜 가난’을 찾는 경향이 있는 선별적 복지 및 미디어의 논리와 접합되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조문영, 2001: 94~95).

관련하여 주거빈곤의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도시빈민들의 주거문제를 질적 수준의 문제만을 부각시켜 국가의 도덕성을 문책하는 전략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더 근본적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주거운동의 많은 잠재적 지지자들을 규합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곱씹어 볼 지점이 있다(임서환, 1995: 15).

2) (반)지하: ‘고립’과 ‘유폐’, ‘절연’이라는 표상

(반)지하라는 주거형태가 출현한 이래 늘 따라붙던 표상 중 하나는 ‘고립’과 ‘비가시화’였다. 가령 (반)지하가 제목에 등장한 최초의 기사인 「셋방 모녀 피살 1주 뒤 발견 - 서울 화곡동 5가구 사는 지하실서 참변」의 내용은 여러 모로 의미심장하다.

5가구가 세들어 살던 집에서 모녀가 피살, 8일 만에 발견됐다. (...) 선씨는 지난 4일 KAL기에 탑승, 8일간의 동남아 승무근무를 마치고 이날 귀국, 집으로 돌아와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방문이 안으로 잠겨 있어 드라이버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아내와 딸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 이 집은 지난 83년 11월에 [지었으며,]

모두 5가구 18명이 함께 살고 있다. (...) 진씨가 숨진 지하에는 3가구가 각각 출입문을 따로 쓰고 있어 사건 발생 후 1주일도 지나도록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경향신문』 1985. 4. 12)

이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이 집에 5가구 18명, 피해자가 살던 지하층에만 3가구가 살고 있었는데도, 사건 발생 후 8일이 지나도록 이웃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의 하나로 3가구가 각각 출입문을 따로 쓰는 다가구주택 자체의 구조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장의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지하라는 주거형태가 ‘문간방’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받았던 것은 세입자 가구의 ‘독립성’ 및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점 때문이었는데, 위 보도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그런 공간적 배치가 이웃으로부터의 고립 및 비가시화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역효과는 도시빈민들에게 특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의 가장 유명한 무허가정착지 가운데 한 곳이었던 사당동에서의 삶과 (반)지하에서의 삶을 대비시키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곳 사람들은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데 서울시내에서 이곳만큼 안전한 곳도 드물 것” 이라고 했다. 가파른 층계가 위험하기는 하지만 자동차도 안 다니고 유괴위험도 없기 때문이다. 방도 좁고 놀이터나 장난감도 별로 없는 이곳 어린이들에게 있어 이 지역은 온 동네가 하나의 놀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날의 현장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3세인 선희는 혼자 논다. 소방도로(이 동네에서는 가장 넓은 도로)에 눕기도 하고 손을 신발에 넣어 기어 다니기도 하면서. 아줌마는 쥐치포를 찢으며 한 번씩 시선만 준다.” 이러한 묘사는 이 지역의 골목 풍경을 그대로 보여줄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생활공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조은조옥라, 1992: 34)

맞벌이 영세서민 부부가 방문을 잠그고 일을 나간 사이 지하셋방에서 불이 나 방 안에서 놀던 어린 자녀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질식돼 숨졌다. (...) 이들 부부는 충남 계룡면 금대2리에서 논 9백평에 농사를 짓다가 가난에 못 이겨 지난 88년 서울로 올라왔으며 지난해 10월 현재의 지하방을 전세 4백만원에 얻어 살아왔다.

이들 부부는 한때 두 남매를 고향에 있는 70대 노모에게 맡겼다가 지난 1월초 노모가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맡아 기르기가 어렵다” 며 아이들을 돌려보내자, 같은 연립주택 지하에 세든 이웃집에 약간의 수고비를 주고 아이들을 맡겼으나 같은 이유로 한 달 만에 거절당했다. 또한 이 집에서 3백m 떨어진 망원동 438에는 월 5만원씩인 시립 ‘새마을 버들유아원’ 이 있었으나 탁아 시간이 오전9시~오후5시로 이들 부부가 일하는 시간과 맞지 않아 이용치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어머니 이씨는 경찰에서 “평소 파출부로 나가면서 부엌에는 부엌칼과 연탄불이 있어 위험스럽고, 밖으로 나가면 길을 잃거나 유괴라도 당할 것 같아 방문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 면서 눈물을 흘렸다. (...)

이들이 사는 주택에는 모두 6개의 지하방이 있으며 각각 독립구조로 돼 있다.
(『한겨레』 1990. 3. 10)

무허가정착지에 사는 빈민들이나 (반)지하에 사는 빈민들이나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집의 상태로 보자면 둘 다 열악하거나, 대개는 무허가정착지의 주택들이 더 열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집 자체만의 상태가 아닌 주변 환경, 특히 아이들의 양육 환경 면에서 보면 얘기가 사뭇 달라진다. 전자의 공간은 ‘아이들이 노는데 서울시내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고, ‘온 동네가 놀이터’다. 또 아이들을 봐줄 이웃도 있다. 반면 후자의 공간에서는 ‘길을 잃거나 유괴라도 당할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아이들을 돌봐줄 이웃을 찾기도 어렵다. 후자의 기사 역시 ‘독립구조로 되어 있는’ 공간적 배치에 관한 언급으로 끝을 맺는데, 여기서 표상되는 (반)지하는, 각 가구별 ‘독립상’과 ‘사생활’이 보호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돌봄의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빈곤한 이일수록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과 절연의 공간이다.

이런 표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빈번히 나타난다. (반)지하는, 이웃 (반)지하에 4가구가 살지만 60대 독거노인이 죽은 지 20여일 만에 발견되는 곳(『서울신문』 2004. 1. 7), 23개월 된 아이가 죽은 지 사나흘이 지난 엄마의 썩어가는 시체 옆에서, 그것도 이웃이 아니라 경찰에 의해 발견되는 곳(『한겨레』 2001. 2. 16)으로 표상된다. 이런 사건들 자체가 그리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자아내는 충격은 ‘지하’라는 공간에 흔히 따라붙는 심상과 연결되어, (반)지하라는 공간을 ‘돌봄’과 ‘반려’, ‘친밀성’이 박탈된 공간으로 표상하게 만든다.

누구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어떤 이들보다 외로운 그들의 삶에 반려가 필요한 이들이지만 정작 이들에게는 무엇으로부터도 위로를 받을 돈도 시간도 없다. 가난과 함께 이들이 가장 끔찍하게 박탈당한 것은 친밀성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주거’ 자체가 사람이건 동물이건 ‘반려’를 허용하지 않는다. 달동네의 해체와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은 옥탑방과 반지하 방으로 유폐되었다. 달동네에서 사람을 귀찮게 할 정도로 간섭하던 이웃들의 ‘마실’이란 꿈도 꾸지 못한다. (『한겨레』 2010. 4. 26)

그러나 이는 꼭 (반)지하만의 문제는 아니다. 빈민들이 밀집해 있는 임대아파트 역시 비슷한 느낌을 자아낸다.

서울에 있는 영구 임대 주택 단지 중에 4분의 3 정도가 1000가구 이상이 모여 살고 한 단지당 평균 1431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대부분의 임대주택 단지는 대단지다. 그런 대단지 안에 최저 빈곤층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다. 상계동 임대 아파트로 이사한 금선 할머니 가족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마주친 동네 느낌은 사당동 때와 달랐다. 사당동에서는 아이들로 가득찬 골목길을 지나면서 크게 외지인이라는 의식을 안 해도 되었는데 상계동 임대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연구자는 이방인같이 느껴졌다. (...) 할머니가 살게 된 임대 아파트는 상당히 큰 단지임에도 낮에는 텅 빈 듯이 조용했다. 단지 내를 돌아다닐 어른도 별로 없고 아이들은 더더욱 없었다. 어른들은 일 나갔거나 아파서 집에 누워 있거나 그런 가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입주의 우선권이 노동력이 없는 생활 보호 대상자나 의료 부조자 등의 영세민 가구였기 때문에 조손 가족이 아니면 아이들이 있는 가구도 별로 없어서 단지 내의 놀이터도 늘 비어 있다시피 했다(조은, 2012: 66~67).

이렇게 보면 진정한 문제는 (반)지하라는 주거형태에 고유한 공간적 배치라기보다는 (반)지하 주거형태의 확산과 동시대적인 도시빈민들의 처지, 곧 1980년대까지 자신들의 주된 거처였던 무허가정착지,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형성했던 관계망과 자원을 ‘강탈당한 뒤, 도시 곳곳으로 흩어져 과거와 같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도시빈민들의 처지다. 즉 고립되고 비가시화되며 절연되고 유폐되어 있는 것은 무허가정착지

가 해체된 1990년대 이후 빈민 그 자체이며, (반)지하는 이런 빈민의 상태를 탁월하게 형상화하는 환유일 따름이다.

가난은 왜 그토록 눈에 띄지 않는가. 우리나라 잘살게 됐다고 깜빡 속을 뻔하지 않았다. 우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시간대에 다른 동선을 그리며 벌어먹다가 — 그들은 대부분 일하는데도 가난한 노동 빈민이다 —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 잔다. 가령 대학 청소부들, 새벽 5시부터 강의실·화장실 청소하고 학생들 오기 전에 사라진다. 계층간 주거 분리는 이미 상당한데 도처의 재개발 사업으로 갈끔하게 완성될 것이다. (...) 가난한 이들은 아는 이가 적고 교제 범위가 좁다. 그의 사회적 관계는 자본(빚, 인맥)이랄 수도 없이 초라하고 무력하다. 거부와 모욕 속에 그의 사회적 우주는 나날이 줄어들고 급기야 그는 한곳에 붙박인다. 이 유목민 시대에. 하여 가난의 모습은 어두운 반지하 원룸에 한없이 켜 있는 텔레비전, 컴퓨터와 그 앞에 홀로 앉은 한 사람이다. 사회적인 시간, 공적인 공간에 빈곤은 출현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인가? 안 보여 더 참혹한 가난이 도처에 있다. (『한겨레』 2008. 6. 12)

3) (반)지하: 빈곤과 범죄가 만나는 위험한 공간

수해 못지않게 (반)지하와 관련하여 자주 보도되는 기사가 범죄 관련 기사다. 1990년 이후 범죄 관련 기사는 총 300여 건으로, 수해 관련 보도와 비슷하다. (반)지하 거주자들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은 거의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다. 가령 2007년 8월에서 2008년 7월 사이 서울 지역에서 절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그 이유를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 주택 등에 많이 살고 있는데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민도 많아 절도에 취약하다”는 데서 찾는다(『아시아투데이』 2008. 9. 15).

정반대로 (반)지하는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표상되기도 한다.

최근 서울시내에서의 잇따른 살인사건으로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경찰이 범인의 DNA와 대조한다며 중국동포의 모발과 구강세포를 마구잡이로 채취하는 등 강압수사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

경찰은 특히 피해자가 중국동포라는 점, 범인의 옷차림이 중국동포들이 즐겨입는

웃이라는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 범인을 중국동포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대림동 일대 지하셋방과 옥탑방 등을 뒤진 끝에 합법·불법 체류 중인 30~40대 중국동포 1200명을 찾아냈으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140여명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DNA검사를 의뢰했다. (『국민일보』 2004. 7. 10)

범죄의 피해자가 사는 곳이든, 범죄의 가해자가 사는 곳이든, 어쨌거나 (반)지하가 밀집한 지역은 ‘우범지대’로 표상되는 셈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반)지하 밀집 지역의 아동이 같은 지역에 사는 가해자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몇 차례 크게 보도되면서, 빈곤과 범죄를 연결시키는 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 담론에 따르면 빈곤은 한편으로 범죄 피해의 가능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범죄 가해자의 출현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반)지하가 밀집한 빈민거주 지역은, 범죄 가해자와 범죄 피해자가 ‘이웃’으로 살아가는 극히 위험한 곳으로 표상된다.

빈곤이 범죄 피해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시각은 아래 기사에서 잘 나타난다.

지난 26일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 아동은 어머니가 베트남인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었다.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 피해 아동 가정은 맞벌이를 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피해 아동을 보육 시설에 맡길 형편이 못 됐다. 피해 아동은 부모님이 출근하고 난 후 혼자 집에서 놀다 피해를 입었다. (...)

최근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아동들은 주로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나홀로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나홀로 아동’이란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말한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따르면 만18세 미만 아동 중 학교나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아동은 180만명. 이들 중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 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20만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나홀로 아동 160만명은 부모의 보호는 물론이고 학교나 지역사회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손쉽게 잔혹한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내일신문』 2010. 7. 6)

이에 따르면 빈곤한 부모는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로 인한 돌봄의 부족을 벌충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방치’하게 되고, 결국 아이들을 범죄 위험에 취약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다. 범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아이를 집 안에 가둬놓는 것이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면 길을 잃거나 유괴라도 당할 것 같아 방문을 채울 수밖에 없었” (『한겨레』 1990. 3. 10)던 어머니의 선택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는 익히 알려진 바다.

빈곤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빈곤은 범죄 ‘유전자’를 자극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일어난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용의자를 다룬 기사는 이렇게 말한다.

서울대 심리학과 박모 교수는 “만약 정씨가 진짜 범인이라면 사체유기 형태가 치밀하고 범죄가 잔인해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인 ‘사이코패스’ 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5년 전 안양시 안양동의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 세를 얻어 이사왔고, 대리기사와 컴퓨터 수리 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렸다. 박 교수에 따르면 경제·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와 고립된 생활은 숨어 있는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쉽게 자극할 수 있다. (『서울신문』 2008. 3. 18)

둘째, 빈곤으로 인한 아동의 방치는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가해자를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나홀로 아동들은 성범죄의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 더욱 문제가 크다. 아동들이 부모의 보호 없이 혼자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케이블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또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지,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방임되다 보면 성장한 후에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내일신문』 2010. 7. 27)

셋째, 빈곤 특히 (반)지하로 상징되는 빈곤하면서도 고립된 삶은 이른바 ‘절망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절망형 은둔자는 사회경제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다. 서울 여의도 칼부림 사건 피의자 김아무개(30)씨는 4000만원의 빚을 진 신용불량자였다. 의정부 칼부림 사건 피의자 유아무개(39)씨도 일용직 노동자였다.

절망형 은둔자는 쪽방, 지하방, 고시원 등에서 혼자 산다. 이들의 거주공간 자체가 은둔·고립의 처지를 상징한다. 연립주택 지하방과 고시원에 사는 이들은 가족은 물론 이웃과도 접촉 없이 혼자 지낸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쪽방촌도 거주자의 93%가 1인가구다. (『한겨레』 2012. 8. 31)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앞서 (반)지하 주거형태와 자주 연결되곤 했던 ‘고립’과 유사한 의미계열의 개념들, 곧 ‘방치’나 ‘은둔’에 고유한 범죄성의 차원이 있다는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빈곤과 범죄성을 연관 짓는 논의들이 그 매개항으로 ‘빈민들의 집단적 하위문화’ 곧 ‘빈곤문화’를 든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빈민들 사이의 관계 부재로부터 범죄성을 끌어내는 이런 식의 접근은 다소 특이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빈곤과 범죄성을 연결시키는 담론들의 논리를 분석한 바우만의 논의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Bauman, 2005: 78~82). 바우만에 따르면 빈곤과 범죄성을 연결시키는 담론들은, 빈민들이 사회의 ‘정상적’ 구성원과 달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비슷해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현대 사회는 ‘소비자 사회’이며, 이 사회를 뒷받침하는 동력은 ‘(소비)유혹을 통한 통합(integration-through-seduction), 곧 소비로써 행복과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라는 전방위적 유혹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혹이 부추기는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을 지니지 못한 이들도 이 유혹에 호명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이 유혹이 일으키는 욕망을 자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빈민, 특히 사회와 가족 등 ‘정상적 규범’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규율할 질서로부터 ‘고립’되고 ‘방치’되어 있는 이들이 이런 자제심을 훈련받았을 리 만무하다. 빈민은 정의상 자신의 욕망과 정념에 대한 통제력이 없는 존재들이고, 이 때문에 그들이 심지어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소비자 사회로 난입해 올 것이라는 공포와 불안이 생겨난다. ‘사회의 가치에 집착하면서도 이 가치를 위반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소비자 사회의 빈민이고, 소비자 사회의 범죄자인 것이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하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 가족은 전기요금도 제때 못 내 전기가 끊기기 일쑤였다. 10월 10일 오전 4시 46분, 아버지와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그 컴컴한 집 거실에 불이 났다. 가족을 기다리던 어머니와 큰딸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17세의 아들은 경찰에 “진실을 밝혀 달라” 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가 이 모든 일을 꾸짖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는 한 달이 채 안 걸렸다.

(...) 장 군은 서울시내 한 체육고등학교에 입학해 단거리 육상선수를 꿈꾸었으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고로 십자인대를 다치면서 운동을 그만뒀다. 사고로 선수의 꿈을 잃게 되면서 장 군은 급격히 학교와 멀어졌다. 동네친구들과 어울리며 오토바이와 작은 물건들을 훔쳤고 금세 전과 9범이 됐다. 그는 부모님이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등에 가입한 걸 알고 동네 후배에게 “내 집에 불을 내달라” 고 부탁했다. (...) 그는 “보험금을 타서 강남 같은 곳에서 살려고 그랬다” 며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군은 “엄마와 누나한테는 좀 미안하다” 면서도 태연하게 웃으며 조사 중 주문한 통닭을 뜯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2009. 11. 10)

‘3억 보험금 타내 강남서 살려고 부모를 죽이고, ‘태연하게 웃으며 통닭을 뜯는’ (반)지하 거주자. 이는 오늘날 사람들이 빈민에 대해 느끼는 공포를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상연하는 사례다.

이런 관점에서는 빈민들의 집단적 하위문화가 없다 해도, 빈민은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 빈민들 사이에는 이렇다 할 관계가 없더라도, 어쨌든 ‘케이블 TV나 인터넷 등’으로써 빈민들은 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음란 동영상을 비롯해 이 사회가 쏟아내는 온갖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절망형 은둔자처럼 자신들을 ‘잉여’로 만들어버린 이 비인간적 사회로 난입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절망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빈곤과 고립과 범죄가 뒤섞여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까지 등장하는데, ‘지하생활자가 바로 그것이다.

절망형 은둔자는 주로 쪽방, 고시원, 지하방 등에서 혼자 산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지하생활자의 수기』에 등장하는 ‘나’와 비교해볼 만하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병든 인간이다. ... 나는 악한 인간이다. 생각건대 간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 내가 치료 받기를 원치 않는 것은 증오심 때문이다. ... 나는

이미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약 20년간을 살아왔다. …” (…)

시대와 사회적 배경은 달라도 ‘지하생활자’는 항상 있었다. 도스토예프스키 때 지하생활자는 물질문명과 전체주의를 냉소하지만 무기력한 지식인이었다면, 이 시대의 지하생활자는 고시원에 틀어박혀 절망과 증오를 쌓아가는 신용불량자나 게임과 음란물에 중독된 외톨이들일 수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이 사회적 낙오자, 절망형 은둔자들을 ‘양산’하는 체제다. 청년실업, 가계부채, 신용불량,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등 모든 지표가 그 이유를 말해준다. 높은 자살률과 절망범죄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경향신문』 2012. 9. 3)

‘지하생활자’의 범죄성을 우리 사회가 양산한 결과로 해석하면서, 이 체제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려는 시도는 원칙적으로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빈곤과 범죄를 연결시키는 담론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동료시민들이 처한 비참—많은 경우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책임이 있는—에 대해 느껴야 마땅할 도덕적 책임감을 덜어주는 한편, 이들이 자행할 범죄에 맞서 사회를 ‘요새화’해야 한다는 치안논리와 공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Bauman, 2005: 82~86). 더욱이 이 표상의 낙인 효과가 지금까지의 어떤 표상보다 더 강력하고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선의든 악의든 빈곤과 범죄성을 연결시키는 표상은 극히 위험하다.

4. 소결: (반)지하와 ‘자격박탈의 빈곤’(la pauvreté disqualifiante)

이상에서 우리는 (반)지하의 사회적 표상이 형성되고 변화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세세한 내용을 떠나 전반적인 방향에 초점을 맞춰 보자면, (반)지하 주거형태가 출현할 당시 거론되던 이런저런 긍정적 가치평가는 모두 전도되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차원들이 강화·추가되는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가령 과거의 ‘문간방 신세’나 ‘달동네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반지하 신세’나 ‘지하생활자’ 같은 말이 오늘날 빈곤의 보통명사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반)지하는 주거형태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 빈곤의 환유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반)지하의 사회적 표상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한국의 빈곤이 이른바 ‘희망의 빈곤’에서 ‘절망의 빈곤’으로 변하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포강은 유럽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빈곤의 세 가지 이념형으로 ‘통합된 빈곤’(la

pauvreté intégrée)과 ‘주변적 빈곤’(la pauvreté marginale), 그리고 ‘자격박탈의 빈곤’(la pauvreté disqualifiante)을 제시하는데, 이 개념들은 한국 빈곤의 성격 및 표상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Paugam, 2001). ‘통합된 빈곤’에서 빈곤은 주민 대다수가 처한 사회적 조건으로 표상되고, 빈민들 역시 ‘정상적’ 사회구성원 일반과 분리된 별개의 집단으로 표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낙인찍기 역시 강하지 않다. 반면 ‘주변적 빈곤’에서 빈곤은 대다수 주민과 무관한 극소수의 문제로 표상되며, 빈민들은 일종의 ‘비정상인들’로 표상되기 때문에, 빈민들에 대한 낙인찍기가 강하다. 마지막으로 자격박탈의 빈곤에서 빈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추락과 ‘배제’의 위협으로 표상되며, 빈민들의 경우 변화된 세계의 강화된 경쟁에서 다양한 이유로 탈락한 이질적인 ‘낙오자’ 또는 ‘결격자’(les disqualifiées) 집단으로 표상되기 때문에, 빈민의 범위가 넓어지면서도 그들에 대한 낙인찍기 역시 강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한국의 빈곤이 ‘희망의 빈곤’에서 ‘절망의 빈곤’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위의 개념을 빌자면 ‘통합된 빈곤’에서 (3저호황과 IMF 경제위기 사이 짧게 나타난 ‘주변적 빈곤’을 거쳐) ‘자격박탈의 빈곤’으로 이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빈곤의 지배적 표상은,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상태로, 극소수 ‘비정상인들’이 겪는 병리적 현상도 아니다. 그것은 극소수 특권층을 제외한다면 사회구성원 누구도 면제받지 못한 ‘추락’의 위협과 불안이다. 점점 강화되고 확대되는 경쟁 속에서 누구나, 생애주기의 어느 때나 ‘탈락’할 수 있고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빈곤은 이제 내가 사회에 쓸모가 없는 ‘결격자’, 또는 ‘잉여’가 되었다는 징표로 표상된다. 오늘날 빈곤이 ‘절망과 ‘낙인’으로 경험되는 것은, 이렇듯 한 개인이 사회에서 점하는 ‘자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심상’이라는 의미에서) ‘정체성’에 대한 부정, 따라서 한 개인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새벽 서초구 한 빌라의 6평짜리 반지하방 화장실에서 목 매 숨진 이모 (27)씨. 이씨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뒤 개인병원에서 일하며 억척스럽게 살았다. 이씨는 방 한 칸에서 부모와 남동생 등 4명이 살아가는 게 불편하다고 판단해 최근 남동생과 함께 독립을 준비했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씨는 간호조무사 일을 그만두고 피부미용 관

런 자격증 공부에 몰두했다. 삶을 개척하려는 의욕이 강했던 이씨는 여성 미용에 관한 자격증만 이미 3개 이상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장녀로서 부모를 챙기고 남 동생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이씨. 정작 자신은 고졸 출신으로 부닥쳐야 했던 학력 차별, 이로 인한 불안한 일자리,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 등으로 좌절감의 늪에 빠져 있었다. 자괴감과 시름이 깊어져 보름 전부터는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더욱이 공부를 병행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는 일주일 전 넘어진 뒤 어깨를 다쳐 일을 나가지도 못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씨의 이모부는 “월급을 타면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아이였는데…” 라며 말끝을 흐렸다. (『한국일보』 2011. 7. 14)

외환위기 때 파산한 한 기업인은 반지하 17평짜리 셋집으로 이사갔다. 그는 첼로를 배우던 딸아이의 레슨을 중단시키면서 가장으로서 큰 절망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돈이 없어 절감하는 궁핍감과 절망감은 사실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그는 강조했다. 첼로는 사치일 것이다. 가난 때문에 아파트 밖으로 아이들을 던지고 동반자살한 어머니나, 아들이 진 수천만원의 빚 때문에 목숨을 버린 아버지가 겪었을 절망은 얼마나 깊었을 것인가. 실직자로 수만원이 없어 아픈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했던 빈곤이 주는 절망감,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불안감, 빚상환 독촉에 시달리는 심적 고통…. 가난은 그저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는 ‘불편함’ 만은 아니다. 한 방송이 벌이는 빈민층의 집고쳐주기 프로그램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집에서 산다. 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우중충한 집은 아무리 밝은 성격이라도 어둡게 만들 것 같아 보인다. 가난이 얼마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풍경의 단편들이다. (『서울신문』 2003. 8. 15)

경기 과천시 문원동 청계1길의 단독주택 반지하에 세들어 사는 전아무개(86) 할머니는 과천에서만 60여 년을 산 터주대감이다. 그러나 그의 거처는 두세 평짜리 지하 단칸방이다. 문원동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함께 전국 3573개 읍·면·동 가운데 반지하 거주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다. 1991가구 가운데 35%에 이르는 699가구(1872명)가 지하방에 산다. 문원 2단지 지역에는 나지막한 비탈길을 따라 단독주택이 죽 이어져 있는데, 과천 사람들은 이곳을 ‘이주단지’ 라고 부른다. 1980년대 초 현재의 서울랜드 자리에 살던 주민들 대부분이 옮겨 왔기 때문이다.

지난 8월 7일 오후 집에서 만난 전 할머니도 그렇게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15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엔 혼자서 산다. (...) 이곳에서 4년을 살았고, 이사 오기 전에도 문원동의 지하방을 전전했다. (『한겨레21』 2008. 8. 11)

어떤 이의 빈곤은 ‘미생’(未生)이고, 어떤 이의 빈곤은 ‘추락’이며, 어떤 이의 빈곤은 ‘전전’(輾轉)이다. 이는 생애주기 면에서 대략 청년과 중년, 노년에 대응한다. 만일 (반)지하가 청년, 또는 더 일반적으로 말해 사회의 신입자가 생애주기의 초반기에 더 나은 주거와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깐 동안 ‘체류’하는 거처였다면, 아마 (반)지하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지금처럼 부정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임시거처’이자 일시적 ‘체류지’라고 여겼던 (반)지하가 점점 더 장기적이고 심지어 항구적인 거처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누구나 언제든 이곳으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것, 이렇게 해서 들어온 (반)지하가 언제 빠져나갈지 기약이 없는 ‘연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반)지하가 점점 더 절망적인 공간으로 표상된다면, 그것은 (반)지하의 거주자를 구속하는 빈곤이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지하를 이렇게 표상할 때 자칫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지하 역시 ‘집’이라는 점,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역시 ‘주민’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의 주거체제 하에서 도시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도시 빈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이다.

강남구 개포동의 판자촌 구룡마을 사람들부터 역삼동도곡동의 ‘연탄 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비좁은 반지하 단칸방 세입자들까지 ‘화려한 강남’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파출부, 고층건물 청소원, 신문배달원 등인 이들도 분명 강남의 일원[이다.]

“우리도 강남 사람입니다. 돈 없고 뺨 없다고 나가라마라 하지 마세요.” 14일 오후 구룡마을 어귀에서 만난 이모(여46)씨는 “왜 강남을 떠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항변하듯 이렇게 답했다. 관절염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10여년간 강남 고층빌딩 청소원으로 일했다는 이씨는 “(강남 사람들이) 아무리 땀땀겨려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강남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 물론 강남의 기성체제 성벽위에서 이들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구룡마을 건너편 개포 주공아파트에 사는 주부 김모(36)씨는 “보기에도 안좋은 우범지역을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문화일보』 2002. 1. 15)

(반)지하를 비롯한 열악한 주거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강남은 없다는 것, 따라서 주거빈민 역시 ‘강남 사람’이며, 그런 한에서 ‘나가라마라’ 할 수 없다는 것. 이들에게 있어 (반)지하를 비롯한 열악한 주거는, 자신들의 기여로써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이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한 사회적 관계를 필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재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한되고 불리한 선택지 안에서 취한 물리적 지지대일 수 있는 것이다. (반)지하에 관한 부정적 표상에서 비가시화되는 것은 (반)지하 거주자들의 이 같은 행위성과 정체성이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히 논할 것이다.

4장 (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경험과 정체성

앞 장에서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반)지하의 사회적 표상, 그리고 (반)지하가 환유하는 오늘날 빈곤의 성격에 관해 간략히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반)지하 거주가 일종의 ‘낙인’(stigma), 곧 ‘손상된 정체성’(spoiled identity)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하고자 한다(고프만, 2009).

물론 고프만이 대표적인 낙인의 예로 드는 ‘신체적 낙인’이나 ‘종족적 낙인’과 비교할 때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분위장’(passing)이 용이하다는 차이점을 갖는다(Kusenbach, 2009: 401). 즉 (반)지하 거주가 감출 수 있고, 바꿀 수 있으며, 체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것이 정체성에 미치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집(home)이 물리적인 거처 이상의 의미, 곧 개인적·집단적 정체성 및 관계의 상징으로 표상되고 경험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특히 ‘부동산 계급사회’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한국에서, 가령 ‘아파트’에 산다는 것과 ‘(반)지하’에 산다는 것은 좁은 의미의 주거환경의 차이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손낙구, 2008). 요컨대 (반)지하 거주, 좀 더 넓게 말해 ‘주거빈곤’은 다른 낙인에 비해 가시성은 떨어지지만, 개인의 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는 ‘집’에 관한 낙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렬한 낙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낙인, 특히 주거빈곤과 관련한 낙인에 노출된 거주자는 이 낙인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낙인이 정체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낙인에 의한 정체성 훼손을 일종의 ‘사회적 불의’로 해석하면서, 스스로를 이 사회적 불의에 맞서는 저항적인 주체, 따라서 극히 능동적인 주체로 탈바꿈시킬 수도 있다(Renault, 2012: 109~112). 물론 이런 차이는 단순한 의지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기보다, 낙인 및 그 낙인을 초래하는 사회적 정상성의 강도, 그리고 이 낙인에 대한 대응 및 재해석에 가용될 수 있는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자원의 정도에 따라 규정될 것이다.

이상의 관점 하에 이번 장에서는 (반)지하 주거형태에 대한 거주자들의 해석, (반)지하 주거가 낙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거주자들의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와 거주자들의 정체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거주자의 물리적 주거환경과 기존의 주거 경험·이력, 그리고 서사적 자원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낳는지를 주로 살펴볼 것이다.

1. (반)지하라는 낙인에 대한 거주자들의 대응 전략

1) '일시화' 전략을 통한 낙인의 회피

(반)지하 거주자들이 언급하고 사용하는 가장 빈번하고 공통적인 전략은 '일시화' 전략이었다. 여기서 '일시화' 전략이란 (반)지하라는 주거형태를 자신의 주거 이력에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반)지하 주거가 정체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일컫는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반)지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한 두 명의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응답자가 (반)지하를 '임시거처'이자 잠시 스쳐가는 장소 정도로 규정했다.

40대 후반 여성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동작구 흑석동 무허가정착지에 살다가, 재개발이 되면서 몇 년 전 (반)지하로 이주하여 40개월을 산 뒤, 다자녀가구 자격으로 최근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한 응답자의 답변은, '일시화' 전략의 전형을 보여준다.

저는, 지하하면, 이렇게 기피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꿈, 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거기서 밤을 많이 새웠어요. 부엌 요만한 공간에서, 지금 이 상, 우리 이 상으로 밥을 먹었어요. 못 버리겠어요. 이 한 상으로. 애들이 다리 길잖아요, 그 좁은 데도요, 불평불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사랑, 그게 있었어요. 근데도 좀 싸움은 있었죠, 아니 덜 됐었죠, 우리 남편이. 근데 거기서 우리, '힐링', 요즘에 뭐 그러잖아요, 치유하고 왔어요. 거기서, 거기서 우리가, 회복되고 왔어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바로 못 들어가고, 거기를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장소. 그니까 쉬어가는 장소. 그니까 딱 40개월.

[집 상태가 안 좋아서] 신혼부부나 다들 보고 와서는 노(No)했대요. 온다 그레 놓고 안 오고. 근데 우리는 하자마자 바로 저기했죠. 이미 우리는 그 생각을 했기 때

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 회복되고 그런 과정. 그 전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사람은 누군가 쉬어야 되잖아요. 하나의 로렘나무 밑에서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쉼 공간, 응. (...) 저쪽에서 마음껏 못 누렸던 것, 그냥 앞만 보고 왔던 거를, 만남을 통해서 잠깐 회복. 그것도 은혜예요. 저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 하면 가난이 나한테는 정말 힘든, 고통스러운, 고통인데, 그 고통이 나를 전진케 했고, 나를 힘 있게 만들었다. (사례 F)

이 응답자는 (반)지하를 ‘로렘나무’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주거 경험을 해석함에 있어 종교적 서사를 활용한다.²⁴⁾ 즉 이 응답자에게 (반)지하란, 인생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장소이자, 아파트로 상징되는 더 나은 주거형태와 자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잠시 체류하는 ‘피난처’로 표상된다. 응답자 스스로 인정하듯 (반)지하는 여러 모로 부족하고 열악한 주거형태였다.

보일러도. 구십 몇 년에 한 거더라고. 그거를 고장났는데. 지하다 보니까 습기 차고, 벽에 습기. 한 번 등사무소에서 예방. 한 번 해 준 적 있는 거예요. 워낙에 습기 차고. 또 엉망.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데. 도배만 했겠죠. 누가 사나 마찬가지로. 8년 동안 도배를 안 했는데, 뜯어지죠. 화장실 베니어판 같은 거 붙여놓은 거니까. 너덜너덜. 진이 화장실에서 흘러나올 정도로. 방수, 스티커. 걸보기만 괜 찮게. (사례 F)

하지만 (반)지하가 영원히 머무는 처처가 아니고, 거기에서 겪었던 가난과 고통이 ‘나를 전진케 했고, 나를 힘 있게 만드는 한에서, 이 주거 경험은 회고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 응답자의 해석에서 (반)지하에서의 열악한 주거 경험은 ‘종교

24) ‘로렘나무’란 본래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자라는 관목의 하나로, 높이는 2미터 정도이고, 잎은 바늘 모양처럼 생겼다고 한다. 로렘나무를 한글로는 ‘싸리나무’로 옮기기도 하는데, 생긴 모양이 빗자루 같이 뻗어나가기 때문으로, 이 나무에서는 그늘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광야에서 ‘로렘나무 아래서 햇빛을 피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비참한 신세’를 의미하는 상징이었다. 살인적으로 내리쬐는 사막의 태양을 피해야 하는데, 기멜 데라고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로렘나무밖에 없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로렘나무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점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치유와 구원의 순간으로 의미화되기도 한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서 생애의 가장 지치고 무기력하며 절망가득한 시기를 보내던 엘리야가 로렘나무 아래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기적으로 회생하는 일화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로렘나무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방향전환과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를 표상한다.

적 수난이자 ‘힐링’으로 표상된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는데, 이 주거 경험, 이 가난과 고통이 응답자가 힘주어 말한 것처럼 ‘딱 40개월’에 그쳤다는 것이다. (반)지하에서의 주거 경험이란 일시적인 한에서만,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후 회고적 시선에 의해서만 긍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일시화 전략은 특히 현재의 주거를 ‘짧어서 혼자 살 때’, 곧 생애주기와 주거이력의 초기에 겪게 되는 일시적 경험으로 간주하며, 실제로 (반)지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들의 경우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만일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생기면 올라가겠냐는 질문에, 차라리 보증금을 추가해서 월세를 낮추겠다고 대답한 다음, 곧바로 단서 격으로 붙인 아래 응답이 대표적이다.

혼자 사는 입장이니까, 돈이 생기면은 보증금을 추가해서 월세를 낮추는, 그게 더 나은 것 같고, 굳이. 뭐 가정,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맞죠, 반지하보다.

[가족이 생긴 다음에도 반지하에 산다고 하면] 그때는 아마 부모님들이 안 좋아하시겠죠, 반지하 산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있고, 웬만하면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겠죠, 가족이 있으면. 혼자 살면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가족이 있고, 애들 솔직히, 애들도 이제 또 애들, 친구들 눈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친구들 잘 모르긴 하겠지만, 뭐 친구들 부모한테, 개 어디 살아 그러면, 계단 밑에 살아, 이렇게 말하면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시설은] 괜찮은 거지만. 뭐 또 친구들끼리, 애들끼리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식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는, 못해주는 건 아니지만, 반지하에 산다는 게, 그런 사람들 인식이 좀 안 좋으니까. 또 이제 애가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뭐 지금 다 컸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결혼해서 애 키울 때는 지상으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사례 G)

20대 중반으로, 대학 졸업 후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 응답자는 신축건물인 원룸형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현재의 주거환경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는 얼마 전까지 노후 건물 (반)지하에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평일에도 주말에도 집에 있고 싶지 않은 집”이었던 데 반해, 지금의 (반)지하는 채광이나 습도, 아늑함 등 모든 면에서 ‘집다운 집’이라는 느낌을 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반)지하의 주거환경을 극

단적으로 열악한 곳이라고 묘사하는 사회적 표상, 그리고 (반)지하를 없애야 한다는 식의 입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만을 표했다.

반지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번쯤 살아 봤으면 좋겠어요. 반지하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아예 살아보지도 않고 안 좋다 하는 건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반지하 같은 경우는. 예, 빛도 잘 들어오고 좋은 곳도 많으니까. 거부하는 사람들보다는 한번쯤 살아보고 느껴보고, 뭐가 안 좋은지 알 수 있으니까.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반지하를 몇 번 살아보고. 반지하가 너무 안 좋다는 인식이 많아가지고, [그런 인식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례 G)

하지만 그 대가는 현재 직장의 한 달 평균 수입인 150만 원의 30%인 45만원(관리비 포함, 보증금 300)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이었다. 현재 이 응답자가 주거와 관련하여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비용이었고, 그 외로는 만족하는 편이었다. 돈이 더 생기더라도 굳이 지상으로 옮기기보다는 월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 때 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반)지하의 주거환경에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곳이 일시적인 거처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혼자 살고, 아직 가족을 이루지 않은 상태라면 살 만한 곳이지만 '정상적인 가족을 꾸리면서 살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라는 것이었다. 이 부적합함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응답자가 든 것은 물리적 주거환경이 아니라 (반)지하의 사회적 표상에 결부된 낙인이었다. '계단 밑에 사는 것'이 아이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응답자에게 있어 (반)지하는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주거형태가 아니다.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주거형태는, 그가 보기에 역시 아파트다.

아파트면 솔직히 더 좋고, 빌라라도 상관은 없어요, 지상으로 올라가면. 그때 상황에서, 지상이면 빌라라도 상관없는데. 아파트면 솔직히 그 주변에 다 있잖아요. 아파트 내려오면 슈퍼도 있고, 여기처럼 그냥 좀 멀리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집 앞에 바로 있으니까, 뭐 24시고 하니까, 뭐 그런 편의성도 편하고.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라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빌라도 상관은 없는데, 아파트 더 좋고. 사람들끼리 또 많이 친목도모도 할 수 있고. (사례 G)

(반)지하의 사회적 표상에 결부된 낙인은, 주거환경이 좋은 (반)지하에 사는 거주자에게도 일시화 전략을 취하게 만든다. 이런 식의 일시화 전략에 의해, 자신이 살고 있는 (반)지하는 ‘임시거처’로, 아울러 이곳에 살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은 ‘주만’이라기 보다는 ‘머지않아 떠날 사람’으로 표상된다. 아울러 이런 임시 거처에 오래 사는 것은 암묵적으로 일종의 ‘실패’로 표상될 수 있다.

문제는 앞서 살펴보았듯 중년을 넘긴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청년들에게조차 (반)지하 주거, 더 넓게 말해 주거빈곤이 애초에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이른바 ‘싼룸 올드보이’의 처지에서 벗어나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동아일보』 2012. 10. 20). ‘지하방 탈출이 무기한 유예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 (반)지하 주거의 낙인을 회피하기 위해 취한 ‘일시화 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 거리두기(distancing) 전략을 통한 낙인의 모면

고프만에 따르면 낙인찍힌 집단의 구성원들은 대개 사회 전반의 규범을 채택·내면화한다. 이 때문에 이들은 모종의 양가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부정적 표상에 부합하여 행동할 때 특히 그렇다(고프만, 2009: 163~165). 이런 양가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가 ‘거리두기’(distancing)다(Kusenbach, 2009: 407). 즉 부정적인 사회적 표상에 부합하는 동료 집단과 스스로를 분리함으로써, 그들에게 가해지는 낙인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모면하는 것이다.

이 전략 역시 대부분의 응답자들에게서 공히 발견되었다. 거리두기 전략은 그 중에서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주거형태를 나누는 전략, 그리고 거주자들을 나누는 전략이 그것이다.

(1) 주거형태를 나누기

뭐 아무래도 몇 층에 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는 선택된 자야. 반지하치고는 굉장

히 이게, 밝고도 지금 오늘은 해가 뜨면은 여기까지 환해. 나는 참 선택된 잔데. 그러고도 또 마당이, 반지하라도 마당 있고, 넓고, 햇볕이 잘 들고. 근데 여기, 이 집만 그래. 이 집에서 한 집만, 여기 이런 데는, 뽕 갠혔고, 햇볕 차단되고. (...) 서울에서 마당 있는 집이 드물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나도 내년이면 환 갠이거든요. 먹어가니까 옛날 게 그림잖아요. 그리고 서울은 1층이 아니래도, 2~3층, 나 사당동 살았지만, 2층이어도, 앞뒤 건물에 다 가려서, 이 건물보다, 지하보다 더한 거예요, 햇볕 보기가. 근데 이거는. 그리고 대화도. 딱딱 붙어 있어서 그 집 창문 열면은. 그런데 오히려 말이 지하라 해도 보다시피 너무 오히려, 너무 나는 이 집이 행복해요, 오히려. 내 집이 아니어서뿐이지, 행복해요.

그리고 주인 좋지. 마당 내가 다 쓰는 거예요. 위의 층은 쓸 필요가 없고. 식구도 남이라고는 없어요. 아래 1층은 당신 아들, 2층은 당신 부부, 그런데다 옛날부터 또 알지, 좋지, 또 교양인이지. 어쨌든 나는 선택된 자라고 봐요, 나는 좀 그런 면에서는.

아니 여기도, 우선 이 앞집만 해도, 앞집만 해도 담으로 싹 가리고, 위의 층은 앞집만 해도 여기가 좀 흰해서 햇볕 보인다지만, 그러거든. 거의가, (사례 E)

50년대 후반의 이 응답자는 수십 년 전에 난곡에 이주하여 무허가주택을 짓고 살다가, 지난 2000년대 초중반 난곡 일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집 주위는 재개발 대상에 포함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집을 수리하려다가 일이 잘못되어 결국 집을 잃게 되었다. 살던 집 근처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그 집에 살 수는 없는 형편이었고, 원래 살던 집의 재건축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본인은 친척집과 기도원, 아들은 고시원 등을 전전하다가, 일이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다시 살던 집 근처 (반)지하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 응답자는, 본래 자신이 살고 있는 (반)지하가 이웃에 있는 (반)지하를 비롯 다른 (반)지하들과 주거환경 면에서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했다. 이 응답자가 거주하던 곳은 실제로 인터뷰가 진행되던 내내 햇볕이 환히 들었고, 또 방 크기도 넓은 편이었다. 이 집 1층에 집주인의 아들이, 그리고 2층에 집주인이 사는 데서 알 수 있듯, 애초 이 집은 임대 목적으로 지었다기보다는 자가 용도로 지은 것으로, 이는 (반)지하의 주거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집은 펍 예외

적인 경우로, 바로 옆 건물을 비롯하여 일대의 건물은 매우 다닥다닥 붙어 있어, 채광 등 환경이 좋지 않았다. 응답자는 다른 (반)지하와 이 집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을 '선택된 자'로 호명했다. (반)지하 주거형태를 분할함으로써, (반)지하라는 주거 형태와 결부된 낙인을 모면하려고 한 것이다.²⁵⁾

비교적 주거환경이 좋은 (반)지하 거주자들의 경우, 이런 식의 전략을 공통적으로 사용했다. 특히 신축 원룸형 (반)지하에 사는 20대 초반의 거주자들은, (반)지하나 지상이냐로 나눌 것이 아니라, 신축 건물이나 오래된 건물이나로 나누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근데 저는 그때 3층 살았는데도 햇빛 안 들어오고 그랬어요. 건물이 붙어 있잖아요. 워낙 조금해야지. 한 3평? 고시원, 완전 고시원. 근데 지금 여기랑 똑같아요. 가격이. 3층이라는 이유라서 비싼 거예요. 지금은 반지하여도 빛도 오히려 더 잘 들어오고. 맞아요, 건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례 I)

극과 극인 거 같애. 이게 원룸 반지하랑, 신축 원룸 반지하랑요 오래된 건물 반지하랑 진짜 극과 극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옛날 반지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한 틀에 철창에 발만 보이고 다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반지하만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창문도 크게 만들고 햇빛이 진짜 잘 들고 통풍도 잘 되고. 창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문만 열면 시원한 바람. 딱 이게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반지하도 있고, 진짜 허름한 반지하도 있는데. (사례 H)

실제로 다른 다세대주택 3층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례 I의 응답자는, 당시 주거 환경이 면적이나 채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사는 (반)지하보다 훨씬 열악했는데, 지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사는 곳과 가격이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상이나 지하냐가 아니라, (반)지하가 속해 있는 건물의 전반적 상태와 환경이 어떤가 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는 사실에 기초한 항변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사는 (반)지하

25) 아울러 전에는 '이런 지하는 안 살았고, 세도 안 살아봤으며, (반)지하에서는 집 짓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임시로 거주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등, 이 응답자의 경우도 일시화 전략을 사용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고백하듯, 정말 일이 잘 풀리게 될지 어떨지는 확실치 않아 보였다. 그럼에도 일시화 전략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면에는, 세입자 생활도 안 해 본 처지에, 아무리 주거환경이 좋더라도, (반)지하 세입자로 '추락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는 흔히 (반)지하하면 떠오르는 곳과는 다르다고 주장함으로써, (반)지하와 관련된 낙인을 회피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최근 방을 구하기 위해 여러 곳을 알아보고 직접 돌아다녀보았다는 20대 초반의 응답자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처음에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원룸텔이나, 고시방, 그걸로 알아봤는데, 고시방은 고시방대로 안 좋은 점이 좋고. 고시원하고 또 고시텔이 있고, 또 원룸 있고 원룸텔이 있고. 그러니까 오피스텔 형식으로 지어서 이제 그걸 원룸텔이라고 하는 거고, 원룸 같은 거는 뭐 약간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그러니까 원룸텔 같은 경우는 세탁방이 또 붙어 있고, 휴게실이 따로 있고. 고시원, 고시텔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진화한 것이 원룸텔이고. 급이 있죠, 고시방, 고시텔, 원룸텔, 그 다음에 원룸, 이렇게 급인데. 알아보니깐 가격은 이상하게 원룸텔이 더 비싸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룸텔이 이제 신식이고. 생활하기에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룸이 나은 것 같아서 원룸 찾다가, 이제 옥탑방이나 (반)지하냐 이걸로 또 나뉘지고. (사례 J)

이 응답자가 말하는 것처럼, (반)지하냐 아니냐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고시원, 고시텔, 원룸텔, 원룸 같은 주거적 위계다. 아무리 (반)지하에 있더라도, 원룸 건물에 있는 (반)지하는 고시원에 있는 지상보다 상태가 훨씬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자신의 거처를 (반)지하로 부르기보다는, ‘원룸’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했다.

(2) 거주자들을 나누기

하지만 (반)지하에 관한 낙인을 다루는 이런 식의 방식은, 주거환경이 뒷받침해 줘야 가능하다. 만일 현재 살고 있는 (반)지하의 주거환경이 주위의 다른 (반)지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면 이런 식의 전략은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거주자들과 자신을 주거환경과 다른 여러 가지 기준을 동원하여 구별짓는 전략이 사용되곤 한다.

나 같이로, 지하를 살든, 좌우지간, 70대, 65세, 70대 넘은 사람들은 노후대책 해 놓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자식들 가르치고, 어떻게 좀 자식들 못 가르친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있어. 집을, 왜냐면 자식들 안 가르치면 돈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 좀 다 제대로 갈친 사람들은 집이 없

어. 노후대책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반)지하에 사는 이웃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자 딱 봐도, 내가 요래 몇 사람들 딱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자 난곡이면 난곡4거리다, 신림이면 신림4거리다, 이런 데는 하루 일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용직. 일당으로 받고. 일거리 있으면 벌어들이고, 없으면은 그냥 그날도 공치고. 그냥 소주만 안주 없이 사서 한 병 먹고,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사실 뭐 대부분 뭐 무식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요. 지금 일을 해도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틀려요. 절대 틀려요. 왜냐면 배운 사람들은 벽돌 한 장을 쌓아도 딱 나오잖습니까 머리에 통밥이. 근데 못 배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하라는 대로만 해양게. 얼른 그 일을 배워서 차고 나가서 앞에 나가서 일꾼을 부려먹을 정도로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아 멍청한게 배우간디, 못 배우지. 그렇게 항상 데모들만 하다가, 그렇게 해서 자식들 키워서, 자식들이 좀 잘 되면은 편히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늙어 죽도록까지 그런 대로 살다가 가는 거고 그런 거요. (사례 A)

현재 70대 초반으로, 1967년에 신림동 하천부지에 무허가로 정착한 이래 자가소유자와 세입자를 오가다가 지난 8년 전부터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세입자 생활을 시작한 이 응답자는 독특한 구별짓기 전략을 썼다. 우선 70대 노년층의 경우 집이 없다는 것은 ‘자식들 좀 다 제대로 갈쳤다는 징표이며, 역으로 집이 있는 것은 ‘자식들 못 가르쳤다는 징표라고 주장한다. 즉 집이 없이 (반)지하에 사는 것이 오히려 일종의 성취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반면 그보다 젊은, 50대 이하의 사람들이 (반)지하에 산다는 것은 ‘무식’의 징표로 간주된다. 이들은 무식하고 배운 게 없어서 기술을 익히지 못하고, 따라서 일용직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들의 이런 처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반)지하라는 주거형태다. 동일한 주거형태가 세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그와 상관적으로 거주자의 정체성을 뒤바꿔 놓는 것이다.

앞서 자신의 (반)지하 주거 경험을 ‘종교적 수난’으로 해석한 바 있던 응답자 역시 자신과 다른 거주자들을 구별짓는 전략을 사용한다.

다들 이혼하고. 제 옆집에는, 제가 인제, 거기를 갔는데, 정말 술 먹고, 정말 그런 일을 할 만한, 진짜 그건 거예요. 이혼한 여자, 그런 분들이, 여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사 왔는데, 한두 달. 하나님, 저기 나 못 보겠고. 다 들리잖아

요. 저기 내보내든지, 제가 전도해 가지고 변화시키든지.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일 안 하고 놀 때는 여자들 왔다갔다, 자식도 있고 그런데. 이혼한지 어떤지. 정말 나는 우리 애들한테, 없지만, 이건 아닌 거예요. 좀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좀 이사가든지, 시골로 가든지. 정말. 막판에 방도 안 뺐는데,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진짜 다른 사람은 거저 줬겠지만. 주고 싶지 않은. 몰라요 그러고 싶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 거기 우리 옆집 아가씨도 저기했는데, 아가씨도 보면은 혼자니까 자기밖에 모르더라고요. 줄지를 모르더라고요. 담고 사는 거죠. 뭐가 있는데 솔직히 김, 이런 거 선물 들어오잖아요. 된장 그냥 버리는 거야. 줄 줄 모르는 거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줘요. 시골에서 뭐가 왔으면 고구마가 왔거나, 감이 왔거나, 별 거 아니지만 농사지은 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대접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미용실, 과일가게를 해도,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저기인데도, 저한테 관심을 저기하면서, 뭘 하나 주더라도 더 주시더라고요. 안 다녀도 인사라도 받는 거죠. 인사라도 하고. 저는 그랬어요. (사례 F)

위 응답에서 보듯, 이 응답자는 자신의 이웃에 살았던 (반)지하 거주자들이 (반)지하 거주자들에 대한 통상적인 사회적 표상, 즉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서로 고립된 채 살아간다는 식의 표상에 부합했다고 말한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자신 역시 그런 식의 낙인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응답자가 기대는 자원은 다시 '종교'였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한에서, (반)지하 같은 가난한 곳에 사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지만, 종교가 없다면 (반)지하 거주자들 특유의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이 응답자의 주장이었다.

3) 신분위장(passing) 전략

이 장의 서두에서 언급했듯, 주거형태에 관한 낙인은 '신분위장' 전략을 사용하기에 용이하다. 하지만 신분위장을 통한 정보통제가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 가령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신분위장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만,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전략을 사용하기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좀 가까운 사람은 상관없는데, 조금 거리감 있는 사람들은 잘 애길 안 하죠. 반지하 산단 얘기를. 여자가 반지하 산다고 하면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시선이, 아직까지. 애가 못 사나? 안 좋은 집에 여자 혼자 살면은. 예, 인식이 안 좋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반지하 이사오기 전에는 반지하 안 간다 이런 거였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인식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원룸 산다고만 얘기하고. (사례 H)

이 응답에서 보듯,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반)지하에 산다는 것 자체를 가급적 드러내지 않고, ‘자취’나 ‘원룸’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안 좋은 집에 여자 혼자 사는 것에 관한 낙인을 모면하기 위해서다.

지하에서 없이 살면은 아무래도 괘시가 뭐 있지요. 그렇게 인자 뭐 소문낼 게 아니라, 슬쩍 여기서는 와 버리니까. 누가 알까 모를까. 일절 그런 거는 뭐, 이사 와 가지고 초대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로 다른 사람들은 그 전 같이 잘 사는 줄 알고. (사례 A)

이 사례 역시, ‘지하에서 없이’ 사는 것에 대한 ‘괄시’를 느끼고 있고, 따라서 신분 위장 전략을 사용한다. 앞서 언급했듯 이 지역에서 40년 이상 살았던 이 응답자는, 그동안 자신이 구축했던 지위 및 정체성—가령 이 응답자는 한때 신림○동의 호남향 우회장을 지냈다—을 유지하기 위해 신분위장 전략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초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 형성된 관계를 그럭저럭 관리할 수는 있으나, 집을 매개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등의 적극적인 시도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수해를 겪는 등 비교적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에 살고 있는 다른 응답자에게서도 비슷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초대는 안 했어요. 나는 집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 초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깔끔하게 못 하고 있으니까. 치워놓으면 금방 우리 손자 어질러 놓지. 누구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사람들은 오지. 사람들 들어오지는 않지. (우리 손자도 친구들을) 집에는 안 데리고 오죠, 왜 집이 안 좋으니까. 다 친구들이 잘 살더라고, 보면은. 고 동네 사는 애들도 많은데, 다 2층에 살고, 그래도 집

이 좋은 집에 산다 그러더라고. 인제 교회 애들은 데리고 오지. 교회 애들은 우리 보다, 나도 그래도 인제 좀 사정을 알으니까, 안 창피하니까, 안 창피하지만. 사정 모르는 애들한테는, 저도 거짓말 했겠지, 이렇게 못 산다고는 안 했겠지. 그러니까 못 데리고 오는 거지. (사례 D)

따라서 신분위장 전략은 자신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를 분할하는 결과를 낳는다. 위 사례에서 보듯, 응답자가 맺는 사회적 관계는 ‘자기 집에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응답자 손자의 경우 ‘교회 애들과 2층 사는 애들’)로 분할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전략의 문제는, 이 전략이 오히려 관계맺음을 심화시키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지금, 지하에 사는 애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있다, 친구가 있는데. 개는 개가 지하에 사는 걸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우리 집만 계속 지금 한 십몇 년 가까이 다니는 거야, 우리 집만. 개가 우리 집에만 와요. 그리고 나는 개네 집을 몰라, 아직도 몰라. 개는 나한테, 뭐 집이 어디다, 뭐 이런 뭐 지하다 그런 말을 안 해요. 무슨 뭐 있으면은, 어 너 집에 가 있어, 내가 우리 집에 가서 갖다 줄게, 이르고 집으로 갖고 와. 개만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나는 한 번도 안 가 봤어요. (...) 지가 나한테, 나 어디에 산다라든가, 우리 집은 지하인데 뭐 어쩌고, 이렇게 지나가면서라도 얘기하면 저건데, 시치미 똑 떼고 앉아있어, 시치미 똑 떼고. 그러니 내가 거기다 대고 어떻게 아는 척을 해. 집 얘기 안 해, 절대. 그리고 없는 척도 안 해. 없는 척도 안 해 생전. 뭐가 맺혔어, 개가.

말을 안 해 개는. 말을 안 하는데, 술 한 잔만 먹었다 그러면은, 막 노래하고 싶어하고, 꼭 남자들한테 술 먹고 막 들이대고 막 이러는 거야. 개는 그게 있더라고. 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맨날 모임 딱 끝나면, 신랑이 있을 때 불미스러운 일 일어나면 안 되잖아. 신랑 딱 끝나면 우리는 딱 2차 없거든. 2차 술 마시거나 노래방 가는 거. 근데 개가 술만 먹으면, 모임에만 나오면 막 풀어. 풀고 살아. (사례 L)

이 응답자는 자기 집에 세를 놓는 자가소유자로, 십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 중 이 ‘신분위장’ 전략을 사용하는 (반)지하 거주자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응답자와 이

웃에 사는 다른 자가소유자는 이 거주자의 전략을 ‘자격지심’의 발로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도 봐봐봐, 이 여자도, 전혀 밝히질 않잖아. 자기가 어디 산다는 걸. 자기 집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지하방 살면서. 근데 지하방 사는지 아는데 자존심 상황까 봐 얘기 안 하고. 친구면, 왜 집에 놀러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왕래가 있어야 되는데. 안 친해도. 자존심 얼마나 센데. 열등감도 세고. 그니까 얼굴 보면 사람이 이렇게 좀 어두워 보인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한이라든가, 뭐 쌓여 있는 게. 반지하 사는 사람들 얼굴 보면,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정말로. 대부분. 그냥 주인들 봐도,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물론 성격 탓도 있겠지만, 성격도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아~ 막 이렇게 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속은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아 오죽하면, 반지하 살면서, 아유, 나 같아도, 내가 반지하 살면, 난 미쳐버릴 거 같애. 혼자 이렇게 반지하 살면. 직장-집, 직장-집,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반지하 살면. 어디 나가서 그런 짓만 하고. (사례 K)

그들이 보기에 친구가 되려면 ‘집에 놀러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왕래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분위장 전략을 사용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은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지 않는, 따라서 항상 무언가를 감추는 ‘그늘지고 어두운’ 사람들로 표상된다.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신분위장 전략이 오히려 사회적 관계에 장애로 작용하는 역설적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다.

4) 무시(ignoring) 전략

(반)지하 거주자에 관한 낙인을 상쇄시킬 수 있는 논거가 있는 경우, ‘무시’ 전략이 사용되기도 한다. 무시는 차별이나 괴롭힘, 그리고 낙인찍기 같은 상호작용의 문제들을 다룰 때 흔히 쓰이는 전략인데, 말 그대로 낙인과 관련된 부정적 심상들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도 보면 다 인사하고, 별로 몰라도 인사를 서로들 해요. 그런 게 좋고. 오래 살으니까 내 동네다 싶고. 그러니까 4월 달에 4년이니까. (...) 그냥 앞에 이러

게 보이는 사람들. 사람들 많이 나와 있고, 또 나이든 사람들은 서로 내 나이 또래 거의 된 사람들 서로 인사하고 그러니까 인제 교류가 되는 거죠. 그래도 자존심은 안 상하더라고. 나는 좀 못 사는데. 왜 그러냐면은,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아저씨가 아파갖고 돈 다 까먹으니까, 내 혼자 열심히 벌었는데, 그래도 뭐 애들 잘 자라주고, 망가지지 않고 잘 자라줬는데, 창피한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인사하고 잘 지내요. (사례 D)

남편이 질병으로 쓰러진 후 지난 수십년 동안 가장 노릇을 했고, 자식들도 나름대로 잘 키웠다고 자부하는 이 응답자는, (반)지하에 살지 않는 또래 이웃들과 교류할 때 ‘무시’ 전략을 사용한다. ‘열심히 살았다는 자부심, 곧 (반)지하 거주와 관련된 통상적 낙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정서적 자원이 무시 전략을 가능케 한 것이다.

[(반)지하에 산다고 위축되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뭐 제가 뭐 잘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위에서도 뭐, 제 친구들한테서는 솔직히,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중요시되는 거라서, 그런 거는 없고. 혼자 뭐 어떻게 사느냐, 살 만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왜냐면 개네들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이제 왔다갔다 통학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사례 J)

20대 초반으로 최근 수원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독립하면서 신림동 원룸 (반)지하로 들어온 이 응답자 역시 (반)지하에 사는 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응답자의 연령대인 20대 초반의 또래집단에서는 (반)지하라는 주거형태보다는 ‘독립’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 아울러 (반)지하가 ‘서울 진입’의 한 ‘교두보’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반)지하와 관련된 통상적인 낙인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대부분 중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5) 노출(exposing) 전략

노출 전략이란 낙인을 감추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낙인을 ‘도움’과 ‘돌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원으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이는 낙인찍힌 처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할 때 사람들이 혼

히 취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이 전략을 주로 사용한 사람들은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년층이었다.

내 다리, 허리가 이러니까. 이 계단이 일곱 계단이에요. 내려올 때는 뒤로 돌아서 내려오고, 올라올 때는 한 계단 한 계단. 부엌 이렇게 높은 데가 두 계단이에요. 화장실도 두 계단인데 높고. 그래서 제일 오르내릴 때가 불편해요. 그래서 TV 동행, 한국토지공사라든가, 거기다 사정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농 안에서 옷을 그냥 못 입어요, 곰팡이 나서. 화장실도 나지막해가지고 화장실도 부딪쳤싸면서도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엉망이에요 아주. 천장도 나지막해가지고 머리 자주 다쳐. 방은 2개예요. 2개인데 저쪽 방은 아예 별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여그 창문 열어놓으면 창문에서 조금 들어오고. 햇빛 금방 들었다 금방 가요. 점심 때 잠깐 들어왔다가 그냥 또 나가요 또. 그거 든다고 해도 어떤 때는, 그냥 가슴이 답답한 게, TV만 쳐다보고 앉아서 울고 앉았는 게 한평생이죠. 괜히 혼자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집이 이렇고. 집도 그렇고. 남이 볼 때 그냥 좀 사람 무시하는 것 같고. (사례 C)

현재 70대 초반으로, (반)지하에 12년째 살고 있고,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자식 한 명과 함께 생활하는 이 응답자는, 자신의 열악한 처지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열악한 처지를 언론이나 기관 등을 끊임없이 알림으로써, 영구임대주택을 얻고 싶어 한다. 그에게 있어 (반)지하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감춰야 할 치부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과 돌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원이 된다.

아이고 참, 이게 사는 것이 이거 참. 말이 그렇지, 몇 년 동안 이 침대 생활, 이거 침대에서, 사무실 바닥 침대에서 잔다는 것이 이게. 아이고 좋은 새끼들도 떨어져 놓고, 마누라도, 나 참말로 이 나이에 뭘 짓인지 모르겠어 나. (사례 B)

역시 70대 초반으로, 아내와 이혼한 후 이는 고향 사람의 비주거용 지하실에서 10년째 생활하고 있는 이 응답자가 면접을 시작하자마자 던진 첫 마디는 ‘좀 돌봐 줘’였다. 이 응답자는 자식들이 있어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도 되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하고 있는 폐지 수집으로는 지하실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렇

듯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략이 '노출'인 셈이다.

2. (반)지하 거주자와 주민 정체성

(반)지하 거주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심층면접 과정에서 발견한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반)지하 주거형태 및 거주자에 관한 기존의 사회적 표상에서 별로 부각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부정되었던 것, 곧 '주민 정체성'에 관한 언급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반)지하 거주자에 관한 사회적 표상에서, (반)지하 거주자는 대개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끊임없이 밀려나는 '유랑민'이나 '난민'으로 그려지며, 그런 한에서 지역에서 주민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곧 '고치'(cocoon)족으로 여겨지곤 한다(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0; 장세훈, 2005).

이상의 표상에는 나름의 현실적 근거가 있다. 하지만 이런 표상은 자칫 (반)지하 거주자들의 삶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서 장애물 노릇을 할 수 있다. 우선 (반)지하 거주자를 '유랑민'으로 표상하게 되면, 이주/정주의 배타적 이항대립에 빠져, (반)지하 거주자들의 이주와 정주가 보기보다 더 밀접하고 내재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할 수 있다.

서울시내 주거이동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들은, 주거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근거리 이동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김태현, 2008; 양재섭·김상일, 2007). 이에 따르면 한편으로 높은 주거이동률, 다른 한편으로 기존 주거지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주거관성은, 그 외양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립가능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해보자면, 서울 내에서는 한강을 넘는 강남북간 이동이나 다른 생활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은 찾아보기 힘들며, 대체로 중생활권 혹은 대생활권 등 동일 생활권 내에서 교통망을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양재섭·김상일, 2007). 또한 동일 자치구 내의 이동이나, 인접한 자치구 상호간의 근거리 이동이 높게 나타난다.

1) 중·장년 거주자와 주민 정체성

서울 외부의 지방 시·도에서 전입한 20대 4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반)지하 거주자 역시 이런 이주 경향을 보였다. 대개의 주민들은 관악구에서 짧게는 30년, 길게는 50

년 가까이 거주하였다. 자치구를 옮긴 경우에도, 동작구 흑석동에서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동하는 등 인접한 자치구 사이에서 근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이거나,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동했다가 3년 만에 돌아오는 식으로, 기존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 때문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해당 지역 주민으로 규정하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발언이 많이 나타났다.

신림동에서, 62년도에 와 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거요. 본토지 뭐 본토. (사례 A)

(고향인 전라북도 부안에서 올라온 지) 한 지금, 한 40년 되야. (...) 신림동 죽 살았지 그냥. 토박이여, 신림동. (사례 B)

에지간하면 신림1동에서 나 모르면 간첩이라고. (사례 C)

이 낙골에서만 30년. 시집을 스물네 살 때 이리로 온 것이 지금까지 이 동네를. 뭐 본토박이나 다름없지. (...) 집 짓는다고 재작년에 한 3년 동안 사당사거리, 거기도 관악구더라고, 남현동, 매한가지. (...) 아무튼. 그러다 다시 인자 이리로 온 거지. 본거지가 여기라, 또 집안도 다 이 근방에 있고, 그러니까 또 멀리 가기도 그렇고. (사례 E)

이쪽 지역이 엄청 크고, 서민들이 살고, 가난한 저기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오면서 또 느끼는 게, 아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동네에 살아야 편하구나. (사례 F)

이렇듯 (반)지하 거주자들은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했으며, 이 지역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저런 관계망을 형성해 왔다. 따라서 이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자신의 노동이나 관계망 면에서 커다란 타격이 되며, 이는 가난할수록 더 그렇다. 아래 사례는 자신의 지역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위험부담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신림동에서 28살부터는 계속 거의 살다시피 했죠. (...)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 또 저 대치동도 가서 좀 살았어요. 대치동 저 뭐야 영세민 아파트. 그 전에 신림10동

산꼭대기 동네에서 많이 살았어요. 거기 막, 위에 비도 많이 새가지고, 방 하나짜리는 막. 그래서 아파트가 너무 좋아서 이사했거든요.

근데 3년 살다가 이쪽으로 다시 이사 왔어요. 우리 딸이 좀 사춘기 때 애들 잘못 만나서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그쪽에는요, 영세민들을 거기 애들하고 분리해서 학교도 그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분리하니까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막 돼갖고,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놀기만 하고, 돌아다니고. 선생님 자꾸만 학교 안 왔다고 전화하고.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엄마 아버지가 10살에 돌아가셔서, 공부 못한 게 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잘 갈치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아파트가 좋고, 돈 조금 나가지만, 그래도 애 교육을 위해서는 이사를 와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제, 나는 직장이 여기 있어서, 하루 종일 여기 있다가, 또 내가 교회 여기 있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한 12시 다 돼서 밤에 들어가니까, 애가 하루 종일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엄마가 직장 옆에 있으면서 자주 봐야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왔죠. 그러면서 인제 식당 같은 데 다니면, 낮에 또 잠깐 시간 있으면 집에도 가보고, 애가 어떻게 하나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니까는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신림동서 그래서 오래 살았죠. 인제 우리 아들 6학년 때서부터, 지금 우리 아들이 28살이에요. 지금 계속 인제 신림동에서 사는 거예요. (사례 D)

이른바 ‘산동네’로 불리는 신림10동 단칸셋방에서 살다가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대치동 임대아파트로 이주했던 이 응답자는, 임대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로 인해 딸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자, 주거환경은 임대아파트보다 더 열악하지만 자신의 일터와 교회가 가까이 있고, 딸을 좀 더 잘 돌볼 수 있는 신림10동으로 재이주한다. 그러다가 4년 반쯤 전 응답자는 신림1동 (반)지하로 한 번 더 이주하는데, 그 이유는 응답자가 다니던 교회가 신림1동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이 교회는 이 응답자의 가장 중요한 관계망 중 하나로, 응답자는 이곳에서 정신적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현재 직업인 요양보호사에 관한 정보를 얻기도 했다.

여기서 요점은 이 응답자가 신림1동 (반)지하로 이주한 것이, 지역에서 형성된 자신의 관계망을 보존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주거비를 더 부담할 수 있었다면, (반)지하보다 더 생활조건이 나은 주거형태로 이주했을 것이다.

이 집에서 (반)지하라는 주거형태를 선택하는 데 비용에 대한 고려가 작용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순전히 비용 때문에, 더 값싼 곳을 찾아서 (반)지하로 이주했다는 단순 논리로는 이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현재 이 응답자는 (반)지하의 열악한 생활환경 때문에 관악구의 매입임대 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설사 비용이 더 저렴하고 생활환경이 좋은 임대주택에 들어갈 기회가 생기더라도, 다른 지역으로는 이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자활에서도 아파트 나와서 간 사람 있더라고요, 작년에 다니던 사람은 강남 쪽으로. 먼 데 쪽으로 나오는 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인제, 중학생 손자가 있어서 개가 먼 데 안 가려 그러니까, 지 학교에서 안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인제. 개가 좀 낫을 가리잖아요. (...) 친한 친구들과하고 떨어지기 싫어해요. 친구는 많이 생겼더라고. 축구를 좋아해갖고, 축구하는 애들이랑. (사례 D)

즉 이 응답자의 경우 정주/이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것은, 비용이나 주거환경보다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망인 썸이다. (반)지하 거주자들을 ‘난민’이나 ‘고치족’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표상에서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주민’이기도 하다는 점, 즉 이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했고 이를 최선을 다해 보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비가시화될 수 있다.

이처럼 이주를 결정함에 있어, 주거비 못지않게 해당 지역의 입지 및 그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런저런 관계망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은, 인터뷰에 응한 주민들의 경우에서 대부분 나타난다. 다음의 사례 역시 그렇다.

여기[신림1동]를 왜 오려고 했냐면은, (봉천)4동에서 살면서 경동시장에서 더덕 같은 거, 도라지 같은 거 이런 거 새벽에 첫차로 와서 가지고 와요. 그거 까가지고 신림 저기 지하철에서 가서 팔면 장사, 식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그냥 가져오면 금방 나가고 금방 나가고 그렇더라고요. 오이도 소금에 절여가지고 금방 나가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로 왔는 거예요. (...) 새벽에 첫 차로 경동시장 가기도 가깝고 그래서. 경동시장에서 인자 배낭 있죠, 배낭 꼭대기까지 해서 짊어지고 오고 그랬어요. 꼬들배기 같은 거 사다가 김치 담아서도 팔고, 깻잎 같은 거, 마늘쫑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을 했어요. (사례 C)

2) 청년 거주자와 주민 정체성

반면 이 지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반)지하 거주자들, 특히 이 지역에서 일하거나 이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아직) 형성하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 주민이라는 정체성도 약하고, 이 지역에 대한 애착도 그리 강하지 않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비용 못지않게 해당 지역의 ‘입자’, 이 경우에는 ‘직주근접성’이 (반)지하로 이주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댄스]연습실이 방배동 쪽에 있어요. 제가 원래는 마포 쪽에서 활동했고, 건대 쪽에서도 배우러 가는 게 있었고, 어느 순간 주 지역이 방배가 됐어요. 제가 활동하는 게 좀 다양해요. 홍대 쪽 가기도 하고, 뭐 일 있으면 일산까지도 가기도 하고, 뮤비 찍을 때는 지방 쪽으로도 가고.

고3 때까지는 부모님이랑 수원에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사당까지 가는 데만 해도 근 1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동시간이 너무 길고. 또 만약 일산까지 간다면은 거의 한 2~3시간 넘게 걸리니까. 시간 문제랑. 또 교통비도 솔직히 수원에서 다니는 게 더 많이 들어요. 교통비가 거의 한 2~3배 가까이 드니까, 이거 빼면은 뭐. 제가 또 일이 막 겹치다 보면, 되게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1시간 왔다갔다 피곤해 가지고.

그것 땀에 여기[신림역 근처] 와서 잡게 된 거예요. 교통은, 제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는, 괜찮은 거 같아요 솔직히. (사례 J)

지방에서 원래 살고 있어서, 대학교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신림이 인제 원룸이 싸고 그러니까. 교통도 좋고, 싸고. 그리고 친구들이 다 신림동 살아요. (사례 H)

원래 신림동이 고시촌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따라 온 거 같아요. 거의 다 여기 살아요, 저희 학교 애들도. 한 10명? 학교에서 진짜 가까워요, 전철 타고 10분. (사례 I)

더 좋은 동네가 있으면 이사를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기밖에 좋은 데를 못 봤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고, 다른 데 이사 갈 마음도 없고, 웬만하면 일 구해도 여기 근처로 일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직장은 지하철 타고는 30분인데, 이제 지하철역까지 서로 거리가 20분씩 있으니까, 총 1시간 정도. 오목교거든요, 목동. (사례 G)

위에서 제시한 사례는 모두 (반)지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20대 1인 가구로, 이런 이들이 주거를 선택함에 있어 해당 지역의 도심접근성, 특히 직주근접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와도 일치하는 바다.

2005 인구주택총조사 「시·도 특성 항목 표본집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총 331만 가구 중 총 95만1천 가구(28.7%)가 ‘직장 및 취업’을 이유로 현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주근접성을 중시하는 것은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40대 이하 36.0%, 20대 46.5%), 주택의 점유형태가 자가 이외일수록(37.1%) 높게 나타났다(서울지방통계청, 2007). 아울러 수도권 가구통행 및 주거입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전·월세 거주 저소득층은 통근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주택구입 의사가 크게 떨어져 통근시간이 짧은 거주입지를 선호하였다(정일호 외, 2010). 또 서울시 종사자·거주취업자의 인구·가구구조에 따른 통행시간·거리 패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 2인 소형가구의, 전·월세의, 단독주택 및 2개 이하의 방에 거주하는, 임금 근로자의, 미혼·사별·이혼의, 고등학교 이하 저학력가구의 저소득 계층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통근시간이 짧은 거리에 거주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김문현, 2008).

서울과 수도권의 (반)지하 거주자 46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발견되는데, 경기 지역의 경우 해당 주거를 선택한 이유로 ‘가격이나 임대료가 싸서’를 든 비율이 55.4%인 데 반해, 서울 지역의 경우 이 비율은 21.9% 정도이고, ‘직장 및 학교와 가까워서’를 든 비율이 34.2%, ‘친척·친구집과 가까워서’를 든 비율이 19.7%로, 서울에 사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의 입지와 접근성이라는 장소성을 (반)지하 주거 선택의 주된 이유로 든 바 있다(대한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 2005c).

여기서 요점은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했거나 주민 정체성을 강하게 지니는 (반)지하 거주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해당 지역을 주된 생활 거점으로 삼지 않거나 주

민 정체성이 약한 (반)지하 거주자들의 경우에도, 이주와 정주의 선택에서 주거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장소성을 주되게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 상식적인 지적일 수 있지만, (반)지하 거주자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때문에 (반)지하로 밀려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이들로 간주하는 현재의 표상에서는 이 점이 집요하게 부차화된다.

물론 한국 사회 전반, 특히 대도시 주민들의 경우 비자발적 이주율이 높은 편이고, 이때 주거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지하 거주자가 경제적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주거비 압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집단 중 하나라는 점도 사실이다. 다만 이 점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다 보면, (반)지하 거주자 역시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 내렸으며, 심지어 주거환경의 악화를 감수하면서도 이 지역을 떠나려 하지 않는 ‘주민’이라는 점, 적어도 그 지역의 장소성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한 행위자라는 점을 시야에서 놓칠 수 있다.

그리고 사례 D이 말해주듯, 이런 장소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주거정책, “지하방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못 된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는 ‘지하방 퇴출 프로젝트’(『한국일보』 2011. 8. 16)는 실효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당동 무허가정착지에서 느꼈던 지역과 주민의 활력이 상계동 임대아파트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지적은 이 경우에도 유효하다(조은, 2012: 66~67). (반)지하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분명히 문제이고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전제는 (반)지하 거주자들의 주민 정체성, 또는 (반)지하 주거 선택을 규정하는 해당 지역의 장소성이라는 차원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장 결론

한국에서 (반)지하는 그 규모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는 (반)지하라는 주거형태 특유의 비가시성, 그리고 학문적 연구 이전에 (반)지하에 관한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최근에야 이루어진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반)지하 주거형태를 주거빈곤의 관점에서 문제화하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진행된 바 있다. 그리고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반)지하에 관한 최초의 공식 통계가 집계된 이후 관련 통계도 조금씩 축적되어 가고 있다. 아울러 2012년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서울신문』의 신춘문에 당선작이 모두 (반)지하를 배경이나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반)지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반)지하 주거형태의 형성 과정 및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름대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반)지하 및 거주자에 관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반)지하 거주자들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지하는 애초에 1970년대 들어 등장한 새로운 단독주택의 ‘보일러실’ 용도로, 그리고 1968년 이후 강화된 안보적 조치의 하나로 사회적으로 강제된 ‘대피소’ 용도로 출현하였다. 이처럼 본래는 비주거용이었던 (반)지하는, 단독주택이 ‘셋집’이라는 주거형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세대를 위한 형식의 주택’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전용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 기존의 자가주택 건설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임대주택건설 촉진의 일환으로 ‘다세대 거주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제도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반)지하는 공식적인 주거형태로 등장하였다. 그러던 와중 합동재개발 정책으로 저렴주택의 재고가 급격히 축소되고 ‘체제위기로 비화될 정도로 심각한 주택난이 벌어지자,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세대주택에 이어 ‘다가구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와 함께 (반)지하 역시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한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로

밝혀진 바, 2005년 현재 서울 총 가구의 무려 11%가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까지 서울 도시민민의 가장 중요한 거처였던 무허가정착지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때 (반)지하는 오늘날 도시민민들이 거주하는 가장 중요한 거처로 간주할 수 있으며, 최근 통계들에서 밝혀진 (반)지하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상태도 이런 추정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둘째, (반)지하에 관한 최초의 신문 보도가 나온 이래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문에 실린 (반)지하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반)지하에 관한 지배적 표상은 ‘열악한 주거’, ‘고립과 유폐, 절연의 공간, 그리고 ‘빈곤과 범죄가 만나는 위험한 공간’으로 요약되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인 바, 따라서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표상은 ‘낙인’의 성격을 강하게 띠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1990년을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표상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점으로 지목할 수 있는데, 이해 (반)지하에 관한 기사가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주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표상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 10여 년간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으며, (반)지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표상이 1990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서울에서 유례없는 수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집중되었던 2001년이 되어서였다. 2001년 이후에는 (반)지하가 지속적으로 문제화되어, (반)지하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 그리고 공식적인 통계가 등장하게 된다. 아울러 이른바 ‘88만원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세대의 주된 거처로 거론되는 이른바 ‘지옥’ (반지하·옥탑·고시원)의 하나로 (반)지하가 언급되고, 그와 상관적으로 최근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이 공간에 대한 문화적 형상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표상은 더욱 확대·확산되었는데, 이 역시 위에서 언급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이었다.

셋째, 이렇듯 (반)지하가 지닌 낙인적 성격은 (반)지하 거주자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여러 연구들이 밝힌 것처럼 주거 또는 단적으로 ‘집’(home)은 거주자들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반)지하라는 주거형태에 결부된 낙인은 그곳에 사는 거주자들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지하 거주자들이 이런 낙인을 그저 수동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반)지하 거주자들은 일찍이 고프만이 분석한 것처럼 낙인 또는 ‘손상된 정체성’(spoiled identity)에 대응하고 관리하며 재해석하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자존감과 개

인적 정체성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이 낙인을 자원으로 전환시키기도 한다. 심층면접을 통해 발견한 (반)지하 거주자들의 대응 전략은, '일시화 전략', '거리두기 전략', '신분위장 전략', '무시 전략', '노출 전략' 등 크게 5가지 정도로 나타났다. 이런 전략의 차이는 거주자가 현재 살고 있는 (반)지하의 주거환경, 기존의 주거 경험·이력, 그리고 서사적 자원 등에 따른 것이었다.

넷째, 본 연구가 조사대상으로 삼은 (반)지하 거주자들은 흔히 표상되듯 값싼 주거지를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유랑민'으로 환원할 수 없었다. 물론 그들이 (반)지하에 살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주거비 절감이라는 것, 그리고 대개 세입자 중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이들로서 (반)지하 거주자들이 '비자발적 이주의 압력'에 시달리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반)지하 거주자들은 해당 자치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주하였고, 이는 그들이 이주와 정주의 결정에서 '입지'와 '관계망'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떤 의미에서 (반)지하 거주자들은 (반)지하 특유의 열악한 생활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지역 특유의 입지와 관계망, 곧 모종의 '장소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게다가 (반)지하의 주거환경은 주택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반)지하 하면 흔히 떠올리는 채광과 습기, 그리고 수해 위험은 (반)지하라는 주거형태에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반)지하 거주자들이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설사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1980년대 이후 형성된 사회적 담론 안에서 (반)지하 주거형태가 획득한 '오명'으로 말미암아, (반)지하라는 주거형태는 대개의 거주자들에게 부정적으로 경험되었고, 이는 그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반)지하를 최선의 경우라도 '임시거처'로 의미화했다.

이렇듯 (반)지하에 거주하는 것은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때 유의할 것은, (반)지하 거주 경험에 고유한 이런 모순을 지워버리고, 이들이 지닌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 또는 해당 지역의 '장소성'에 대한 고려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반)지하의 문제에 접근하려면, 그 거주자들이 (반)지하라는 주거형태를 왜 '선택'했고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더 깊이 천착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반)지하에

관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할 때 신문 보도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신문 보도로 환원되지 않는 다른 사회적 표상의 차원, 가령 최근 (반)지하에 관한 표상을 활발하게 생산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시키고 있는 문학이나 영화 등을 분석하지 못한 것은 큰 한계다. 아울러 이런 표상들이 실제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전유되는지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는 (반)지하 거주자의 주거경험과 정체성 등을 연구하기 위해 질적 방법론을 택하였고, 10명의 (반)지하 거주자들을 인터뷰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는 이 10명의 거주자에 관한 결과이며, 더욱이 (반)지하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관악구로 지역을 통제하였다는 점에서 (반)지하 거주자 전반의 특성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반)지하 거주자들의 주민 정체성이었는데, 그렇다면 같은 (반)지하 거주자라 할지라도 가령 강남구의 (반)지하 거주자와 양천구의 (반)지하 거주자, 그리고 성남시의 (반)지하 거주자가 주거경험과 정체성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셋째,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반)지하 거주자 중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연령대는 40대다. 전통적으로 빈민 연구에서는 노년층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청년 실업'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면서 청년층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본래 연구를 시작할 때 40~50대 응답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1명밖에 응답자를 구하지 못했다. 물론 질적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는 있겠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40~50대의 주거경험과 정체성을 좀 더 조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KINDS 기사검색(1990년 1월 1일 이후 10개 전국종합일간신문(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아시아투데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1920년~1999년 사이 4개 전국종합일간신문(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

국토해양부. 2011a.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

국토해양부. 2011b. 『2011년도 주택업무편람』 .

서울지방통계청. 2007. 「2005 인구주택총조사 시·도 특성 항목 표본집계 결과」 .

서울특별시. 2012. 『제52회 서울통계연보』 .

통계청. 2006. 『2005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

국내문헌

강희달·이경희. 1988. 「지하층 주거공간의 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학술연구발표논문집』 제8권 제2호.

관악구청. 1996. 『관악 20년사: 1976-1996』 .

관악정책연구소 오늘. 2010.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생활실태와 개선 방안』 .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0. 『어디 사세요? - 부동산에 저당 잡힌 우리 시대 집 이야기』 . 사계절.

고프만. 2009. 『스티그마 - 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 . 한신대학교출판부.

국가인권위원회. 200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 한스미디어.

김영표 외. 2008. 『상전벽해 국토 60년 : 정책편』 .

김경준. 2010. 「사회적 스티그마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과 대응」 . 『한국청소년연

구』 Vol. 21. No. 3.

김광중 외. 1994. 『일반주택지역정비모델개발』 .

김문현. 2008. 『서울시 주거환경실태와 주택정책방향 연구 - 자치구별 인구가구구조와 주거환경 변화분석을 중심으로』 .

김미월. 2010. 『여덟 번째 방』 . 민음사.

김민희. 2009. 「주거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한국복지패널에서 활용한 최저주거기준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현. 1996.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수현·박세훈. 1996. 「재개발구역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의 평가」 . 『도시와빈곤』 20호. 한국도시연구소.

김수현·이현주·손병돈. 2009. 『한국의 가난 - 새로운 빈곤, 오래된 과제』 . 한울아카데미.

김윤승. 2012. 「주거빈곤이 노인의 건강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미·서정화. 2006. 「거리노숙인의 유대 형성에 대한 문화기술지 - 삭막한 세계의 동맹자 만들기」 .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3호.

김태섭 외. 2011. 『저층주거지 거주자의 주택수요 특성 분석』 .

김태현. 2008. 『서울시내 주거이동의 사·공간적 특성』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형국 편저. 1989. 『불량촌과 재개발』 . 나남.

남원석. 2002. 「지하셋방 거주와 건강」 , 『도시와빈곤』 , 제55호.

남원석. 2003.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 『도시와빈곤』 , 제62호.

남원석. 2006a. 「주거와 빈곤 - 주거빈곤의 실태와 원인」 .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한국사회의 신빈곤』 , 한울아카데미.

남원석. 2006b. 「판자촌에서 쪽방까지 - 우리나라 빈곤층 주거지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연구』 , vol. 29.

남원석. 2009. 「자가소유 촉진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 『한국주택학회 학술대

회 발표논문집』 Vol.2009 No.3.

네틀턴, 사라. 1997.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한올아카데미.

대한주택공사. 2000. 『주거빈곤가구의 실태와 최저주거기준 달성방안』

대한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 2005a. 『주거빈곤가구의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1 -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대한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 2005b. 『주거빈곤가구의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2 - 쪽방 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

대한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 2005c. 『주거빈곤가구의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3 - 지하주거공간의 주거환경과 거주민 실태에 관한 연구』 .

매년, 밴. 1994. 『체험 연구』. 동녘.

밀즈, 사라. 2001. 『담론』. 인간사랑.

박경숙·김남줄·손태홍·장세훈·허미영·이진석·나금실·한상진·원숙경·박병철. 2006. 『삶의 기회』. 동아대학교 출판부.

박신영. 2011. 「주거빈곤」. 『2011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은철·이주현. 2009.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 .

박은철. 2011. 『서울형 주택마우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

발리바르, 에티엔. 2011. 『정치체에 대한 권리』. 후마니타스.

서종균. 1997. 「영구임대주택, 분리와 배제의 공간」. 『도시와빈곤』 29호. 한국도시연구소.

손낙구. 2008. 『부동산 계급사회』, 후마니타스.

손낙구. 2010. 『대한민국 정치 사회 지도 : 수도권편』, 후마니타스.

손세관. 2001. 「서울 20세기 주거환경의 변천」,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2002. 『난곡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재개발에 따른 주민이주에 관한 조사』 .

신명호 외. 2004.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영. 2010. 『서울의 준주택 실태와 정책방향』 .

심승희. 2004. 『서울 시간을 기억하는 공간』. 나노미디어.

- 양재섭·김상일. 2007. 『서울 대도시권의 주거 이동 패턴과 이동 가구 특성』 .
윤일성. 2002. 『도시개발과 도시불평등』 . 한울아카데미.
이영환. 1995. 『영구임대주택의 정책결정과정』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희영. 2011. 「텍스트의 세계 해석과 비판사회과학적 함의: 구술자료의 채록에서 텍스트의 해석으로」 . 『경제와사회』 제91호.
임서환. 1995. 「주거빈곤: 의미, 발생과정, 대책으로서의 운동」 . 『도시와빈곤』 14호. 한국도시연구소.
임은선 외. 2009.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저소득층의 이주패턴 및 정착방안 연구』 .
임창복. 1988. 「한국 도시단독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4권 2호 통권 16호.
임창복. 1989. 『한국 도시 단독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임창복. 2011.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 돌베개.
장세훈. 1987. 「도시무허가 정착지 철거정비 정책에 관한 일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세훈. 2000. 「외환위기 이전 도시빈곤의 추이와 특성」 . 『IMF 이후 한국의 빈곤』 . 나남.
장세훈. 2005. 「한국 사회에 ‘신빈곤’은 존재하는가?」 .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한국사회의 신빈곤』 , 한울아카데미.
장세훈. 2006. 「빈곤층의 내부 구성과 빈곤화 과정」 . 『경제와사회』 제71호.
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욱. 2008. 『한국 주거의 사회사』 , 돌베개.
전남일·양세화·홍형욱. 2009. 『한국 주거의 미시사』 , 돌베개.
전남일. 2010. 『한국 주거의 공간사』 . 돌베개.
정근식. 2012. 「노숙인 담론과 제도의 역사적 변동」 . 구인회·정근식·신명호 편저. 『한국의 노숙인』 . 서울대출판문화원.
정민우. 2011. 『자기만의 방』 , 이매진.
정연우. 2010. 「무허가 주거지의 성격과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 송파구 개미 마을의 사례」 . 『한국문화인류학』 43-3.
정윤희 외. 2010.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정일호 외. 2010.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 방안 - 수도권 가구통행 및 주거입지 분석을 중심으로』.

조문영. 2001. 「'가난의 문화' 만들기: 빈민지역에서 가난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은·조옥라. 1992.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서울대학교 출판부.

조은. 2012. 『사당동 더하기 25 -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또하나의문화.

최예륜. 2008.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 월간 『사회운동』 84호. 사회운동.

최원규. 1989. 「도시빈민의 형성 과정 - 노동자 계급의 빈민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14호.

페어클럽. 2011. 『언어와 권력 : 담화 텍스트·화용 연구』. 경진.

한국도시연구소. 1995. 『한국사회 변화와 빈곤구조』.

한국도시연구소. 1996. 「빈곤구조 전문워크샵」. 『도시와 빈곤』 23호.

한국도시연구소. 2006. 『한국 사회의 신빈곤』. 한울아카데미.

하성규. 1995. 「도시서민 주거불안정의 구조적 요인과 그 대책」. 『도시연구』 창간호. 한국도시연구소.

허석렬. 1982. 「도시무허가 정착지의 고용구조에 관한 일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호네트, 악셀. 1996. 『인정투쟁』. 동녘.

홍인욱. 1997. 『서울시 단독주택지역의 변화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홍인욱. 2002a. 「지하주거와 지하셋방」. 『도시와 빈곤』 통권 55호.

홍인욱. 2002b. 「지하셋방의 현황과 문제점」, <참여연대> 정기간행물(2002. 6).

홍인욱. 2002c. 「지하주거의 실태와 문제점」. 『도시연구』 통권 8호.

홍인욱. 2004. 「주거빈곤계층의 주거실태와 지원방안」, 『국토』 통권 270호.

국외 문헌

Arnold, Kathleen R. 2004. *Homelessness, citizenship, and identity: the uncanniness of late*

modern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tturson, K. and K. Jacobs. 2003, "A Critique of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and its Utility for Australian Social Housing Policy". 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Avritzer, Leonardo. 2010. "Democratizing urban policy in Brazil: participation and the right to the city". Gaventa, J. and Rosemary M. eds.. *Citizen Action and National Policy Reform: Making Change Happen (Claiming Citizenship: Rights, Participation, Accountability)*. Zed Books.

Bauman, Zygmunt. 2005. *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Open University Press.

Byrne, David. 1999. *Social Exclusion*. Open University Press.

Dittmar, H. 1992. *The Social Psychology of Material Possessions*. Harvester Wheatsheaf.

Fox, Lorna. 2007. *Conceptualising Home: Theories, Laws and Policies*. Hart Publishing.

Gussow, Zachary and Tracy, George S. 1968. "Status, Ideology, and Adaptation to Stigmatized Illness: A Study of Leprosy". *Human Organization*, Vol. 27, No. 4.

Gutierrez Rodraiguez, Encarnacion. 2010. *Migration, domestic work and affect : a decolonial approach on value and the feminization of labor*. Routledge.

Harvey, David. L and Reed, Michael. H. 1996. "The Culture of Poverty: An Ideological Analysis". *Sociological Perspectives*, Vol. 39 No. 4, pp.465~495.

Holston, James. 2008. *Insurgent Citizenship: Disjunctions of Democracy and Modernity in Brazi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Holston, James. 2009. "Insurgent Citizenship in an Era of Global Urban Peripheries", *City & Society*, Vol.21, Issue 2.

Holston, James. 2011. "Contesting privilege with right: the transformation of differentiated citizenship in Brazil". *Citizenship Studies*, 15:3-4, pp.335-352.

Hulse, Kath and Burke, Terry. 2000. "Social exclusion and the private rental sector: the experiences of three market liberal countries". *European Network for Housing Research Conference (ENHR 2000) 'Housing in the 21st Century'*, 26-30 June 2000, Gavle, Sweden, pp.1-19

Katz, Michael B. ed. 1993. *The "Underclass" debate : views from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Kemeny, Jim. 1995. *From public housing to the social market : rental policy strateg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Routledge.

Kusenbach, Margarethe. 2009. "Salvaging Decency: Mobile Home Residents' Strategies of Managing the Stigma of "Trailer" Living", *Qual Sociol* (2009) 32. pp.399 - 428.

Mobrand, E. 2008. "Struggle over unlicensed housing in Seoul, 1960-1980", *Urban Studies*, Vol.45 No.2. pp.367-389.

Norris, M. and Winston, N. 2012. "Home-ownership, housing regimes and income inequalities in Western Europe". Amsterdam, AIAS, *GINI Discussion Paper* 42.

Paugam, Serge. 2001. "Les formes contemporaines de la pauvreté et de l'exclusion en Europe". *Études rurales*, juillet-décembre, 159-160. pp.73-96.

Paugam, Serge. 2005. "Science et conscience de la pauvreté". *L'Économie politique*, no 26. pp. 66-79.

Paugam, Serge. 2008. "Les formes de la pauvreté en Europe". *Regards croisés sur l'économie*, no 4.

Pierson, John. 2010. *Tackling Social Exclusion*. Routledge.

Renault, Emmanuel. 2004. *L'expérience de l'injustice*, La Découverte,

Renault, Emmanuel. 2012. "Struggles of Justice: Political Discourses, Experiences, and Claims". Balibar, E., Mezzadra S., Samaddar R. eds. *The Borders of Justice*. Temple University Press.

Ruming et al., 2004. "Questioning the Rhetoric of Social Mix. Courteous Community or Hidden Hostility", *Australian Geographical Studies*, 42(2).

Simmel, Georg. 1965. "The Poor". *Social Problems*, Vol. 13, No. 2. pp.118-140.

Somerville, Peter. 1998. "Explanations of Social Exclusion: Where Does Housing Fit in?". *Housing Studies*, 13:6, 761-780.

United Nations. 2008. *Urban Population,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2007.

Wacquant, Loïc J.D. 1993. "Urban Outcasts: Stigma and Division in the Black American Ghetto and the French Urban Peripher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17, Issue 3, pp.366~383.

Young, Iris Marion. 2000. 'House and Home: Feminist Variations on a Theme' in D
Olkowski (ed), *Resistance, Flight, Creation: Feminist Enactments of French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Representation of (Semi-) Basement Housing in Korea and the Identity of the Residents

Jinbum, Jang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ssive 'housing poverty' in Korea seems to have disappeared as the squatter settlements in Seoul have been demolished. However, the (semi-) basement flats are now receiving the public attention as the contemporary version of the housing poverty lately.

Until recently, however, researchers have rarely studied the (semi-) basement housing. The lack of academic interest is attributable to the invisibility unique to the residential mode. Nevertheless, some researchers have attempted to raise the issue of the (semi-) basement housing in the context of housing poverty since the 2000s as official statistical data have gradually cumulated and public attention has been growing.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formation of (semi-) basement housing and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by collecting scattered materials about that residential mode. Furthermore, this paper analyzes the social representation of the residential mode and their residents. These studies serve as a basis for the research on the identity of the resi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emi-) basement originally appeared in the form of a 'boiler- room' or an evacuation shelter of single-unit dwellings that began to be constructed in the 1970s. The space of (semi-) basement, which had originally been used for non-residential purposes, turned into a residential area as the single-unit homes began to accommodate multiple families on deposit-based lease contracts. In the 1980s, the Korean government institutionalized those single-unit multi-family dwellings as multi-family dwelling, and the (semi-) basement housing emerged as an official residential mode at that time. The

(semi-) basement housing expanded rapidly, during the 1990s and early 2000s to the extent that the form of housing accounts for eleven percent of the total households in Seoul in 2005. Today the (semi-) basement housing can be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housing for the urban poor.

Second, the public representation of (semi-) basement housing is mainly associated with the images of 'poor housing,' 'isolation,' 'confinement,' 'disaffiliation,' and 'the dangerous place where poverty meets criminality.' As such, the social representation of the dwellings in such a manner result in a 'stigma' for the tenants. A turning point in the social representation of the (semi-) basement housing was the year 1990, when the newspapers were suddenly swamped with the relevant news stories. However, the public attention had soon faded away and it bottomed up in 2001 when a big flood hit the houses. The (semi-) basement housing has continuously been regarded as a social problem since 2001. Various surveys, policies and statistics about the dwellings have emerged and the dwelling mode has recently been the subject of cultural works by young artists.

Third, the stigmatizing effect of the (semi-) basement housing heavily affects the identity of the residents. The stigma is attached to the residents so harshly that they even consider their homes as a symbol of their identity and social statuses in the society. Where people live significantly affects whom they consider themselves as,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Looking down upon one's home may thus be considered as an insult against his or her identity and community, symbolically challenging his or her place in society.

Fourth, the residents of the (semi-) basement housing cannot be reduced to the 'nomad,' who move here and there in search of cheaper housing. Of course, they are exposed to the pressure of rising housing costs and undergo the stress of 'forced mobility.' However, most of the residents of living in the (semi-) basement housing tend to move within the boundary of a certain district. They were found to take the 'location' and 'network' into consideration when making decisions on where they want to and live. Such considerations need to receive more attentions.

keywords: (semi-) basement housing, basement dwelling, housing poverty, multi-family dwelling, stigma, identity

Student Number: 2010-22982